

인권정보자료실
R1.1.15

인권아루소식

제1647호 ~ 제1768호

합본 15호
(2000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합본 15호

2000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제1727호-제1748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1일(수)

제 172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사람답게 배우고 일하고 싶다 중도실명 장애인들, 안마사협회 앞 농성

31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안마사협회 건물. 시각장애인들의 구호가 집, 썽과리, 마이크 소리와 어울려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전 내내 구호를 외치던 시각장애인들은 후련한 듯 가슴을 쓸어 내리며 점심시간을 맞는다. 지난 25일부터 농성중인 시각장애인들은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의 교육생들로, 사고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이른바 '중도실명자'들이다. 안마수련원은 이러한 중도실명자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70여 명의 교육생을 두고 있다.

이번 농성은 학생회장에 대한 징계에서 촉발됐다. 교육생 김용호(안마수련원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 학생대표) 씨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있던 시점에서 수업시간 중 학생회장과 교사간에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수련원측이 학생회장에 대한 일방적인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련원 이사의 발

언이 교육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학생측과 수련원측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문제의 발인은 "거지도 동냥을 하려면 머리를 조아리는데, 안마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지사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 교육생들은 이를 '인신모독'으로 받아들여 이사의 공개사과를 요청했지만, 수련원측은 '실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수련원측은 또 학생회장 징계는 교권확립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곰팡이 핀 지하실이 교육장

이처럼 사태의 발단은 양측의 감정대립이었지만, 문제가 확대되면서 수련원 내의 각종 문제점들도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선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 지하에 위치한 역삼동 안마수련원의 교육장은 계단참에서부터 곰팡이 냄새가 엄습한다. 김용호 대표는 "탁한 공기와 습기 때문에 각종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하 교육장의 출입구는 현관으로 연결된 계단이 유일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각장애인들로서는 대형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또 한가지는 맹아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수료조건. 이곳 교육생들은 2년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뒤, 안마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220일의 수업일수 중 40일 이상 결석하거나 과목당 6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수료가 유보된다. 반면 맹아학교의 경우, 70-80일의 결석일수를 인정해주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다.

김성곤 수련원 동문 대표는 "교육생

중에는 60세 이상도 있고, 뇌종양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수업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련원은 능력평가보다도 희망과 배려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장은 "안마도 일종의 의료행위이므로,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결석일수는 늘릴 수 있지만, 60점이라는 기준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시각장애인들과 수련원 측 모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창조)

"무한개발에 민중생존 무너져"

인권단체들, 새만금사업 반대성명

인권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좋은 벗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13개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발표,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갯벌을 훼손해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유종근 전북지사가 대통령에게 새만금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했고,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시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 사업은 "무한개발지상주의로 민중생존과 환경을 위협하며 발전의 주체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백여 환경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농성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에 돌입해 11월 17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농성단은 또 11월 2일 국회 앞에서 새만금 사업 규탄집회도 갖기로 했다. (심보선)

오늘 인권영화계 폐막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

◎ 사라바트만의 생애

: 오후 5시-5시55분

◎ 세계바라, 볼리비아 일기

: 오후 6시5분-7시40분

◎ 폐막식 및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상영

: 오후 7시40분-10시

법학관 405호

◎ 바람과 함께 오고간다

: 오후 5시-7시35분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10월)

흐름과 쟁점

1. 더 이상 뺏길 수 없다...서울의 반 신자유주의 투쟁

아셈 3차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자(10/19-20),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수탈과 삶의 질 저하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민간단체포럼으로 모인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비관적 개입'을 표방한 데 반해,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는 아셈 회의 자체의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상회의가 열리던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뱅뱅 사거리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오후 올림픽공원에서는 세 연대기가 공동주최한 집회에 1만5천여명이 참석했지만, 시애틀...프라하의 열기를 서울로 이어가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아셈 대화장 주변에 장갑차를 동원하는 등 아셈반대 시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혔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서 경찰의 폭력행사가 잇따랐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인권감시단'을 운영하며 대응했다.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의식...알몸수색 파문

경찰이 집회중이던 전교조 교사들을 연행한 뒤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벌였다(10/14).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내세워 알몸수색이 적법한 조치라고 강변했으나, 교사들이 마약사범 등 특별한 수색이 필요한 피의자가 아님에도 알몸수색을 벌인 것은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비난 여론에 밀렸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한편, 차수권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구치소로 송치되기에 앞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차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발뺌했지만, 담당감사에 의해 사실이 들뜬나기도 했다.

3. "모든 수법을 동원해 집회를 막아라"

경찰이 아셈 반대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대화장 인근의 기업과 건물주들에게 위장 집회신고를 사주한 데 이어,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청 앞에서 갖기로 한 집회도 '생활환경보호회'라는 정체 모를 단체의 사전집회신고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한편, 삼성과 현대그룹은 노동자들의 회사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데, 법원은 삼성SDI 울산공장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4. 말로는 '인권보장' 실상은 '노예노동'

정부·여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지금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살인용의자로 연행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구두발로 짓밟히는 등 가혹수사를 당했고(10/7),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부부는 경기도 가평의 농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10/28). 한편, 정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상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권시평

- 확산범 (이재승, 10/3)
- 오늘의 말말말...사라져야 할 말 (정주연, 10/10)
- 내 이름은 비정규직 (하종강, 10/17)
- 영화 한 편을 볼 권리 (정재숙, 10/24)
-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이재승, 10/24)

기고

-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김영옥 '평화와인권' 편집장, 10/11)
-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이윤주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집행국장, 10/28)

논평

- 두발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10/7)
-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10/14)
- 군의문사 유가족의 질규 의견발표(10/21)
-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10/28)

주요판결 / 공판

- "보안관찰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 (재판장 김석우), (10/20)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조수현 부장판사)

성명

-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에 부처(인권운동사랑방, 10/13)

인권간행물

-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 「21세기의 인권1,2」 (한국인권재단 엮음)

인권일지

1. 월곡동 재개발 철거용역, 사람은 건물에 포크레인 철거 시도(9/29)
2. 중고등학생들, '학교민주화 선언' 발표(9/30)
3.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경찰폭력근절 캠페인에 협박 글 폭주/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인권실천대회'(10/23)
4. 정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방침 밝혀(10/1)
5. 삼성그룹 해고자 2백여명,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규탄하며, '원직복직 결의대회' 개최(10/2)
6. 교육부, 두발기준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10/4)
7.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10/4)
8. 홍석천씨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발족(10/4)
9. 노동·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10/5) 26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 요구하는 법개정 청원(10/25)
10. 서울대생들, 행사부에 지문정보 폐기 요청(10/6)
11. 경북 탄광노조위원장, 노조활동 방해 비관 분신자살(10/9)
12. 공주영상정보대 이광만 교수, 시각장애 이유로 교수직에서 퇴출(10/10)
13. 경찰청, 정동부가 '사이버테러' 혐의로 고소한 온라인시위에 대해 "혐의 없다"고 발표(10/11)
14. 삼미특수강 해고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자전거로 국토순례(10/11-20)
15.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임명동의안 처리됨에 따라 활동 시작(10/12)
16. 베트남전 심포지움 좌절...서울시의회, '마찰' 핑계 장소 불허(10/13)
17.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10/13-)
18.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명예회복·보상' 공동신청(10/16)
19. 군산매춘업소 화재사건, 국가책임 주공 : 한국여성단체연합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 희생자 유가족들, 불법감금, 단속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20. 정부·여당,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통제 목적의 법안 세 개를 올 정 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10/17)
21. 노동부,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사실"로 확인(10/17)
22. 김문수 의원, 롯데호텔 사태에 공안기관 개입사실 폭로(10/19)
23.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 서울시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벌여(10/19)
24. 18년간 미군 유류저장기지로 사용됐던 인천 연수구 문학산 기슭 오염실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10/23)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롯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6.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이면엔 근로기준법 개악 우려(10/24)
27.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교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28. 계약직인 초중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미술교과 교섭타결(10/25)
29.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입법청원...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10/25)
30. 박정희 건립 계획의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켈기대회 열려(10/26)
31. 해외 반체제인사 소명절차 없이 귀국(10/29)

현장

- 철거촌 두 풍경...구리시 최첨마을, 인창마을(10/6)
- '절망의 공장'으로 변한 현대중공업(10/25, 26)

인터뷰

- 박하순(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10/13)
- 김유경(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민간포럼 탈퇴의 배경..."(10/13)
-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서울을 찾아온 까닭은..."(10/21)
- 이종희(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10/25)
- 사이트 케도(레바논, 인권영화제 초청감독) "이라크 경제봉쇄, 민중들 사경으로"(10/27)

국제기사

- 유린당한 프라하 평화시위(10/12)
- 팔레스타인 사태, "민간인 발포는 국제 인권기준 위반"(10/14)

토론회

-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방안'(10/6)
- 민주당 주최,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10/9)
-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 및 고용허가제 도입 대응투쟁을 위한 토론회(10/14)
-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10/18)

만화사랑방

- 거꾸로 가는 경찰 인권지수(10/6)
- 두발자유화에 대해(10/13)
-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10/20)

특집 / 해설

-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 다산인권(10/6) 주간울산인권소식(10/7) 제주인권지기(10/11) 평화와 인권(10/12)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 국제무역기구들(10/18)
-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10/1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무자비하게 폐기처분된 사람들” 올해의 인권영화상, <인간의 시간>에

제5회 인권영화제가 1일 폐막됐다. 폐막식에서 발표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에는 현대중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을 다룬 <인간의 시간>(연출: 태준식-노동자뉴스제작단)이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상금이 수여됐으며, 태준식 감독은 이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기금으로 내놓았다.

<인간의 시간>은 무엇을 말하려 했던 작품인가? 태준식 감독은 이 작품이 노동자뉴스제작단의 공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자 인터뷰에 응했다. (심보선)

◎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가?

=IMF체제 이후 2년간의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노조가 깨지고, 가담률은 위기론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못내는 숨겨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 결국 현대중기 조합원들이 보상금 1천1백만원 씩 받는 것으로 투쟁이 마무리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용가치가 없어진 상품이 무자비하게 폐기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그 상품이 노동력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 현대중기 노조원들의 근황은?

=올 봄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미처 구하기 전까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지금은 많은 조합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주 연락이 안 된다. 조합원들은 택시기사, 공공근로, 계약직 등으로 일하고 있다.

2000년 11월 2일(목)

제 172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육경원 조합원의 장지에 갔을 때엔 분노에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화면을 잡기가 힘들었다.

◎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반대'와 '인간의 얼굴을 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감독의 견해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찾자는 말로 이해하고 싶다. 노동자의 존엄성은 그럴싸한 구호로 찾아지는 게 아니다. 억압이 있을 때 투쟁해야만 인간은 존엄해 진다고 생각한다.

◎ 촬영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가?

=작업을 마치고, 작품에 나오는 김병화 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가장 힘들었다. 올해 7월 14일, 슬픔과 분노에 어쩔 줄 몰랐다. 묵묵히 투쟁에 앞장서고 성실하게만 사신 분을 누가 그렇게 절규하게 만들었는지...

99년 6월 24일 현대사옥 앞 노숙투쟁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경찰청이 '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국민인권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것이 지난 10월 23일. 그러나 경찰 수뇌부만의 법석이었을까? 일선 경찰의 모습은 아직도 '인권'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1일 새벽 1시경 성동경찰서 형사계 보호실에는 폭행 혐의로 연행된 피의자 아무개 씨가 유치되었다. 동네 사람과의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됐으며, 쌍방 해결을 보지 못해 경찰서로 이송된 피의자였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보호실 내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 묶인 채 '대기중'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수갑을 채웠다 풀어줬는데, 피의자가 다시 '수갑을 채워보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먼저 욕을 하나도 욕을 했을 뿐이며, 난동을 부린 적도 없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뒤에 규명한다 하더라도(당일 경찰과 피의자 간의 행동은 CCTV로 모두 촬영되어 있다), 이후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새벽 3시경 경찰서를 방문한 기사는 피의자와의 면회를 요청했다. 면회사유로 "피의자를 진정시키고 조사에 잘 협조하도록 설득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거듭되는 면회 요청을 계속 묵살하던 끝에 "지금은 조사대기중이니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이어 한다는 소리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면회가 안 되고, 조사 대기중이어서 면회가 안 된다"는 해괴한 원칙이었다.

경찰청은 앞서 '인권보호 다짐대회'에서도 "피의자의 검거·연행 때부터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다짐대회' 이전에도 술하게 발표된 바 있다.

곡절 끝에 면회는 허용됐다. 면회를 마칠 즈음 담당경찰관이 내뱉은 한마디.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있는 거다." 한심스런 일선 경찰관의 인권의식이 너무 적나라했다. (이창조)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노동계가 알몸수색 경찰관들의 징계와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된 민주노총 조합원 1백여 명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월 6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알몸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소장의 해임과 지휘책임자 중징계, 경찰청장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27일자 참조>.

집회 참석자들은 "차수련 위원장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입감자의 소지품을 내팽개치는 여자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기는 과도한 심경을 당했다"며 당국의 처사를 규탄했다.

이날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요청은 법무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장과 법무부장관 면담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명문)

● 정보생 ●

◎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
인터넷등급제를 통해 본 온라인과 표현의 자유

- 때 : 11월 11일(토) 오후 3시
- 곳 : 지하철 4호선 삼선교역 부근 삼우빌딩 304호 (02-3675-5363/02-741-5363)
- 모시는 이 : 장여경 (진보네트워킹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학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전태일열사 30주기 추모 및 기념주간 사업

- ◆ 전태일 30주기 학술심포지움
 - 11월 3일(금) 오후 1시30분 한글회관
 - 발제: 전태일열사의 활동과 정신 그리고 영향/70년대 이후 노동운동/ 소외된 노동자 실태와 운동양상
- ◆ 연극 '전태일'
 - 대구 : 11월 1일(수) 오후 7시 / 경북대 대강당
 - 서울 : 11월 9일(목)-10일(금) 오후 4시, 8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문의: 02-3672-4138)

◎ 롯데호텔 파업 관련자(업무방해 혐의 등) 공판

- 11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 피고: 장주억 노조위원장 김경중 부위원장(구속) 권순영 쟁의부장 조길성 체육부장(불구속)

<인터뷰> 김경아(인권영화제 기획)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영화제로”

◎ 제5회 인권영화제를 결산해 달라.

=지나해에 비교해 많은 관객이 찾아왔고, 작품마다 편차 없이 꾸준히 관객이 들었다. 인권영화제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권영화제의 고정관객이 있음을 확인했다. 자찬을 하자면, 예년에 비해 진행이나 배치, 부대행사 등의 측면에 있어 짜임새가 좋아졌다.

◎ 이번 영화제의 아쉬웠던 점을 말해달라.

=인권영화제가 여전히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잔치에 머물고 있다. 사실 인권영화제의 주인공은 소외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영화제', 소외된 분들을 모시는 자리로 못 만든 점이 아쉽다. 이는 앞으로 인권영화제가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여기엔 장소선택의 한계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등급의전용관이 설치될 때까지 어떠한 심의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를 따르지 않다 보니, 공연허가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대중상영관이나 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대학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

=상영시간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라든지, 개막식에서 <2000인권뉴스> 상영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관객들에게 죄송스럽다.

◎ 영화제 형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인권영화를 상영하는 형식(인권영화제)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일상적으로 대중과 인권영화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인권영화제가 '인권교육'의 취지에 부응하고 있는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권교육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다. 관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영화적 측면보다 인권이라는 측면에 대해 더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인권의 정서가 교류하고 있음을 느낀다.

◎ 인권영화제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인권영화제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큐 작가들이 많아졌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인권 다큐를 만드는 신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다.

◎ 다시 한번 상영했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면

=모든 영화가 다 한번의 상영으로 그치기엔 아쉬운 작품들이지만, <대지의 소금> <스코츠보로>와 같은 작품은 길이 길이 봐줬으면 한다. 관객들이 주로 <체계바라>로 몰린 측면이 있는데, 특히 <대지의 소금>을 보신 분들은 모두모두 즐겨워 하셨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3일(금)

제 172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정대철 민주당 인권특위 위원장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피감시기관인 법무부가 감시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설계하고 설립하겠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법무부가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발표, “인권위를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들고 이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의원입법안을 확정하겠다는 정 위원장의 일정 제시가 반드시 무리라

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인권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인권특위’를 총괄하고, 당 최고위원 자격을 가진 정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인권기구의 국가기구화 추진에 커다란 힘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권단체 법안 중심으로 가야”

한편, 정 위원장이 밝힌 의원입법 방침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에서 “입법과정과 입법내용에서 법무부를 배제하고 가기로 결정한 지금, 민주당 인권특위는 마땅히 인권단체들이 기초한 인권위법안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과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위상 부분을 폐기할 때, 법무부의 법안 가운데 남는 것은 모두 민간단체의 안에서 차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무부 안을 놓고 의원입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들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안은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만큼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인권위법안 심의소위 구성’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법무부, 여론 호도 총력

반면, 인권위원회의 민간기구화를 끝까지 관찰시키려는 법무부는 근거없는 홍보자료를 뿌려가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다수의 인권단체 전현직 원로들이 정부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홍보자료에 대해 인권기구 공대위는 “대다수의 전현직 원로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표명했는지” 등에 대해 공식질 의했으나, 법무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조)

시각장애인 농성 타결

〈속보〉 대한안마사협회(회장 권인희)가 안마수련원 소속 교육생(시각장애인)들에게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약속했다(관련기사 11월 1일자 참조).

학생대표와 권 회장 등은 2일 열린 협상에서 △지하에 위치한 강의실을 1층으로 옮길 것 △수료기준의 완화 △물의를 빚은 학술분과 이사진의 개편에 합의했다. 또 교육생들은 협회측의 징계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창조)



만화사랑방

이동수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나 실제 판단 근거

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판단”이라며 “이 판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길)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

한해 1백명 이상 자살로 보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해 2백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하고 그 중 약 1백명이 자살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사건 축소 의혹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군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수사관들에 대한 사망사고 처리교육의 강화 및 지침·규정 마련 △초기 현장과 수사상황을 끊기지 않고 완전히 담은 비디오 촬영 의무화 △사망사고 전담반 운용 △수사결과 발표 후 수사기록의 공개 △검찰관의 실질적인 수사지휘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창조)

◎ 송영길 의원이 제시한 자료

1) 자살 예단과 형식적 수사
99년 11월 13일 사망한 이 아무개 일병 사건 : 수사관이 유가족에게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에 유가족들이 장례에 동의한. 이후 군 수사관이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이 있다며 도장을 빌려가자, 이를 이상히 여긴 유가족이 쫓아가 자살 처리했다는 사망확인조서가 이미 11월 14일자로 작성된 사실 발견.

2) 기본적인 초동수사 미흡
99년 9월 13일 사망한 이 아무개 하사 사건 : 초기 현장사건에 사체의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사체를 만졌다는 진술을 계속 반복. 또한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꽂이는 수집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1, 2, 3차에 걸친 현장재연시 진술이 다르고 모순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결론.

구분	노동부 해석	민변 반박
출퇴근 통제 여부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음	매일 아침 9:30분까지 영업소로 출근해 소장의 지시를 받고, 결근시 수당에서 제하는 등 ‘근태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짐
활동 구역 통제 여부	활동구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음	보험모집인은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등을 담은 일일활동계획을 작성하고, 업무를 마친 뒤 영업소에 돌아와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근무장소에 대해 통제를 받음
실제 업무 수행 감독	보험모집·수금업무에 대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 수행	신계약 등에 대해 회사의 직접 지시를 받고, 모집 업무 자체가 회사가 개발·지정한 보험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며, 판매기법 등에 관해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받음
급여의 성격과 제재 조치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생활하며, 실적 미달시 수당 감소·해촉 이외의 별도 징계조치가 없음	‘최근 수개월간 업적 불량자, 표준활동불이행자는 ‘강격’, ‘부실가동자 표준활동기준 장기간 불이행자, 기타 소속 점포장 지시 불응자는 ‘해촉’ 등 실적에 따른 수당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가 수행됨
겸업 등 회사에 종속성 여부	겸업이 가능하여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규에 ‘겸업 금지, 전직동의를 작성을 통한 동종보험회사 취업금지’등을 규정, 겸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출퇴근의무, 퇴근시 영업소 귀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겸업 봉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4일(토)

제 173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여긴 사람사는 곳이 아네요”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지난 1일 새벽 화재사고로 한 노인이 죽고 방 30여 개가 타 버렸다. 불이 난 곳은 서울 영등포의 이른바 ‘쪽방’ 지역.

쪽방은 단 한 명 정도가 누워 잘 수 있는 작은 방으로 기술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잠사나 구걸로 하루 5천원 방값을 마련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곳이다.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옆 좁다란 골목을 따라가면 '24시간 청소년통제구역'이란 붉은 표지판이 행인을 맞이하는데, 이 지역에만 쪽방 8백여 개가 밀집해 있다.

3일 오전, 골목 안쪽 불길기 지나간 자리는 새까맣게 탄 채 열기설기 방이 있었던 흔적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바람이 별로 없었던 게 다행이지유.” 한 아줌마가 던지고 간 말처럼, 화재사고가 나던 날 바람마저 없었으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났을지 모르겠다. 쪽방들이 다다다다 불어오는 데다 대부분 관자로 만들어져 있어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기도 어렵고 순식간에 옮겨 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쪽방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그 중엔 장애인도 다수 있어 불이 날 경우 좁은 골목을 빠져 나와 대피하기란 쉽지 않다.

소방서에서는 쪽방 지역에 소화기도 비치해 놓고 교육도 시켰다고 하나 지역주민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세를 든 사람이건 준 사람이건 모두가난하다 보니 화재 후 뒤처리도 가능할 길이 없다. “75살 먹도록 이런 일이 처음인데...” 자신이 세준 방에서 불씨가 번지기 시작한 터라 복구해줄 일이 큰 일이라는 김남심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또 타버린 30개의 방 중 한 곳에 등지를 들고 살던 민영두 씨는 “오늘도 길에서 자야겠다”며 한숨을 내쉰다.

이곳에 쪽방이 들어선지 5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처럼 한번 씩 문제가

터져도 미봉책만 제시될 뿐 열악한 주거환경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이 이곳 주민들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에 노숙자 주간편의시설인 ‘햇살보금자리’의 이기욱 간사는 “이번 화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쪽방 지역을 계속 방치하는 한 언제든 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주영)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를 앞두고, 이미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다익 잡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지역주민에 의한 개발도,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도 아니며, 결국 주민생존의 박탈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새만금 개발은 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이른바 ‘호남푸대집’ 정서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에서 비롯됐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시화호의 3배에 달하는 바다와 갯벌을 메워버리기 위해 이미 1조1천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투입될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실은 정치적 ‘표 계산’ 속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다.

출발이냐 그렇지 않더라도, 과연 이 거대개발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농림부는 넓어진 국토만큼 농업생산량이 증가해 식량 자급도를 높일 것이라며 간척사업의 ‘대의’를 역설해 왔고 전라북도도 새만금 사업만 하면 전북이 발전한다는 논리로 도민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이미 백합·동죽 등 주요 어패류의 어획고를 1/10 수준으로 떨어뜨려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산·옥구·김제·부안 지역의 어민들은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새만금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건설자본 뿐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세력들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갯벌 보존타령’이라 일축해버리고 새만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발지상주의의 유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겐 민주적 의사수렴조차 성가실 뿐이다.

한국정부도 참여했던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물질 중심의 개발전략에서부터 인간 안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의 개발’ 전략을 세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 게 현명한 처사”

2만8천 헥타어의 논과 1만2천 헥타어의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에 33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는다. 1년에 3만 헥타어씩 없어지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호남 푸대집론을 불식하기 위해 정치 공약으로 나온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형적인 ‘무작정 개발’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와 담수호를, 유종근 전북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체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10월 유종근 전북지사가 실도했듯,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토론을 벌이기 위한 자리는 없었다.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장(단장 이상은)은 내부의 의견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지난 8월 국무총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단장은 ‘사업추진 계속’이라는 개인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관공동조사결과가 제대로 평가될 분위기도 사라진 것이다. 또 전북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을 동원해 할당식 새만금 사업 찬성 서명을 받고 있어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징후까지 보인다.

농업기반공사도 흠뻑이지를 통해 새만금 사업은 △4천억원이 넘는 보상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고 △방조제를 그대로 둘 경우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며 △농지 확보 등의 이유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문만식 교육부장은 “1조1천억원이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단정했다. 문 부장은 또 “새만금 사업 중지만 결정하면 방조제 처리방법은 다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며, “방조제 처리문제보다 우선 사업중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

람들’의 신행록 위원장은 “도둑이 담을 넘어 가다가 들켰는데도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인간을 도외시한 시혜식 개발논리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문만식 부장은 “인간이 도외시된 편익적인 개발논리, 종합적인 안목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모든 정치인에게 우려있는 무기였다”고 강조했다. 즉, “유종근 전북지사는 복합산업단지를 내세워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유포했고, 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으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해마다 줄어드는 농지를 확보한다는 일견 그럴듯한 논리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이미 지어 놓은 방조제는 어떡할 거냐?”고 위협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편 2백여 환경·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농성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조계사에서 밤샘농성 중이며 사회원로 등 각계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 곧 성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심보선)

매항리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 ‘매항리 범대위’ 기자회견

‘매항리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의 문정현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후 2시30분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항리 투쟁 및 소파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범대위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상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국방부의 매항리 대책 발표 후에도 불안한 현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집회

가 열리며, 오후 3시부터는 ‘자유인 신 in Korea’상 건립식 및 민족장승제 행사가 열린다. (심대섭)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3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정호 신부, 외노협)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 등,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여한 점, 인력 송출과 사후 관리업무를 사용자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송출비리를 막을 정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한 단계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정부의 안은 “곳곳에 독소조항을 넣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단기 로테이션 조항, ‘도망치면 혼난다 안돌아오면 죽는다’ 수준을 넘지 못한 입국 전후 교육, 사업장 이동 제한 등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 하에서 이권을 챙기던 중기협외로비에 밀려 지금의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 박석운 운영지도위원은 “사후 관리업체는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4천원을 챙기고, 중기협은 인력 송출과 관련해 약 1백억대의 이권을 챙겨왔다”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대국민 캠페인 전개, 입법청원과 동시에 여야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광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건설노동자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정부의 퇴출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11·3 퇴출 명단에 오른 건설회사는 모두 11개. 이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이 집계대상으로 삼은 7개 사에서만 1만8천8백여 명의 본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무려 18만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수십만 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1·3 퇴출 결정에 대한 건설연맹측의 요구는 '퇴출노동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아니라 △퇴출 발표의 취소 △법정관리 대상에 대한 자금 지원 △건설업에 대한 공적자금 10조원 투입이다.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건설연맹은 "건설업계의 부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연맹에 따르면,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가 건설산업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고 그 결과, 100대 건설회사 중 40%가 법정관리 등에 처해졌으며, 50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4년째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연맹은 "정부가 건

설 저성장 기조를 유지시킨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해 외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라는 IMF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기 재판’ 안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퇴출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상 퇴출 이후의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선전차장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거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으며, 직업적 특성상 재취업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출 실직자 채용장려금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건설경기 침체와 연쇄도산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최명선 차장은 98년 현대중기 등에 대한 1차 퇴출 때를 지적했다. "퇴출된 현대중기 노동자들은 훨씬 악화된 고용조건에서 취업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반면, 사장과 전무는 지금도 다른 회사의 사장과 전무로 일하고 있다"며 "결국 개혁을 명분으로 퇴출을 결정하지만, 실제 고통을 전담하는 건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된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최명선 차장은 "사실 난감한 문제"라며 "현대 경영진이 당연히 회생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스란히 박탈하는 퇴출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연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최초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총파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전과 달리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조직이 있고, 지난 4년간 쌓여온 분노가 폭발할 대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창조)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착수립용 조사”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해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및 ‘주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학력과 출생지, 직업 등 조사항목이 매우 광범위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다.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조사를 진행하는 통계청은 이번 조사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정책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정 아무개 씨는 "인구 조사에 그 많은 항목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어 조사원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원의 수가 무려 14만명에 달하고, 조사자료가 5년간 보관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간파될 수 없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윤명준 사무관은 "학력 파악은 21세기 지식사회와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출생지 파악은 북한 출신자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북5도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관은 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할 경우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지금껏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조)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몇년 전 모 노조에서 그 노조 조합원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 노조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결사 저지했다. 과거 필자가 일했던 모 단체에서도 활동가들의 고충을 나누는 평간사협의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운동공간에서 위아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업도 아닌데 왜 적대적인 분위기의 조직을 결성하려 하느냐 등의 말들이 설왕설래하였다. 다행히도(?) 이곳에서는 적극적인 방해공작은 없었다. 그러나 그다 달가와 하지 않는 정서가 확연히 드러났다. 최근에는 어떤 노동운동 관련단체에서 활동가가 그 단체가 입장을 달리하는(정확히 말하면 그 단체의 장이 입장을 달리하는) 타단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 활동가의 활동을 그만두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반사회의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도 도대체 믿기지 않는 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운동권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울초에 한 운동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동티모르 해방투쟁에 앞장섰던 한 운동가에게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해방된 동티모르에서 권력을 갖지 않는가?"라고 묻자 "권력을 향해 싸운 자가 권력을 가장 많이 닦는다. 나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 사회운동이야말로 폭압적이고 권위적인 권력과 싸워온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쟁이 힘과 힘의 대결로 되는 과정에서 운동사회는 힘의 논리를 깊숙이 내면화한 면이 있다. 또한 운동진영은 '운동=도덕적'이라는 신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자신들과 운동의 도덕성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들이 범할 수도 있는 오류에는 관대하고 성찰과 반성을 등한시 해왔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운동권을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운동권은 노동의 소외는 말하면서 정작 운동가의 운동에서의 소외는 말하지 않는다. '인권'이란 말은 곳곳에 등장하지만 운동가의 인권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최근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에서 직위를 이용한 연구원에 대한 정치탄압이 자행되었지만 운동사회에서 이슈화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여성문제를 여성만이 말해왔던 것처럼 이 문제가 여성문제와 교묘히 얽혀있는 데다 운동사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늘상 은폐되어온 관행에 의해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은 '멈추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운동사회 내부의 멈춤을 바꾸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 듯하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운동권의 운동철학이 자신들을 향해 겨누어질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안을 향한 투쟁! 이것이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 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1. **신종 노동착취의 합법화**
노동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들의 노조설립 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내려 (10/30)

2. **반인권·반민주 인물을 기념할 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 철거 (11/5) / 국회 문화관광위 심재권(민), 박종웅, 정병국(한) 의원, "박정희 기념관은 여론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백지화 요구 (10/30)

3. **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2백여 환경·시민단체들, 조계사에서 밤샘농성 진행 (10/16-11/17) / 민변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금개발 반대성명 발표 (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11/1)

5. **북파공작원 '실체인정' 요구 집단행동**
북파공작원 모임인 설악산동지회 70여명, 북파공작원 실체인정과 명예회복 등 요구하며 정보사 앞에서 전경과 격렬한 몸싸움 벌여 (11/2)

6. **'품위'에 짓밟힌 '인권'**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이종걸 의원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나온 홍석천 씨에 대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의 참고인 진술 거부 (11/3)

7. **화재예방 사각지대, 영등포 쪽방지역**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발생으로 노인 한 명 불에 타 숨져. 이 지역 주거공간이 화재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11/1)

◎ 수치로 본 인권 ◎

■ **여경 74% 성희롱 피해**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원유철 의원(민주당), 여자경찰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그중 응답패설 21%, 희식감요 14%, 반말호칭 17.3%, 성적비하 발언 6.7%, 여성역할감조 7.8%, 희식에서 부적절한 행동감요 1.7%, 신체접촉 1.1%로 나타났다고 밝혀 (10/2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홍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박정희 홍상 철거’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과 당국의 반응이 히스테리에 가깝다. 여야 정당은 일제히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무려 57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철거 관련자들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적극 유포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7일자 사실을 통해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라며 거들고 나섰다.

이번 사건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검증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사적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민주당 박병석 대변인)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는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 정부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엄중

하게 다루기 바란다”(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 “법인을 색출하고 원상복구할 것”(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등이다.

그러나, 여야의 주장 어디에도 사태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즉,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선행”을 주장해온 여론을 무시해가며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강행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태도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철거과정의 불법성을 과장·확대하면서, 도리어 ‘박정희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념관 건립계획 철화가 우선”

7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용삼(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조지부장) 씨는 “후손들

이 ‘역사의 죄악이 자행될 때 우리는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공공기물을 보존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동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쿠데타 찬양 기념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홍상철거에 대한 지지 입장과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김상근, 김승훈 등)는 7일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의 동상철거는 정당하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기념관 건립에 지원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정부가 국민적 합의나 여론수렴 없이 2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정희 홍상 철거 사태의 책임은 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기념사업 국고지원 반대’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상임대표인 신영철 목사는 “정치권에서 정략적 목적으로 진실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참다못해 철거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관련자들을 강도상해죄로 몰고 가는 것은 독재시대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은 “기념관 설립은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절차나 원칙을 무시한 채 기념관 건립을 하려는 것은 년센스”라며 “여야가 본질은 제쳐두고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제포된 광태영 4월혁명회 회장과 7일 연행된 이종기 홍익대 민주동맹 사무국장, 자진출두한 김용삼, 방학진 씨 등은 영등포경찰서 강력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창조)

2000년 11월 8일(수)
제 17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소”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삼청교육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정말로 막막하다. 5공 시절 삼청교육 피해자인 정정웅(65)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국방위 국감 장소인 경남 창원 현대공공을 찾아갔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만나려던 그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결국 무산됐다.

정 씨에 따르면 그가 “국회의원 이동차량 3대를 막으려하자 회사 직원 수

명이 ‘회사 이미지 망친다’며 온 몸을 붙잡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국감 장소인 삼성테크원으로도 쫓아가 봤지만 결국 의원들의 차량만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정 씨는 지난 80년 형사들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 당한 후,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가정마저 파괴되고 지금은 홀로 경남 진해에 살고 있는 처지다.

☞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 1면에서 이어짐

이번 국제법정에는 유고와 르완다 전범재판 시 ‘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검사보’로 활동한 파트리샤 베세(아프리카계 미국인) 씨가 검사로 참여하고, 북한을 포함해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아시아 8개국의 검사단이 구성된다. 또한 판사단으로는 피에르 싸네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출신의 국제여성판사연합의 대표인 카르멘 마리아 아지베이 씨와 전 유고전범재판소 재판장으로 활동했던 가브리엘 켄 맥도널드 씨 등 전쟁범죄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의 권위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또, 가이 맥두걸(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씨 등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직접 증인으로 참가해 일본군 ‘위안소’의 존재유무와 일본의 천황제, 성 노예 범죄의 국가책임, 일본군대사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2000년 국제법정 한국위원회’의 신혜수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국제법정의 의미에 대해 “일본군 성 노예 사건을 국가에 의한 반인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본정부를 압박해 공식사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강제하며, 동경전범재판소에서 드러나지 않은 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법정 기간에 남·북은 기소장을 공동 작성해 일제시대 미청산 과제인 위안부 문제에 함께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등 각국의 민간단체들은 11월 22일 세계 곳곳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법정이 열리는 기간 세계 곳곳에서는 심포지움을 비롯하여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0 국제법정 한국 실행위원회는 모두 78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 문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고동실 간사)

<동경전범재판소란>

일제가 항복한 후 1946년부터 3년에 걸쳐 연합국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920여명의 일본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3천여 명을 유기형에 처했다. 그러나, A급 전범의 경우 쓰가모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7명만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점령과 학살, 식민지배의 최고책임자인 아키히토 천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공산권 국가들을 경계한 미국의 철저한 비호 아래 책임을 모면했으며 생체실험과 성 노예 범죄 등의 반인륜 범죄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기명문)

그는 89년부터 97년까지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투쟁위원회’를 통해 국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방부 등을 찾다니며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으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 씨는 “광주 사람도, 해직 공무원도 모두 보상을 받는 지금, 우리 삼청교육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나”며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해 어느 누구라도 우리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심태섭)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홍석천씨 증인채택도 안돼

국회가 홍석천(연기자) 씨의 증언을 결국 거부했다. 홍 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홍 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홍 씨의 증언계획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홍 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초 이종걸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당)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석천 씨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상임위 내에 “국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룬 선례가 없다”거나 “동성애 사안이 보건복지위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건제출을 포기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서면으로 관련 질의를 대신했다. 이종걸 의원실의 정철영 보좌관은 “현실의 벽이 매우 높은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9일(목)

제 17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성명 발표

홍석천 씨의 참고인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진부(민주당) 의원이 8일 “홍씨가 국회에 출석한다해도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kojinboo.co.kr/html/index.html>)에 올린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는 소수자가 자기 의사를 대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성명은 이날 오전 ‘동성애자 인권연대’(아래 동인련, 대표 입태훈) 등 13개 인권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발표됐다.

고 의원은 자신이 “동성애자는 정신치료의 대상”이라는 발언을 한 당사자로 알려진 데 대해,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공개질의를 한 13개 인권단체들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서구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성애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병으로 잘못 알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진부 의원실의 조원준 비서관은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고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홍석천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던 이종걸(민주당) 의원실은 8일 고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고진부 의원이 ‘동성애자는 정신치료 대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 보건복지위에 공개질의

앞서 동인련, 민변 등 13개 인권단체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 사태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저

버린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억압자세를 버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는 자세를 다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13개 인권단체들은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발언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보선)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살림터〉 송영현 대표

‘뱃’ ‘쇠찌르레기’ 등 북한 소설을 출간했던 출판사 〈살림터〉의 송영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일 국가정보원에 연행됐다.

부인 정창화 씨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30분 경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송영현 씨를 체포했으며, 북한원전 등 서적을 압수해 갔다. 정 씨는 “수사관들이 ‘그동안 이적표현물을 너무 많이 출간했고, 앞으로 계속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낼 것 같아 연행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송 씨를 연행한 사실에 비해, 이적표현물 혐의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살림터〉는 최근 ‘김정일의 통일전략’(저자 김명철)을 출판했으며, 저자인 김명철 씨는 재일동포로 알려져 있다. 송영현 대표는 94년에도 ‘내가 만난 북녘사람들’(저자 홍정자) 출판으로 인해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한편, 부인 정창화 씨는 “국정원에서 ‘이를 후에나 면회를 시켜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창조)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를 비롯한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 등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은 “인터넷등급제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등급제 관련 조항의 완전 삭제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폐지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정보통신 기반보호 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는 정통부와 민간영역에서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행정전산망 가동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통합법률의 제정’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성명 끝부분에서 “한나라당 정통위 위원 일동은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기관의 인터넷공간과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개입 시도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상희, 강재섭, 김진재, 최병렬, 김영춘, 김형오, 박원홍, 윤영탁, 원희룡 의원 등이다. (이창조)

홍상철거 지지성명 이어져

관련자들 구속영장 청구

박정희 홍상철거 사건과 관련, 8일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홍상 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치·사회단체들의 성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성명에서 “공공기물에 대한 침묵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행동이 더 정당하다”며 “홍상철거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발표, “이번 행동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 이전에 반민주 군부쿠데타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라며, 홍상철거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창조)

인권간행물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배경내 지음, 우리교육 펴냄, 2000, 179쪽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린 학생일 뿐이다. 그러나 어른들 말씀만 잘 들으면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학교폭력, 왕따, 방만한 성문화, 학교붕괴 등 그 슬픈 청소년문제의 해결책들도 모두 학교가 더 통제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경내 씨가 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이러한 상식에 도전하는 청소년 인권과 문화에 대한 보고서다. 1년 여에 걸쳐 30여 명의 아이들을 심층면접하면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이 책은 폭력, 일상화된 검열, 자의적인 압수수색, 언어폭력,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배제 등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와 질서 편집증에 사로잡힌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저당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원적 성찰을 요구한다.

“학교에서 약한 애 괴롭히는 애들 보면, 개네도 선생님한테 개 맞듯이 맞는 애들이거든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한테 분풀이하는 거죠 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승우의 말처럼, 학교의 일상을 인권의 원칙에 맞게 재조직하지 않는 한 폭력과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없고 결국 아이들도, 학교도, 우리 사회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가 내린 결론이다. 교문 앞에 멈춰선 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아이들의 삶과 만날 수 있도록 이 책이 하나의 다짐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근예)

삼청교육 피해 회복하라

피해자단체 성명발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모임인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 정치권에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8일 성명을 통해 “삼청학살극은 철저히 비공개된 첩첩산중 연병장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흑독한 인권유린 대학살극이었다”며 “광주민중화운동, 해지공직자 문제와 민주화운동, 의문사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도, 유독 삼청교육대 사건만 오늘날까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지난 10월 31일 삼청교육 피해자 정정웅 씨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한 수모를 지적하면서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 강삼재 국방위원’의 사과를 촉구했다(관련기사 11월 8일자). (이창조)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터넷등급제를 통해 본 온라인과 표현의 자유”

- 때 : 11월 11일(토) 오후 3시-6시
- 곳 : 지하철 4호선 삼선교역 7번 출구 삼우빌딩 304호(02-3675-5363)
- 모시는 이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화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참가비 : 2000원(문의: 배경내 02-3675-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10일(금)

제 17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증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대표의 부인 정창화 씨는 9일 오후 3시30분 경 열살이 안된 두 아들과 함께 국정원을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면회신청을 거부하며 국정원 수사관이 내놓은 핑계는 "수사를 하다보니 송 사장을 가족들과 만나게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정 씨는 "압수수색으로 증거물도 가져갔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수사관의 대답은 "그래도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이

었다. 국정원측은 정 씨에게 "이후에나 접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은 접견 시 수사관이 입회하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가족이 증거를 인멸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데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기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도 "국정원이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하기 위해 접견을 거부한 것"이라며 "적어도 가족들과의 접견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피의자의 접견권을 침해한 일은 최근에에도 빈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1일 민혁당 관련 혐의로 구속된 한용진 씨의 변호인 이상희 변호사에 대해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바 있다. (심태섭)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역 인권단체 진상발표

살인용의자로 체포된 이주노동자에게 경찰이 가혹수사를 벌였다는 인권단체들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관련기사 10월 19일자).

8일 수원지역 인권단체와 지역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의 폭행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수원남부경찰서 고등동과출소로 연행된 인도네시아인 이라완 씨는 "연행된 후 사복경찰에 파출소 지하실로 끌려가 무릎을 꿇린 채 구둣발로 머리를 채이고 그 과정에서 왼쪽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라완 씨를 지하실로 데리고 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라완 씨가 의경과 형사들이 보는 앞에서 파출소 벽면과 집기에 수 차례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파출소 벽면을 비롯해 책상, 의자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자해라고 주장한다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즉시 혈흔 채취를 위해 노력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실에는 직원 외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파출소 부소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라완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하실의 사물함 위치와 구조를 알고 있었던 점과 "파출소에서 난동이나 자해를 할 때 녹화한다는 CCTV를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의 일원인 다산인권센터 여론철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자체 내부에서 진상을 밝히고 담당 경찰의 해임 및 징계와 더불어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명보)

만화사랑방



이동수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11월 8일 오전, 불이 난 곳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공터에는 성큼 다가온 겨울날씨에도 열댓 명의 주민들이 어느 때처럼 줄지어 서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지난 1일의 화재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도심 속 가난의 섬,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 사건은 이들에게 한 순간 지나가는 폭풍우에 불과하다. 그들에겐 쪽방의 삶 자체가 근심거리이자 고통이기 때문이다(본지 11월 4일자 참조).

이들에겐 우선 끼니 걱정이 가장 크다. 쪽방 사람들은 막노동, 행상과 같은 불안정한 일을 하거나 그나마 일도 갖지 못한 도시의 최빈곤층이다. 더구나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끊긴 지 오래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가족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말이지"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윤수철(70)씨는 위장병, 고혈압에다 최근엔 팔까지 마비돼 수세미 장사를 나가지 못한다. 어느덧 매달 15만원인 방값이 백만원 넘게 밀렸다. 하지만 말소된 주민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본적지인 전남 보성까지 내려가는 것도, 갱신 비용 10만원도 윤 씨에게는 만만치 않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윤 씨 외에도 줄줄이 수십 명이다. 다리가 절단돼 일을 할 수 없는 장호순(43)씨는 부인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 것이다. 하지만 장 씨의 부인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4년째, 그는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해왔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예 의료보호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호증이 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된 경우 △병원에서마저

자신을 굶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우 등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주소 이전을 못해 이제껏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 원경관 씨는 2-3년 전부터 폐결핵을 앓기 시작해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 인근의 '요셉 의원'에서 간혹 무료진료를 받았지만, 먹는 것이나 주변 환경이 병을 극복하기엔 너무 열악했다. 결국 원 씨는 '술'에 의지해 고통을 달래고 있다.

쪽방의 주거환경 역시 인간다운 생활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공터에 서 있던 김창수 씨는 추운데 왜 나와 있느냐는 물음에, "불이 안 들어오는 냉방에 있느니 여기 있는 게 낫다"며 추위 속에 자느라 더 무거워진 몸을 목발에 의지한다. 또 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골목마다 매캐한 연탄 냄새는 쪽방 주민들이 연탄가스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있음을 말해준다.

화장실 문제도 골칫거리다. 건물마다 화장실이 없어 대부분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쪽방 8백20여 개에 공공화장실은 5개 뿐. 쪽방 거주자 중 많은 수가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은 아예 없다. 김귀호 씨는 "아침에 나가보면, 화장실 앞마다 대야섯 명이 줄을 서 있어. 그러니 한참을 기다릴 수밖에"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변변한 목욕시설이나 부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방의 크기도 1평이 채 안 돼,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 3.6평(정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겐 그래도 이곳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유일한 보금자리다. 그런데 이 공간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영등포구청이 쪽방

이용자들에 대한 아무런 주거대책 없이 쪽방 지역을 녹지로 바꿀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될 경우, 쪽방 이용자들은 최소한의 주거공간도 없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화재사건을 계기로 영등포 쪽방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노숙자주간편의시설을 운영하는 햇살보금자리,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건강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우선 주민등록 말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끼지 못한 이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쪽방 거주자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 녹지 조성을 추진할 경우, 대안적인 주거시설을 마련하도록 영등포 구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생활 편의시설 및 자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쪽방 상담소의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쪽방이 서울에만 3천5백개, 전국적으로 8천2백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곳에 터잡고 살아가는 4-5천여 명의 사람들은 '부랑인'이나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세상과 만나지 못한 채 곩되고 있다.

햇살보금자리의 이기욱 간사는 이렇게 말한다. "쪽방 사람들은 극도의 경쟁사회가 낳은 희생자다. 삶의 고단함에 몸마저 망가진 이들이 '폐인'으로 낙인찍고 내몰기보다는 냉혹한 경쟁논리를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이주영)

"그들을 폐인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냉혹한 경쟁논리를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노동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화형하고 자신을 불태워 산화한 지 30년이다. 청계천 다락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린 여공들이 각혈하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민중들을 깨어나게 했으며 새로운 운동의 지평을 열었다. '삼백만 근로자의 대표 전태일'은 죽었으나 전태일의 후예인 민중들의 투쟁에는 늘 그의 이름이 기려졌다.

'전태일' 그 뒤 30년. 노동자는 3백만 명에서 1천3백만 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도 있으며 법령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목록이 있다. 30년 전에 비하면 상전벽해와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민중

그러나 오늘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현실은 깊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껏 투쟁으로 쟁취했던 명목상의 권리마저 한순간에 날아가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칼날 앞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이름뿐인 사회안전망에서도 외면당해 가정이 해체되고 추운 겨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는 3차 노동법 개악이 준비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기계처럼 혹사당하고도 쥐꼬리만한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만 간다. 초국적 자본 앞에 백기를 든 정부는 그들의 무혈입성을 위해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

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비참한 노동현실의 한편에서는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빈곤의 나라에서 탈출시킨 근대화의 아버지로 칭송하며 그의 기념관을 짓고자 국민의 혈세를 들어부으려 하고 있다. 그의 흉상을 철거한 이들은 영어의 몸이 되었고 정치권은 보수우익의 단결을 외치고 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 경제성장의 신화는 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 세워진 허구였으며, 결국 박정희 식 개발독재 모델은 이 나라의 경제를 재벌위주경제와 종속경제의 틀로 정착시켰다. 오늘날의 이 고통은 실은 박정희가 임태한 천민자본주의에 그 근원이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 박정희는 보수세력의 한결같은 염원을 안고 무덤에서 나와 찬란하게 부활하려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약삭같이 삭감하면서도 개발독재자의 기념관을 짓는 일에는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작태가 '인권의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30년 전 전태일의 절규는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부익부빈익빈을 위해 무한경쟁에 내팽개쳐

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은 권리의 주체이며 당연한 인간이다. 또다시 퇴출과 실업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하나로 단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몰려있다. 아성을 지키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투쟁은 노동자의 목을 치는 비정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투쟁으로 인권을 찾을 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가들의 방만한 경영이 빚어낸 부실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거부해야 한다.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향했던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통근 단결과 연대를 실현할 때다. 노동자의 인권과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뿔을 나눠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리의 상태로 내모는 상대를 향해 투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일이 될 것이다. 어느 한 순간도 인권은 투쟁 없이 저항 없이 쟁취되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해야만 할 때다.

전태일 30주년 전국노동자대회

◎ 전야제

11월 11일 (토) 오후 7시 / 서울 장충단공원

◎ 본대회

11월 12일 (일) 오후 2시 / 서울 대학로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췌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 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 지침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윤영석 변호사는 "알몸수색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이 피의자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고 박 씨 등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연행돼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이들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낮 1시경 변호인 접견이 끝난 뒤, 다시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형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중략) 원고들이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통상적인 신체검사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에도 상, 하의를 벗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중략)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 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중략)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피고 이은오와 선정자 정성천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알몸수색을 당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25일자 등) (이창조)

식당노동자, 125일만의 승리

진주경상대에 정규직 고용승계

정규직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백25일간에 걸쳐 투쟁을 전개한 식당 노동자들이 마침내 승리를 얻어냈다.

진주경상대학교의 식당조리사 11명은 학교측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약속을 받고 10일부터 일터로 복귀했다.

이들은 원래 진주경상대 소속의 정규직원이었으나, 96년 식당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던 사립들이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학교측이 다시 식당을 직영하기로 했으나, 기존 노동자들에 대해 '시급 2천3백원에 3개월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투쟁에 나서게 됐다.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될 경우, 고용불안은 물론이며, 방학 중에는 아예 무급으로 휴직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

40-50대 여성들이인 중앙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방학중에는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으며, 9월 개강 후엔 학교 도서관 앞에서 '떡거리판매' 활동을 벌이며 정규직 채용을 요청해 왔다. 학교측은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버텼지만,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식당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식당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참여했던 전국여성노조 미산창원지부 김연숙 지부장은 "끝까지 가겠다는 언니들의 결의가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으며, 작게는 같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청소, 경비 노동자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큰 의의"라고 밝혔다.

오랜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식당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무료 떡국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나눴지만, 이미 식당에 고용되어 있는 계약직 동료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이창조)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인원 3천5백명의 감축과 임금 30%의 삭감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부도 처리된 대우자동차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제 임금이 체불돼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노동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도처리 했다’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데에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는 표정이다.

더욱이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동의서가 있으면 지원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갔겠느냐?”는 이종대 대우자동차 회장의 발언이 10일 사실로 확인되자, 노동자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정부와 채권단이 의도적으로 부도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것을 경연진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의 조건준 정책2국장은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를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조국장은 “4개월 제 상여금이나 임금을 못 받은 조합원들은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조를 짜서 아파트 공사장이나 월드컵경기장 건설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단체협상이 타결된 지 채 세 달도 안 돼 3천5백 명 인력감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한편 민주노총, 민교협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자동차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올바른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 대우노사가 함께 대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심보선)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해소송” 방침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호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소는 수용능력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들을 영등포구치소에 ‘보호외뢰’해 왔다.

목동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지휘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진상조사단의 여운철 변호사는 “경찰이 이라완 씨 등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이상희(변호사)

빅브라더에게 충성을 다하는 요원으로부터 지명수배자로 오해받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삼일전 밤 11시10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뻔한 미모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밤에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는 것이 어찌 불안하여 숨죽이고 있는데, 계속되는 초인종 소리와 ‘인구조사예요’라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겨우 문을 열어줬다. ‘인구조사 나왔어요’,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니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본관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 거지? 집에서 세는 나이를 알아 뭐하겠다는 거야? 내가 중학교를 중퇴했건, 졸업했건 왜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인가? 그건 교육청을 통해 통계를 낼 수도 있는데 말이지... 일단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사요원이 나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 내가 처음인가? 나도 이렇게 세상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어쩌랴?

인구조사가 필요하면 난 충분히 응할 자세였다. 하지만, 국가가 전반적인 통계를 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걸 ‘나’라는 존재와 결부해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통계라면 사전에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본 뒤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번 조사 내용은 전혀 그런 노력이 드러나지 않았다. 겨우 조사요원의 흥분을 가라앉힌 뒤, 우편으로 보낼 테니 다시 방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두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12시15분,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초인종이 울린다. 인구조사요원이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가주세요라는 말로 겨우 돌려보냈는데, 사건은 그 다음날 발생했다. 밤 11시20분,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조사요원이 대뜸 왜 조사내용을 동사무소에 갖다놓지 않았느냐, 아가씨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무슨 죄를 졌나, 도망다니느냐, 왜 그렇게 사냥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더라도 내가 내는 것인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명수배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불쾌했을 뿐 아니라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줬다는 것이다. 분명히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 사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인구조사조사 설문지 표지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됩니다’라고 이야기한 통계청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통계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자가 범죄인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14일(화)

제 17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정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정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정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정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정보위, 위원장 김성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정보법의 조항이 사회단체들의 주장처럼 자기 검열을 요구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검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검열을 감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인터넷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시통신 나무누리(사장 이재현)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권고하는 게시물들만 삭제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정보법이 개정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는 그냥 두고 애꿎은 피시통신 사업자들만 법 테두리 안에 묶어두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심태섭)

알몸수색 경찰 고소

전교조등 “반인권관행 근절” 촉구

시위 혐의로 연행된 후 알몸수색을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보건의로 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13일 경찰 지휘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상 흥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은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한 것은 행형법상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기회에 반인권적인 알몸수색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불법적인 알몸수색의 책임자 처벌과 경찰청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기명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본지 11월 9일자 ‘동성애자’ 기사와 관련,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사건경위와 관련한 반박문을 보내왔다(편집자주).

1. 사건경위

11월 3일 오후 3시경 이종걸 의원 보좌진과 홍석천 씨, 임태훈 동인연 대표가 국감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행정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이종걸 의원이 찾아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동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동성애는 정신치료대상자라는 의원도 있다”는 말을 했다. 당시 KBS와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기사가 배석하고 있었으며, 이종걸 의원의 설명을 옆에서 직접 들은 기자들이 이를 보도했다. ‘동성애자가 정신치료의 대상’이라는 발언과 관련, 발언자가 고진부 의원이라는 사실은 임태훈 대표가 비서관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2. 이종걸 의원과 고진부 의원에게 드리는 요구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에 반대하는사를 표명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홍석천 씨에게 국회 보건위 전체 명의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종걸 의원이나 고진부 의원의 개개인에 대한 성토보다는,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치권력 전체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 **마중강의 인권이야기**

대우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

대우자동차의 채권단이 대우자동차를 최종 부도처리하느냐 마느냐 따지고 있던 며칠동안 나는 충청도와 강원도를 계속 돌아다니느라고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 지방 방송국의 주파수를 찾아가며 뉴스를 틈틈이 들었는데,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과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거의 '중계방송' 수준이었다.

"채권단은 직원 3천5백명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인 4시30분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은 지났으나 금융감독원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7시30분까지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보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채권단은 내일 오전 은행 업무 개시 시간인 오전 8시 30분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노동조합 위원장은 '상황 변화가 있다면 오전 7시30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새벽 두 시경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채권단은 계속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기다리면서 오늘 낮 12시까지 최종 결정을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미뤄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채권단은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신중하게 인내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처신하고 있다는 투였다. 결국 대우자동차는 최종 부도처리됐고 그 '중계방송'을 들은 국민들은 그 책임이 온전하게 노동조합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언론도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동의서를 부도처리 여부의 유일한 잣대로 요구하는 채권단의 태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우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확보된 총 9천억원 규모의 자금 중에서 3천명이 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비 절감액은 불과 1천억원에 불과했음에도 그 1천억원 때문에 나머지 8천억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채권단의 판단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루 전까지 대우자동차 노사간에는 이미 인원 감축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던 상태였음에도 굳이 노동조합의 '백지위임장'을 요구한 채권단의 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개명한 문명국에 어떻게 이런 언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을까?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 받은 법원이 또 다시 노동조합에게 '항복선언'을 요구하는 '법원의 어리석은 선택'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1. 또다시 휘몰아치는 노동자죽이기
정부의 퇴출 결정으로 건설업계에서만 18만여명 실직 위기(11/3) 정부와 채권단, 대우자동차 최종부도 처리하면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부도책임 전가(11/8)...정부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서울 대학로에서 제13회 노동자대회 가져(11/12)

2. 무차별 알몸수색은 불법
서울지법 제17민사부, "흥기나 독극물 등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11/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과의 마찰 발생해(11/1-10)

4.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3개 인권단체,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관한 입장" 밝힐 것 요구(11/8)

5. 국정원, 북한소설 출판인 구속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연행돼(11/8) / 국정원, '수사상의 이유'라며 가족 접견도 이틀간 막아

6. 홍상철 거 "오호통쾌라"
박정희 홍상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 구속에 반대하는 각계 성명 이어져(11/6-10)

7. 125일만에 제자리 찾은 식당노동자들
정규직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25일만에 걸쳐 투쟁을 전개했던 진주경상대 식당조리사 11명, 학교측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약속을 받고 일터로 복귀(11/10)

8. 사건처리 호지부지, 대책만 요란
군산시 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관련해 구속 11명, 불구속 4명 등 15명 입건.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온 공무원유착 관련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수사종결(11/6)...경찰청, 한달 간 전국에 걸쳐 '노예매춘' 실태 파악하고 △매매춘업소 업주 등과 유착한 공무원 △쇠창살 따위로 여성을 가둔 채 매매춘을 강요한 업주 △인신매매 전문조직이나 불법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소들에 기생해 돈을 뜯어내는 폭력조직 등 관련자 검거 하겠다며 특별단속에 들어가(11/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15일(수)

제 17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 유료 온라인 게임인 엔씨(NC)소프트의 '리니지'는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나 선동적 의미로 인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열맹 이름' 및 캐릭터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이후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리니지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계정은 '북조선, 인민 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등의 이름'과 '모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름' 등이다.

가입 회원 7백만명, 동시 접속 이용자 10만명에 달하는 게임 리니지는 통신 공간에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캐릭터로 생활을 해나가는 역할 게임(Role-Playing Game)이다. 이런 종류의 게임에선 자신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은 상업적 목적 등이나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호칭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리니지 고객센터는 "이름"과 같은 계정은 그 자체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운영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계정 삭제조치는 이용자 약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담패설·욕설 등이 사용된 호칭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계정을 제공하는 넥슨이나 이소소프트 관계자들은 "비·속어를 쓰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존재

한·미·베트남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외, 아래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1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의혹과 증언으로만 제기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의 각종 수사보고서와 20여 장의 흑백사진 등이 포함된 이들 자료는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돼 오다 지난 6월 기밀해제된 것으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자료를 입수했다. 진실위원회는 또 "지금 공개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 말고도 현재 미국에서 추가로 문서를 확보했으며 정리하는 대로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자료에는 지난 1968년 2월 12일 쿠안남성 디엔반현 풍니마을(희생자 69명) 등 3건의 민간인 학살의혹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68년 6월 당시 주베트남 한국군 체명신 소장은 미군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의 잔학행위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미국측 보고서는 이를 일축하고 해당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계정은 제재를 하지만 '김일성' 같은 계정까지 강제 삭제하지는 않는다"는 자사 운영 방침을 밝혔다.

리니지 이용자 홍준용(20·동국대 법학과 2년) 씨는 "사회에선 국보법을 '없애라, 만다'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반국가 문운하며 게임에까지 사상검증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심태섭)

부대를 중대단위까지 특정해 거명하며 '한국군 병사들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1969년 4월 푸옥마이 마을 학살사건은 당시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 한·미·베트남 3자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푸옥마이 마을 사건에 대한 3자 공동조사문서의 존재는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음을 인정하는 최초의 문서로 주목된다.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해서는 한국군 당사자, 베트남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한국법정에서 개인의 책임문제가 다루지면서 간접적으로만 다루어져왔다.

베트남 진실위원회 한홍구(성공회대학교수) 집행위원은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의 상당수는 미군의 폭격이나 학살로 생긴 것"이라며, "오늘 공개한 문서가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주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한 집행위원은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자"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2면> (심보선)

〈인터뷰〉 한흥구 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진실규명만이 참전군인 명예회복”

한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문서가 공개됐다. 한흥구 집행위원으로부터 문서공개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광길)

○ 오늘 공개된 문서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 1968년 2월 12일 풍니·풍넷 마을에서 여성과 어린이 69명, 10월 22일 호양짜우 마을에서 22명을 살해한 한국해병 2여단에 대한 미군측 조사보고서와 1969년 4월 15일 푸옥마이에서 민간인 4명을 살해한 한국 해병에 대한 한·미·베트남 합동조사단 보고서 등이다.

○ 이 문서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증거가 되나
= 확고한 증거다. 1969년 4월 15일 사건을 조사할 때 한국군도 참여했고, 최종보고서에 한국군 책임자도 서명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 문서 공개로 진실규명운동의 전기를 맞게됐는데
= 증언에 의존하던 단계를 벗어나 최초로 믿을만한 문서가 발굴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당시 한국측 조사보고서나 미국과 오간 문서들을 공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 참전군인들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민간인피해라 할 때는 정당한 교전행위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희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미군측은 만행(atrocity)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학살(massacre)과 만행은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구분되는 정도이지 그리 다른 용어는 아니다. 그리고 문서에 있는 사진을 보라. 어린이와 여성을 근접사한 것, 유방이 드러진 것 등 전형적인 학살이 아닌가

○ 진실위 활동이 조국의 명으로 열심히 싸운 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라를 망신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 분명히 말하지만 참전군인 모두가 학살에 참여했다는 게 아니다. 그 분들이 자식으로부터 '아버지도 학살에 참여했지?'하는 질문을 받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학살에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길이 옳은 길이요, 학살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참전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저과 민간인이 구분되지 않았던 베트남전의 속성을 너무도 모른다는 항변을 많이 듣는다. 군과 민간인이 모호하기는 우리 근대사 의병전쟁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가 의병소탕을 빌미로 저지른 수많은 학살이 정당화되나? 전쟁을 겪은 당사자들의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고통스러워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새만금 백지화 촉구, 범종교인 선언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종교인 6백여 명이 14일 오전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 모여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범종교인 생명·평화선언'을 발표했다. 당초 1천명의 참여를 목표로 준비했던 이번 생명평화선언에는 모두 2천명의 종교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대회를 마치고 조계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또한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각계 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대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창조)

전주인권영화제 오늘 개막

제5회 전주인권영화제가 오늘(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대 합동강당 103호에서 열린다. <대지의 소금> <사라바트만의 생애> <인간의 시간> 등 서울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17편의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전주인권영화제측은 부대행사로 '때때춘을 바라보는 또 다른 편견' '소과개정투쟁' 토론회도 마련했다. 문의:063-231-9331 (이창조)

<요약>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문서

1. 1968년 2월 12일 풍니·풍넷 학살사건 관련 <주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 진상조사 보고서> : 한국해병 2여단 1대대 1중대가 69명의 어린이, 여성을 근접 사격, 칼 등을 이용해 살해한 광경을 목격한 미군 병사의 진술서, 미해군 병사가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 있다. 미군측은 한국측이 만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한국 해병 2여단장이 해당 마을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고 30포대의 쌀을 준 사실을 주목했다.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이 당시 주베트남 한국군사령관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 체명신 사령관이 그 사건은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해 저지른 사악한 사건'이라고 답한 서한도 있다.

참고로 당시 이사건을 담당했던 헌병 조사계장은 한국군의 조사가 "청룡부대처럼 위장복을 입은 베트콩의 소행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에 따른 수사였음을 폭로(한겨레21 310호)한 바 있다.

2. 1969년 4월 15일 쿠앙남성 푸옥마이 마을 학살사건에 대한 <한·미·베트남군 합동조사 보고서> : 한국해병 2여단 2대대 6중대 1소대가 민간인 4명을 학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로 한국군 대표로 이영주 소령이 서명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을 "과실로 인한 비극이었으며,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마을의 남쪽 끝에서 한국해병이 광분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문서는 한국군이 학살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확고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16일(목)

제 17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

우리 근대사의 정치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치료재활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한국정치폭력 및 고문피해자센터'(아래 정치폭력피해센터).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 모임을 가졌던 정치폭력피해센터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25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적인 추진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 관련 인터뷰 2면

추진준비위는 "수십년 간 외세와 독재 아래 정치폭력 피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방치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건립취지라고 밝혔다. 일제 치하에 희생된 사람들, 제주 4·3 등 분단에 따른 사상적 갈등의 피해자들, 5·18 등 독재정권 하의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수많은 정치폭력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인권병원 △인권피해자 발굴 및 치료방법 연구 등을 위한 인권연구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복지관 등 세 단위로 정치폭력피해센터가 구성될 예정이다.

추진준비위원회는 특히 '센터' 건립에 앞서 정치폭력 피해자 실태파악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고문피해자의 경우, 후유증이 심하게 정실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준비위는 25일 발기인대회 이후 광범위한 '정치폭력피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인권침해 진상조사 병행해야

한편, 정치폭력피해센터 건립논의와 더불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부터 을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단체가 내놓은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일정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제공 등이 가능한 반면,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으로

는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창조)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 겸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1일에는 한신대 졸업생인 최형규(26·군복무) 씨가 재대 3개월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무사에 의해 구속됐다. 최 씨는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대섭)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김용갑(한나라당 의원) 씨의 '노동당 2중대' 발언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는 15일 "김 의원의 시대착오적 생각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길 바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하루빨리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연대는 "색깔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대해 감히 '독사의 족속'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 입법청원을 했던 2백여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모두 조선노동당 1중대나"고 비난했다. (이창조)

● 정보생 ●

○ 강성철씨등 국보법 구속자 석방촉구 대공분실 항의방문
· 11월 16일(목) 오전 11시 · 곳 : 남영동 대공분실
· 문의: 민주노총 전해투 상황실 (02-2637-7437)

○ 새만금 사업 백지화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 11월 16일(목) 오후 1시 · 곳: 서울 종묘공원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회의 표현의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 11월 17일(금) 오전 11시 · 곳: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주관: 문화개혁시민연대(02-773-7707) · 참여: 32개 사회단체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민간에서 추진중인 정치폭력피해센터는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의 치유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추진 준비위의 김록호 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창조]

◎ 정치폭력피해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고문이나 집회시위 때 다친 사람들, 또는 이념으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다.

◎ 5·18특별법, 4·3특별법, 민주화운동영예회복보상법 등이 있는데, 특별히 정치폭력피해센터(인권병원)가 필요한 이유는?

= 그 동안엔 각종 인권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게 주요한 운동목표였다. 그 결과 금전적, 상징적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5·18부상자들의 경우, 정부가 의료보호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당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으로부터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다.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 환자가 많지만, 그들에 대한 전문재활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문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문제다.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미치고 있는데, 보상은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인권병원이 설립되면 가족들에 대한 치유도 가능해질 것이다. 인권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는 필수적인 일이다.

◎ 센터를 민간차원에서 설립·운영하는 것인가?
= 궁극적으로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와 관료들에게 이 문제를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 일단, 민간에서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려면 근거 법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간에서 마련한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 인권위원회법은 법무부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는데
=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뒤, 인권위원회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정치폭력 피해 환자를 가리는 기준은?
= ‘가짜환자’가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엄격한 판정기준을 세우면 정말 치유받아야 할 환자를 놓칠 수 있다.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김영삼(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교육과정연구실장)

“2000학년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중 강남 3개구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 2001년 교육 예산안 유치원, 중고교생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일정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고착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구조적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 논리 자체가 가진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간접세가 대부분인 교육세를 가지고 초중등 교육이라는 보통교육기간동안 수준별 우열반을 만들어 상위 20%에 불과한 잘하는 학생들만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것은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가지고 도리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부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권리로서 접근한다면 의무 교육의 확대 실시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교육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차별적 학습 환경에 처하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교육문화적 배경이 부족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95년 5.31 교육 개혁안 발표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수월성, 경쟁력, 수요자 중심의 논리는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줄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경제적 무한 경쟁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유리한 사람들은 이미 가진 사람들, 즉 부자들인 것이다. 현재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련의 논리들과 교육예산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보조금 축소와 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상황과 투쟁해 나가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17일(금)
제 17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 투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고되고 있다.

의사집단 내에서 이른바 ‘양파’를 당하면서도 의료개혁의 입장을 유지해왔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우석균 기획실장을 통해 의료개혁의 과정을 짚어보았다. [이창조]

미완의 의약분업

당초 의약분업을 통해 기대됐던 것은 의사들로부터 투약권을 뺏고 약사에게 처방권을 뺏음으로써 처방과 투약과정에 ‘이윤동기’가 개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즉 ‘약값마진’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올바른 의료행위’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이 부족하나마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개원의의 반수 정도가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처럼 됐다. 제도외적으로 먹고살던 의사를 제도 내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의 유혹과 그에 따른 제약업계·의사·약사간의 담합통로를 열어두고 말았다. 약효동등성에 대한 검사 없이 의사가 특정약품을 처방할 수 있

기 때문에, 가격마진이 높은 약품만을 담합판매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의약간의 담합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의약협력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완의 ‘의약분업’인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예고

의약분업이 후퇴한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의약분업 논란과정에서 새차례에 걸쳐 수가가 인상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가인상분을 의료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해소하려들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경우, 정부는 ‘민간의료보

험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이미 물밑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고스란히 보건의료부문에 관철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돈을 쓰려하지 않는다. 교육마저 사교육화하는데 보건의료부문을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수가인상에 맞추지 못하는 공백을 다시 시장에 돌리려 할 것이다. 그것이 민간의료보험제도다. 보건의료부문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WTO협정 속에도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

“외국의 초국적자본들은 이미 국내 보건의료부문 진출을 도모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쳐들어올 테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험자단일조항(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의 삭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초국적자본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관료들, 의료시장주의자, 제벌병원 등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만화사랑방

이동수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 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인권운동사랑방 등 문화, 교육, 청소년, 인권 분야의 32개 단체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발족식을 갖는다. 공대위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적 청소년 정책을 답습하는 전형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처음에 음란매체규제에관한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가 출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명칭이 정해지면서 일반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조항의 모호한 기준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법이라는 비난의 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보호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진흥법(가칭)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취약한 청소년의 교육, 문화, 노동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대위는 발족식 이후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체 그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중요공원에서 집회

"배만 띄우면 먹고 살 만큼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 구경도 힘들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전북 부안 계화면 계화리의 김현태 청년회장의 말이다. 김 청년회장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16일 오후 1시. 전북 부안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2백여 명은 쌀쌀한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중요공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방조제 공사진행을 60%는 새만금 전체공정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눈앞에 닥친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새만금 민관조사단에 참가했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갯벌을 막아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싶으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도 "한편에서 농토를 잠식하는 김제비행장을 지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농토보전을 위해 새만금 간척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새만금 사업은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현지주민 김봉수(50)씨 등 4명은 "농지기반공사가 건설한다는 담수호는 시화호보다 더한 똥물이 될 게 뻔하다"며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라북도에는 공장하나 지지 못해 오히려 지역발전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 동안 농지를 마련한다는 명분에 밀려 입장을 못 정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등이 지난 10월 24일 새만금 사업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종교인들이 잇따라 새만금 중단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심보선)

내고 청소년진흥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고근애)

'의료개혁' 1면에서 이어짐

...질병의 경우 전국민의 12%가 민간 의료에 가입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는 몰락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지출 도리어 확대해야

이 시점에서는 도리어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보장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석균 실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매년 1조1천억원만 투자하면 된다. 이 비용이면 지역의료 경쟁의 50%를 감당할 수 있고(현재는 26%), 국민들은 1년에 50만원까지만 의료부담을 지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의료보장혜택을 모든 의료의 90%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OECD Health Data 2000)에 따르면, 전체보건의료지출 중 공공부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29개 가입국 가운데 97년 최하위(40.6%), 98년엔 조사대상 27개국 중 26위(45.8%)를 차지했다(1위 룩셈부르크는 92%, 대부분 65-85% 수준).

한편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만 살고, 동네의원은 죽는' 현 의료제공시스템도 혁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종질병에 동종수가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와 주치의등록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1차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시스템으로 만들어야만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혜택의 주체인 국민 스스로 의료권에 대한 자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노동자도 농민도 의료를 자기의 권리로 자각하고, 전체의료시스템에 대한 자기전망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관계된 문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18(토)
제 17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실업자가 백만을 웃돌고, 삭풍부는 서울역에 때 아니게 노숙자가 늘어나는 때, 공안대책협의회가 음식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동할 준비를 끝냈다.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당일 밤 한국 텔파이 노동조합 유제만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자 3명을 폭력 시위 혐의로 연행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동자 3명을 연행한 것

은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공안논리를 앞세워 토끼몰이 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실장은 또한 "노동행정을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면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작전과 여론몰이 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에 노동정책이 있기는 한 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광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수능시험이 끝났다. 거리마다 술을 마시려는 수험생과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날 아이들도 한잔하고 싶겠지'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일까? 이날 밤 수험생 자녀에게 술잔을 건네준 부모가 있다면 물지각한 부류에 해당하는 것일까? 청소년에게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 사이에는 셀 수 없고 짤 수 없는 변수가 있다. 그런데 그 변수에 대한 판단을 일부 기성세대가 자기 취향만으로 독점하려 든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그에 대한 반론과 다른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는 그러한 판단의 독점권자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보호법의 공격대상이며, '제지, 제한, 규제, 구분, 격리' 등이 그 공격방법이며, 그 조종권을 쥐는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보호'를 가장한 '표현물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없다. '청소년의 성적육구를 자극하는 것, 반사회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등 청소년보호법이 내건 모호한 기준에 걸려들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은 강력하다. 혼란스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 사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조하지 않을 부모와 교사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격리·유배'로써 청소년이 정작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전근대적 사고에 묶여있지는 않은가. 청소년은 매여있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보장·신장되어야 할 권리의 활동적인 주인이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 성적착취를 방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의 확충과 청소년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육성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로 포장된 '음란물 규제'가 정작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성찰해야 한다. 몇 개 음란물을 압수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청소년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들은 그 정도만으로 '보람'을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보람찬 하루 일' 때문에 창작열을 식히고 있는 예술인들과 정말 보호받아야 할 것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7일 성명을 내고 "12일 노동자대회가 충돌로 간 것은 경찰측의 방해 때문이었음에도, "15명의 노동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공안대책협의회 부활의 기회로 삼으려는 공안 세력의 비열한 음모"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2의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노동법이 다시 개악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공안기관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항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미군폭격장 폐쇄투쟁을 벌여온 매항리 주민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NCC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매항리폭격장 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매항리 주민의 인권회복과 한미행정협정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매항리폭격장 폐쇄투쟁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매항리법국민대책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장, 주민 최용운 씨에게 징역 10월에 선고유예를,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적용을 받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매항리 주민들의 고통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 등을 공론화시킴으로써, 매항리폭격장폐쇄문제의 진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실질법 상의 절차와 법의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종일 집행위원장(자동협 사무처장)은 "재판장이 무척 고심하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확고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미국의 인권유린에 대해 저항권 차원에서 싸운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느냐"며 "개의치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조)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98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이 인권을 먼저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의자보다 자신들 편의대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행위에 대해 판결문으로도 제동을 걸고 싶었다"고 밝혔다. (심보선)

인권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11월 14일 뉴욕에서 '2000년 세계인권지킴이'를 선정, 발표했다. 다음은 '2000년 인권지킴이'로 선정된 네 명의 개인과 한 단체의 활동내용이다.

◎ 카산 바이에프(러시아, 의사) : 체첸전쟁 발발 당시 체첸의 개업의였던 그는 48시간에 60회의 수술을 할 정도로 부상자들 치료에 헌신했다. 상대방 군인을 치료해주면 처형하겠다는 양측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체첸인과 러시아인을 모두 차별없이 치료했다. 결국 러시아는 체첸 장교를 치료해주었다는 이유로 병원을 불태우고 그를 체포하려 해 망명했다. 치료일지를 쓰며 또한 인권침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세계에 알렸다.

◎ 압둘 테잔 콜(시에라리온, 인권변호사) : '시에라리온의 인권을 위한 변호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상자와 소년병을 양산하며 계속되고 있는 내전에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세계에 알렸다.

◎ 마틴 맥원(인도, 인권운동가) : '나브사리잔 동맹(Navsarjan Trust)'의 대표로 활동하며 '달리트(인도의 카스트 중 최하계급, 불가촉천민) 인권을 위한 전국운동기구'를 이끌었다. 나브사리잔 동맹은 인도 서부의 지역NGO로서 약 2천개 마을의 달리트들을 위해 법률 활동부터 깨끗한 식수 공급, 토지개혁과 최저임금법의 시행 촉구 등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지역NGO의 연맹체인 전국기구는 1억6천만 달리트의 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기구로서 1999년 12월 인도 정부에 불가촉천민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250만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달리트 인권운동을 인도 역사상 최대의 규모와 범위로 확대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 '명예범죄' 폐지를 위한 요르단 전국운동기구(요르단) : 요르단 형법 340조에 규정된 소위 '명예범죄'의 폐지를 위한 운동기구다. 이 조항에 의하면 '명예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단지 수개월에서 수년 징역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요르단에서는 해마다 25명에서 30명의 여성이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입소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나 이 조항 때문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운동기구는 요르단에서 전통적으로 눈감아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결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레비아 카디르(중국) :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업가로 99년 8월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아들과 비서도 함께 투옥됐으며 가족과의 면회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옥의 진짜 이유는 그의 남편인 시이크 로우즈가 중국의 위구르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며 외부 언론에 위구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1일(화)

제 17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작업장통제 방식 갈수록 고도화

대전 한라공조, 신형 자동센서 도입

경영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가? 작업장내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신종 도구인가?

지난 17일 회사측이 "작업공정 개선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며 일단락된 대전 '한라공조(대표 신영주) 자동센서 도입사태'가 던지는 물음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콘과 라디에이터를 생산하는 한라공조는 지난 9월 기존 설비가 오래된 데다 작업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신형 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우리를 움푹달짝 못하게 라인에 묶어두겠다는 것 아니냐"며 현장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적기생산 방식으로 가는 현대자동차의 방침에 따라, 적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비율(지행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센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사실상 감시 카메라 밑에서 작업하는 상황은 견딜 수 없다. 당장 철거하라"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노동조합(위원장 최세철)이 나서 협의에 들어가고, '노사협'의 중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지리한 논쟁을 거치며 확인서에 이르렀으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의 감시카메라" 반발

확인서는 우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량 압박, 조합원간 과도한 경쟁유발, 인권침해를 양으며, 연봉제나 호봉제 등 개인평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조민제(30, F/S조립라인) 씨는 "어떤 항목의 정보를 수집하는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발한다.

실사 작업 공정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실시간으로 어느 라인에서 어떤 제품이 몇 개 생산됐으며 불량품은 어디서 몇 개인지가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뜬다면, 개인별로 따로 감시하지 않아도 작업장은 저절로 통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실시간 공정 그래프가 현장 단말기에 뜨지 않도록 한다고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경영진 컴퓨터에는 실시간 공정 그래프가 뜨고 이를 통해 작업장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회사측이 누누이 강조하듯 자동센서 도입 이유는 지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노조 김영명 조사통계국장은 "실시간 그래프를 포기하면 뭐하러 돈 들여 이 짓을 하겠는가"고 반문한다.

수집된 정보를 지금 당장 노무관리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리란 보장도 없다. 김민제 씨는 "회사측이 준 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확인서다. 이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노사 양측이 인정하는 실무 대표 2인이 '협'을 한다고 고만 되어 있다. 처벌 조항도 없다."고 분개한다.

확인서가 나왔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박권중 대의원(27, 예바

조립라인)은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노동자는 철거를 원한다"고 말한다.

경영진, 책상위에서 공정 확인

노동자들의 불만은 결국 작업장을 누가 통제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주간 작업시간을 10시간으로 보면, 하루 6백대 정도를 생산한다. 이걸 산술적으로 보면 1분에 한 대씩이다. 회사측은 9시 1분에 한 대, 9시 2분에 2대..., 하는 식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다. 그러나, 인간이 기계인가? 늘 그 속도로 긴장해서 작업하게.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두 배 정도 하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그 절반을 하며 조절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IMF 이후 자동차업체를 휩쓴 '구조조정 광풍'이 여전히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완성차업체는 쓰러지고, 부품업체는 도산하고 외국기업에 팔리고 있다. 남아 있는 이들은 고용불안의 압박을 느끼며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했다. 자동센서 도입 문제는 바로 이 불만의 정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권중 대의원은 "라인마다 사람수가 줄어들자 조·반장 지시에 다른 말을 할 엄두를 못 냈다"며 "문제가 생기면 옆 라인에 책임을 돌리고 서로 불평한다. 삶터가 너무 삭막하다"고 한숨짓는다. 안필균(37, 생산3부 조립라인) 씨는 "센서가 들어오니 한마디로 감감하다. 저러다 언제 그만 두라고 하려나 하는 마음만 생기더라.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이광길)

공판안내

◎ 민혁당 사건 구속자 3차공판(피고: 최진수, 박종석, 박정훈)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형사23부, 검찰증인신문)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수첩을 지우며

세밀이 가까워지면서 저질로 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수첩정리다. 머리 크고 만났던 사람들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지워가며 지울 건 지우고 남길 건 남긴다. 컴퓨터나 전자수첩이 좋다 해도 연필로 꼭꼭 눌러쓰기를 멈추지 못한다. 흰에서 너털너털한 검은 수첩 한 권에 지난 십 몇 년이 묻혀 있다. 해마다 고무지우개가 지나간 자국이 늘어난다. 인연이 질긴 이름 몇 개가 까만 연필심 번짐 속에 빛난다. 그걸 되풀이 읽는 속맛도 쓸쓸하다.

“내 호가 왜 조한알이나 하면 나는 노란 그 잡곡 한 알에 다름 아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에. 나도 인간이라 뻔뻔하게 머리 세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를 지그시 눌러주는 주문같은 거지” 조한알 장일순 선생 이름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수첩 x자 대목 첫머리에 올라 있다. 햇병아리 기자가 얼굴이 벌개서 그럴듯한 질문을 찾느라 쫓쫓때는 걸 편안하게 잡아주었다. 그가 원주 가톨릭을 중심으로 일했던 반독재 활동보다 조한알이란 호내력이, 눈에 들어가 있을 때보다 눈독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막걸리 한 잔씩 걸친 일이 많았다며 “내가 만고 무능군자 아닌가” 웃던 모습이 더 오래 남았다.

“서울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제가 더 미안하죠” 했던 이는 동화를 쓰는 권정생 선생이다. IMF 시련이 한창이던 98년 봄에 그는 한 달에 5만원쯤으로 살았다. 1년에 채 1백만원을 못 써봤다는 그는 “사람이 절대 훌륭해선 안 되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층민이 생기잖아요. 잘난 놈들이 위에서, 앞에서 까부니까 세상이 점점 나빠져요” 슬퍼했다. 애국자가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워 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똥 사랑하면 가슴이 덜 떨리고 힘도 덜 소모돼요” 털어냈다. ‘오물덩어리처럼 덩굴면서’, ‘강아지 똥’처럼 제 몸 부쉬뜨려 꽃피우듯, 큰 길에서 비껴 사는 목숨들이 “살다 가고 살다 가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걱정고무신 신고 봉당에 내려서며 말했다.

20여년 옥살이 끝에 세상에 나온 노촌 이구영 선생이 한 말을 이었다. “옥에서 보낸 시간이 오히려 내가 죄짓는 걸 면하게 해줬다고 봐야죠. 밖에 있었으면 으레 남 부리고, 남 덕에 먹고 살았을 텐데 그 죄 짓는 대신 그걸 깨고 살 수 있게 해 줬으니 복이라고 할 밖에요.” 무슨 무슨 ‘주의자’보다 사람답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으면 헛 산 목숨은 아니라던 그의 말은 옥에서 시작한 뒤 씩씩한 한문 강의가 길러낸 남녀노소 제자 수백명으로 열매를 맺었다. “어쨌든 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그거보다는 교루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좋아요.”

비 내리고 추워지는 날씨에 또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그들 응달에 선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의자’들 큰 목소리만 우렁차다. 때 낀 수첩을 지우면서 그 작은 소리들이 두렵두렵 가슴을 두드리는 울림을 가만히 듣는다. 피땀은 거기 그 땅에서 만들래 한 송이가 다시 피어나.

주간인권호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1.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생태보고 봉개는 새만금 간척-한국관료 무지에서 비롯' - 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소장 (11/13) / 종교지도자 2천명 '새만금' 반대선언 (11/14) / 새만금 주민·사회단체,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집회 (11/16) / 세계담위원회 보고서, '담 건설은 중단해야' (11/16)

2. 레드컴플렉스...알아서 긴다 온라인게임 '리니지', 캐릭터 이름에 김정일, 북조선 사용자 삭제키로 해 (11/15)

3. 아는 거라곤 색깔론 뿐이니... 김용갑 의원,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하며, 국보법 개폐논의 비난 (11/14)

4. 예나 지금이나 노동대척은 '때려잡기'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사회관계장관회의, "폭력시위 엄정 대처" 방침. 대검, 공안대책협의회 재가동 (11/15)

5. 인권지킴이에 별주는 사회 매항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 (11/17) / 법원, 매항리폭격장 폐쇄투쟁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만규·김용한·김종일·최용운 씨들 주민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모두 유죄선고 (11/17)

6. 진실 앞에 눈감으려나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실이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 극비문서를 통해 확인돼 (11/14) / 미국조사단 자문위원, "미국은 노근리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11/15) / '금정굴 학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청원 (11/16)

7.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본격화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32개 사회단체,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 공대위' 발족 (11/16)

8. '노예노동 철거!' 외국인노동자공대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보고대회 가져 (11/19)

9. 지뢰가 우리 발 밑에 있다 녹색연합,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곳에까지 지뢰 묻혀 있다고 폭로 (11/14)

10. 구린 데가 있었나? 서울구치소, 알몸수색 현장 확인하려던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조사권과 수사권 없는 인권단체에 현장 공개 못한다'며 공개 거부 (11/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2일(수)

제 17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자동차학원 강사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를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학원 문을 닫겠다' '노조에서 탈퇴하라'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조(최준일 위원장) 조합원들은 지난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아래 공공연맹)과 함께 학원 앞에서 '노조 인정 및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학원의 셔틀버스 운전자들이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나섰고, 그 과정에서 이정원 강사자동차학원 노조위원장 등이 부상을 입는 사태로 이어졌다.

회사측의 탄압이 거세지자, 노조 설립당시 4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의 수도 21일 현재 6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노조 설립 초기에 벌이던 '출근 투쟁'도 번번이 비조합원들에 의해 저지되었고, 조합원들은 이제 완전히 회사 밖으로 밀려나 처지다. 회사측은 또 최준일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에 대해 전출 또는 보직변경을 결정해 놓고 있다.

최준일 노조위원장은 "우리 학원 강사들은 식사시간 20분, 한달에 단 이틀 휴무라는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사들이 겨우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를 인정치 않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위원장은 "심지어 입사한지 3개월이 안 되는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의료,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4대보험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맹 민숙길 조직부장은 "노원자동차학원노조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이라며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교섭권으로 사측과 협상하여 반드시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노원자동차학원은 주식회사 두양(대표 최수근) 소유로 지난 5월에 개원하여 현재 노동자가 2백50여 명에 달하는 거대규모의 학원이다. 주식회사 두양이 소유한 또 다른 자동차 학원인 성산자동차학원은

아예 노조가 없다. 우리나라엔 60여 개의 자동차학원노동조합이 있고, 지금은 공공연맹 산하의 전국적 연합체를 준비하고 있다. (심태섭)

'납치' 의혹 노동자 돌아와 삼성SDI, 악랄한 무조노정책

지난 10월 9일 '납치감금됐다'는 소문과 함께 사라졌던 삼성SDI 천안공장 노동자 김갑수(37) 씨가 11월 3일 회사로 되돌아왔다. 김갑수 씨는 삼성SDI 천안공장에서 노조설립을 추진해 온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번 사건이 노조설립 시도를 좌절시키려는 회사측의 계획적인 음모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했다.

회사 복귀 후, 여러 차례 기자와의 만남을 피해왔던 김갑수 씨는 20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한달여의 경과와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주었다.

☞ 2면으로 이어짐 (이창조)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① ●

98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위상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10여 회에 걸친 짧은 문답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도록 한다(편집자주).

문) '인권법'과 '인권위원회법' 가운데 어느 명칭이 옳은가?

답)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일 뿐 인권에 관한 실제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그 명칭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되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인권법'이란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며 인권위원회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 삼성SDI 노동자 김갑수 씨

삼성, 노조 싹만 보이면 짓밟아

▶ 1면에서 이어짐

◎ 10월 9일 이후 벌어진 일들을 설명해달라.

= 10월 9일 나를 담당하는 주임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가보니 임 부장 등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술 한잔 먹자'고 하길래 시내에서 먹자고 했는데, 굳이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 사람들이 "노조 때문에 시끄러우니 멀리 격리시키려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갑수 씨는 이날 밤부터 강릉→정동진→낙산→춘천→수원→아산→부산→남해→광양→내장산→서울 등지로 옮겨다니며, 끊임없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게 '따라붙은' 회사 간부 가운데엔 수원공장에서 내려온 간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 관리자들이 무엇을 요구했나?

= 해외사업장이나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 중간에 벗어날 생각은 안 했나?

= 처음엔 천안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버텼지만, 회사측에서 이미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라 회사로 돌아갈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도중에 민주노총이 회사측을 '갑금'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천안 변두리의 한 파출소에서 '납치갑금이 아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해주었다. 중간관리자들이 피해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다.

◎ 회사로 다시 복귀하게 된 이유는?

= 민주노총과 부산공장 해고자들이 천안공장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니 회사측에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김갑수 씨는 집요한 회유를 버텼고 회사로 복귀했지만, 회사측은 11월 1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해고사유는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업무방해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등이다. 김 씨는 해고가 '결정'된 후에도 '해외사업장'으로

나가달라는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 해고를 수용하는가?

= 더 이상 중간관리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물러서기로 했다.

김갑수 씨는 천안공장 내 한마음협의회(이른바 노사협의회) 위원이었고, 다른 4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 결성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김 씨는 앞서 수원공장에 근무할 때 수원공장의 '노조설립시도 사건'에도 관계되어 있었다. 99년 11월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회사측에 '발각'돼 좌절된 그 사건으로, 동지들은 모두 퇴사하거나 해외사업장으로 전출을 갔다.

김갑수 씨에 대해서는 "그룹과 회사가 추구하는 비노조에 순응하며 혐의회 업무에만 충실하고 노조관련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 해외사업장은 여러 면에서 조건이 좋은데 '해고'를 선택한 이유는

= 삼성은 돈으로 노무관리를 한다. 현찰 앞에서 눈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삼성에서도 돈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싶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흔적이라고 남기고 싶었다.

87년 입사 후 14년만에 '징계해고'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사원증을 받았던 날, 김갑수 씨는 혼자 마곡사를 찾아가 눈물을 토해냈다고 한다. 그는 심경을 더 정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뒀다. 한번 퍼보지도 못한 채 짓밟힌 씨이었다.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11월 5일-10일 태국 방콕에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와 태국 정의평화위원회(Justice and Peace Commission of Thailand) 주관으로 '고문방지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인도,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 25명의 인권운동가, 성직자, 언론인, 여성운동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방지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필립(Philip Setunga, 아시아인권위원회) 씨는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특히 일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공포와 협박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봉건적 사회질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봉건적 질서는 그 자체가 폭력으로, 특권층은 봉건통치자와 마찬가지로 사회통제 기제로 폭력을 사용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문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 법집행기관은 고문의 관행을 유지시킨다"고 말했다.

각국 참가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경우, 고문은 종종 비사법적 처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형태로서 다루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광범위한 고문의 확산이 아시아의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데 심각한 장애 요소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이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 같은 야만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민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고문의 관행을 제거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미나는 5일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 종식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된 가운데 폐막됐다.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3일(목)

제 17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단순히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권을 차등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스스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하는 데 그쳐 검찰이 경찰의 폭력 행위를 적극 제지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호텔롯데 파업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으로 롯데노동자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폭력, 독직폭행, 직무유

기 등으로 경찰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지검은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이무영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하고, 경찰 양석순, 심재석 등이 당시 호텔롯데 근처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국장 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피의자인 양석순 등이 고소인들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 측은

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양석순 등의 동료경찰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반면, 고소인 측의 조사는 대리인만 불러 조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경찰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까지 불러 '충실하게' 한 셈이다.

검찰, 경찰폭력 제지 기회 놓쳐

특히 서울지검은 7월 10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진압'에 "진압 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라고 분명히 폭력행위를 인정한 부분마저도,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진압명령을 수행하는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으로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찰처분에 대해 감문대 변호사는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단순히 각목, 쇠파이프, 돌맹이를 들고있거나 경찰을 때리는 장면이 찍힌 경찰체증사진이 증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텔롯데 노조 이남경 사무장은 이번 처분에 대해 "경찰폭력은 기소도 안 되니 (경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롯데호텔 진압 때를 생각하면 서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의 대리인 권두섭 변호사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파업진압과 관련, 호텔롯데 노동자 등과 인권운동사랑방은 7월 14일, 8월 1일 살인미수·폭력행위·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바 있다. (심보선)

● 정보샘 ●

◎ 2000년 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식 및 기념토론회

· 11월 24일(금) 오후 1시~4시 · 곳 : 성공회 대성당 프란세스 홀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 토론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11월 25일(토) 오전 10시~12시 · 곳 : 국회 의원회관(1층) 소회의실
· 주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02-733-4163)

◎ SOFA 전면개정을 미국반대 국민행동의 날

· 11월 25일(토) 낮 12시 · 곳 : 서울 종로공원
· 주관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02-757-7386)

◎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학생 걷기 대회

· 11월 25일(토) 오후 1시 · 곳 : 서울역 광장
· 주관 : 에바다 학생 연대회의

◎ 노동법 제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연대집회

· 11월 25일(토) 오후 3시 · 곳 : 명동성당
· 주관 :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02-985-9061)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주)만도, 도입 둘러싸고 노사대립

부도와 분할매각 이후 계속된 혹독한 인원조정이 끝나나 싶더니, 이번에는 (주)만도(대표 오상수) 노사가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생산·인사 등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ERP)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을 감시하고 통제해 결국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ERP를 도입한 외국회사의 평균이익률이 29%, 제품 적시출하율이 95% 이상 올랐다"는 자료를 제시했지만, 노조(위원장 김기성)는 "인원 감축,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상층분을 빼면, ERP 도입으로 인한 이득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ERP 도입의 진정한 효과는 '흔늬움 겁주기' 효과"라 말했다. "현장정보를 수집·평가해 노동자를 입맛대로 다루는 도구"라는 것이다. 노조는 "오죽하면 외국노동자들이 ERP 시스템을 조기퇴직자(Early Retired Person) 양산시스템이라 부르겠는가"고 반문했다.

'항상 감시당한다'는 압박감

현장노동자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자동센서'다. "항상 감시당한다"는 압박감이 현장에 널리 퍼져 있다. 문막공장의 한 노동자는 "홀딱 벗고 일하는 셈"이라고 한다.

자동센서는 또 "현장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전에는 하루일과가 끝나면 자신이 어느 기계로 몇 시간 일했는지 그리고 양품과 불량품 개수는 몇 개인지 직접 적었다. 구형센서 시기에조차 작업정보는 노동자가 입력했다. 그러나 자동센서가 도입되면 노동자가 입력할 필요도 없다. 사측은 이런 간접방법 대신 자동센서를 이용해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각 현장작업자의

생산이력이 파악된다"는 점도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럽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작업장 단말기에 각 라인별 실시간 공정그래프가 뜨면 현장은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한 조합원은 "성적 매기듯 등수가 나오면 팔찌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팔찌가 먼저 찢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장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곧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조정으로 이어진다. ERP 시스템을 도입했던 외국기업의 경우 노동강도는 약 30% 강화되고 조

립라인 인원은 25-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는 노동강도를 측정하거나 생산량을 조정할 때, 현장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조사하고 노사협상을 통해 조율한다. 그러나 (주)만도를 비롯한 부품업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다. 노조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강도나 생산성지표도 몰가처럼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법이 없다"며 "눈 멀거나 뜨고 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ERP 시스템을 작동시킬 경우 ▲작동 스위치를 끄고 작업하기 ▲작업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기 ▲조·반장들이 작동 스위치를 켜면 센서에 고무줄을 달아 무력화시키기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중이다. (이광길)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② ●

문)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답)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가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추진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의 주 관심은 인권위의 주무부처가 되려는 데 있다.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는 주무부처가 있어야 하고, 그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을 볼 때 주무부처는 산하기관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는 결코 법무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은 곧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켜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 법무부가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위에 간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답) 법무부가 인권에 관계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인권위가 수행하는 기능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내세우는 이유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아말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있겠는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4일(금)

제 17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어동, 김두환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연대가 1차로 접수한 다섯 건은 각각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정원), 경찰, 군대와 관련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들로 특히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의 처리과정은 전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수 국민연대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이날 접수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 따라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등 협조여부 관건

그러나,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 등 피진정인 자격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느냐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수사 종결된 사건들이기에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원천적인 걸림돌"이라며 "결국 기록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진정기관의 자료협조와 관련 인사들의 양심적 증언이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만화사랑방

이동수



과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사무국장은 "의문사진상규명작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보다,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국민에 대한 홍보와 양심선언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조)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이전에 이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해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창조)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 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99년 9월 8일자 참조).

또, 서 대표는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심 판결 직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97년까지 항소심 재판이 보류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91년 사건은 97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되어 왔다. 서 대표는 91년 5월 강경대 타살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잇따르던 국면에 유서대필사건이 돌출하자, 검찰주장에 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검찰은 그해 6월 서 대표를 구속했다.

한편, 2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박연철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91년에 시위에 한번 가담했다고 해서 91년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적 변호사도 최후변론을 통해 "서준식 씨가 활동을 신고하지 않아도 당국은 살살이 다 파악하고 있다. 몇년전 서준식 씨와 독일에 가기로 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서준식과 같이 가지 말라는 충고가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잘 알면서 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보안관찰법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 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인권은 '당파성'에서 자유로운가?"
"인권운동은 민중운동의 동지인가?
동맹자인가? 걸림돌인가?"

이러한 물음에 도전하며 땀흘려 공부할 동지를 찾습니다.

오는 12월 15일 개소식을 가질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는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의 이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진보적 인권이론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1. 제출서류

- ① 이름, 나이, 연락처, 인권운동 경력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 (A4 1매)
 - ② 인권에 관한 에세이 (객원연구원 지망자에 한함. A4 1-2매)
2. 제출마감: 12월 10일(일)
3. 제출방법: 팩스 02-3676-1302
e메일: doll@sarangbang.or.kr

- * 면접: 12월 11일(월), 12일(화)
- * 결과 통보: 12월 13일(수)
- * 연구소 개소식: 12월 15일(금)
- * 인권운동연구소가 준비하는 강좌
개강: 2001년 1월 8일(월)
- * 문의: 02-3675-5363/ 3676-1301
- * 메일: doll@sarangbang.or.kr
(담당: 배경내, 서준식)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보안관찰법은 주된 죄목이 아니었다. 그러나 91년, 97년에 주되게 기소된 죄목은 다 무죄를 받거나 거의 무의미해지는 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보안관찰법이 가장 주된 죄목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보안관찰법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용도가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어렵다. 보안관찰법의 모태였던 사회안전법은 70년대 비전향장기수가 무려 4백명 이상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조건 아래 국회에서 심야에 날치기된 법률이었다. 그 법률도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세상이 바뀌려 하니까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그후 다시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가는 등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보안관찰법 역시 시대에 맞춰 바뀌거나 없어져야 할 법률 아닌가? 자기의 존립근거를 잃은 법률이 그 생명을 유지할 때 남는 것은 역기능밖에 없다. 이런 법률로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나는 인권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관심이 많다. 인권이 발전하기 위해선 나처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법법자,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때로는 사회통념에 밀려가지 않는 판사들의 용감한 판결이 있어 왔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인권을 신장시켜온 것이다.

바라건대, 본건 판결을 내릴 때 인권을 생각하며 판결을 내려달라.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발전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5일(토)
제 17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인권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인권피해치료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추진준비위원회(공동대표 변주나, 김복호, 박원순)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취지와 추진일정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6일자 참조).

추진준비위는 "인권수호의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정작 인권 피해자의 생명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부재하다"며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도 인권회복, 생명권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서, 한국인권피해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준비위는 특히 "정부가 인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간단체 공대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5·18 부상자 가운데 2백15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생존자의 60% 이상이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신고된 피해자가 대략 9천명에 이르며, 고문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수만도 4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단체, 보건의료인, 인권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중 발기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추진준비위원회엔 인의협, 민가협,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등 총 16개의 국내외 단체와

28명의 개인이 참여중이다. [이창조]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저지 및 근로기준법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2월 5일 경고파업 및 양노총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조]

논평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장애인 시설 비리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에바다농아원 문제가 오는 27일이면 사태발생 4주년을 맞는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권오일 교사의 수업복귀가 이뤄짐으로써 에바다는 이제 외견상 정상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외형상의 평온에도 불구하고 에바다농아원, 더 나아가 에바다복지회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임시 이사회는 구 재단 운영자인 최씨 일가 쪽 이사 5명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쪽 이사 2명이 포함되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초 평택시의 연대회의는 민주적 이사 7명과 구 재단 측 이사 6명으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구 재단 측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임시 이사회가 번번이 이사진 개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씨 일가는 현 이사회를 교착화시킴으로써 에바다를 다시 잠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최대의 관건은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 여부다. 현 이사진 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최씨 일가가 합법적으로 에바다에 재임성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며, 결국 장애인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구 재단 측 인사들에게 다시 에바다의 운명을 맡기는 꼴이다. 이제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평택시는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평택시는 구 재단 측 인사들의 압력을 배제하고 조속히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을 단행해야만 한다.

에바다 투쟁 4년은 시설의 설립자들이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는 그릇된 신화를 깨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문제 재단의 척결을 통해 시설을 사회화하는 모범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해오는 과정이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도사 근로실태 드러나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도사 역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도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내용, 징계, 지휘감독 등에 있어 명백한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내용, 징계, 지휘감독 등에 있어 명백한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들은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권한이 전혀 없으며, 결근·지각·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각종 제재를 받고 있었다. 특히 경기보조원의 경우 대기를 놓치거나 결근 시 하루종일 백을 나르는 제재조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용자가 임명한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부족하면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반면, 골프경기 중 발생하는 재해나 임신중인 학습지도사에게 빈번한 유산에 대해 사용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명백한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관련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해고와 성차별적 조기정년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보험설계사와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창조]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없는 국가기관이 위헌인가 여부는 마땅히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소속이 없다고 해서 이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을 두지 않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우리 법제도 내에 도입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와 특별검사 역시 소속없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독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만 위헌 운운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권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11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아체(Aceh)의 독립요구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가 나자르(Nazar)가 체포되었다.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북쪽에 위치한 아체주(州)는 51년 인도네시아에 강제 합병되었다. 천연가스과 석유가 풍부하나 자원수익의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 주민 생활은 빈곤했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독립운동이 계속되어 지난 10년간 수천 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무장 충돌이 격화되자 올해 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자치권부여, 자원수익 반환, 그 동안의 인권유린 수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끝이지 않는 인권침해로 이 협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아체의 민간인들은 계속되는 실종, 살인, 고문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 하던 사람들이 연속해서 실종되는 일도 빈번하다. 앰네스티가 보도한 사이플(22세, 가명) 씨의 경우 9년 전 그의 아버지가 실종되었고, 형을 찾으려 나선 삼촌도 정부군에 체포된 뒤 소식이 단절되었다. 작년에 아버지와 삼촌의 자취를 추적한 형이 실종되었고, 가족을 찾으려 나선 사이플은 올해 정부에 의해 자유아체운동(아체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의 회원으로 고발당했다.

여자들의 희생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 7일 북아체에서는 자유아체운동을 추종하던 군인들에 의해 7명의 소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 정부는 인권유린 수사를 약속했으나 범인 중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실종도 종종 발생하는데 9월 2일 미국에 본부를 둔 아체 인권운동단체의 회원 5명이 실종된 한 달 뒤 수마트라 북쪽 골짜기에서 발견되었다. 철사로 묶인 몸에는 고문당한 흔적이 있었다. 많은 인권침해가 정부군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나 반군 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1월 10, 11일 양일간 아체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군의 발포로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시위를 이끈 학생운동가 나자르는 형법 154, 155조에 의하여 '정부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연상케하는 위 형법 조항은 '정부에 대한 적대감, 증오, 경멸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하르토는 네덜란드 식민지배의 유물인 이 조항을 이용하여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동티모르를 탄압하였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 폐지가 기대되고 있던 이 조항을 이용해 나자르를 체포한 것은 와히드 대통령에게 민주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8일(화)

제 17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과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여권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상임위원 숫자를 줄이고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등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두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입법안보다도 후퇴 조짐

과 위원장은 최근 여권 내에서 인권위 상임위원 숫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용도폐기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도 상임위원 6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명의 상임위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인권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인권위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면책특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은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에서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인권위원회에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러 인권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현재 인권위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회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할 것 △위원회가 선서에 의한 중인신문권을 가지며, 위증·허위진술, 증거의 인멸·날조 등을 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처벌할 것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 △한시적 부속기구로 과거 중대인권침해, 곧 국가폭력으로 생명을 잃거나 모진 고문을 당한 과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낮 1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권위원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부패방지법·국보법 요구 이어져

한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준비위,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등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를 요구하며 30일까지 밤샘 농성을 천명했다. 이들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주제로 행동을 벌인 데 이어, 28일엔 부패방지법, 29일 국가보안법의 처리에 대한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심보선]

에바다정상화 언제쯤

사태 4주년, 구재단 입김 여전

27일 '에바다 사태' 4주년을 맞았으나, 정상화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태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 있다.

올해 7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한 등, 연대회의)와 평택시청은 연대회의의 추천 인사 7명과 구재단측 인사 6명으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구재단측 추천 인사 중에 비리의 주범 최성창 씨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연대회의가 이사회 구성을 거부한 사이, 7월 29일 평택시는 현이사회(이사장 김종인)를 출범시켰다. 구재단측 인사 5명과 연대회의측 인사 2명이 '영검결'에 참가해 평택시의 독촉 속에 출범한 '5:2 이사회'는 지난 7일, 연대회의와 평택시의 '7:6 이사회 구성안'을 부결시키며 '본색'을 드러냈다. '현재의 수적 우위를 포기할 수 없으며 민주적인 인사가 다수를 점하는 이사회에 에바다를 넘겨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평택시는 현 이사회를 '사고 이사회'로 규정하고, 이전 합의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번번이 밝히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측은 27일 성명을 발표, "평택시는 민주 이사회 구성 약속을 이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에바다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걷기대회'가 치러졌으며, 오는 29일 오후 7시 연세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맞선 사회복지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이광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이란 그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간과 시간에서만 타당하다. 법치국가의 변방에서라면 어김없이 법치국가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자들을 편드는 악랄한 철칙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악리가 두드러진 사례를 국가범죄(國家犯罪)라 한다. 국가범죄란 실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른 투옥, 고문, 학살 등 권력범죄를 말한다. 국가범죄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들과는 성격이 달라하므로 시효를 부인하여 책임자를 영원히 처벌해야 하고, 배상책임도 영원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법률가라면 그저 죽어 지내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줄기차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국회가 배상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유족회의 일부에서 헌법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권보호적인 판결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더 갈 것도 없이 가까운 80년초에 저질러진 삼청교 유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말이다.

국가범죄는 국가의 원죄이다. 원죄가 원죄인 이유는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새로운 악리를 요구하고, 이에 최고사법부가 법률가식의 전문용어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권리 위에 잠들었는가? 역사를 뒤지면 흥미롭게도 해방정국에서 자행된 억울한 학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대구지역의 유족회원을 5·16군사정부는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자 이제 억울함을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모진 고초와 죽음을 자초하는 자만이 권리 위에 깨어있는 자란 말인가?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을 뒤흔들던 악마적인 시대에 권력관결 뒤로 숨던 사법부가 이제 법치국가의 화신으로 표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권리 위에 잠든 자'라고 단죄한다면, 그렇다면 사법부에게 묻건대 당신은 그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주간인권호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족쇄사용 관행에 '족쇄'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 했으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명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 2백여명의 위패가 마련된 봉은사에서 실종사망한 북파공작원에 대한 추모제 공개리에 열고 정부에 "희생자 실체 인정" 촉구 (11/22)

3. 영장심사 없는 구속은 위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중요한 권리가 침해된 채 구속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의 구속 취소 (11/22)

4. 무대오른 과거청산, 정부의지 시험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고 최종길, 김두환, 신호수, 이이동, 정경식 씨등 5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 (11/23)

5. 검찰, 환장하다!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유서대필조작사건 항의운동 때문에 기소돼 항소심 재판중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징역5년 구형돼 (11/24)

6. 검찰의 수사원칙, '가제는 개편' 검찰, 노동자대회에서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한 반면, 호텔롯데 파업진압 시 노동자들에게 폭력행사한 경찰관에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7. 감시? 사람보다 기계가 낫지 대전 한라공조, 작업공정 개선용 자동센서 도입함에 따라 노동자들 "작업장감시 및 노동통제" 반발 (11/17)

8. 국가가 안하면 우리가 나선다 각계 인사 및 사회단체 대표들, 인권피해자 전문치료센터 건립 계획 밝혀 (11/24)

● 해외 인권소식 ●

- 제2의 동티모르, 아체 - 인도네시아령 아체의 독립시위를 주도하던 학생운동가 체포 (11/20), 아체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 발표로 20명 이상이 사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29일(수)

제 17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는 12월 10일까지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권특위가 확정된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많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가 대폭 줄어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송석찬(대전 유성, 민주당), 안영근(인천 남, 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52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의원들은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6·15 남북선언,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그런 시카이어말로 오로지 정권유지수단으로 국보법을 악용,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민련은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태도만 흔들린다는 민심을 무시한 채 국보법 폐지를 서두른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한편, 2백32개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는 28일 현재 명동성당에서 1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이 되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만들기' 행사를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3대 개혁입법제·개정 촉구 시민행동'을 진행중인 사회단체들도 29일 여의도와 명동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위와 밤샘농성을 진행한다.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들 역시 30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갖기로 했다.

국보법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송석찬,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태홍, 김화중, 김희선, 문석호, 설송웅, 송영길, 송영진, 유재규, 이호웅, 장성민, 정범구, 최용규, 추미애(이상 민주당), 김홍신,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이상 한나라당)의원 등이다.

(심태섭)

든 것이 한 예다. 법무부측 입법안에서도 상임위원의 숫자가 6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인권기구 공대위(아래 공대위)측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를 전담할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을 두는 조사권, 시정명령권" 등도 인권특위의 최종안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숫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으로 두어 결국 사무처 중심의 운영을 의도한 것은 인권기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보다는 생색내기용 인권기구"를 만들려한다고 비판했다.

광분한 법무부, 여당에 실력행사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는 법무부가 인권특위 결정에 불만을 품고 실력행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특위가 인권법안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도중, 법무부 차관과 법무실장, 검사 3-4명이 당사료 물려와 인권특위 위원장의 기자회견 참석을 막았으며, 기자회견실 지하복도까지 쫓아가 '합의된 적이 없는 법안을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의 궤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감시기관과 피감시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기 조직의 산하로부터 분리되는 인권기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조직혁신의 길목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감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인권특위 관계자는 이날 사태에 대해 "우리가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기명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쪽방 거주민 대부분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의 쪽방 거주민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연대의 '쪽방 거주민의 의료와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바른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쪽방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 쪽방 거주민은 37%에 불과하고 한 끼만을 먹는 사람들이 10% 이상이나 됨으로써, 쪽방 거주민들은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끼니를 거르는 이유는 무응답(129명) 다음으로 '돈이 없어서'(78명)가 많았다.

또 이들의 빈곤은 건강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을 하나 이상씩 갖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엔 결핵과 알콜중독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 거주민들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95명), 약국(63명), 개인의원(62명), 그리고 국공립병원(54명)과 보건소(21명)의 순이었다. 이밖에 돈이 없거나 수발해 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1백8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반이 넘었다.

또한, 쪽방 거주민 가운데 의료보호증이나 의료보험증이 없는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42% (148명)나 차지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에서도 24%는 수

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조사결과는 국가의 생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쪽방 거주민들이 정작 의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쪽방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되었는데,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생계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한 식사 공급 △결핵 검진 사업 및 해당 지역 보건소의 방문 진료 등이 주요한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이주영)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

경찰이 노골적으로 사회단체를 사찰하다 들킨 사건이 발생했다.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용담택 담은 물담기 전북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승 등, 용대위)는 지난 25일 "진안경찰서 정보과 오아무개(43) 경장이 진안 군민을 사칭해 용대위 회의에 참가하고, 회의 자료를 받아가는 등 사찰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④ ●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에게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곧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인권위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조사기능은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대위에 따르면, 오 경장은 지난 14일 전북 진안군 용담택 담수 문제로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 부인과 자녀를 동반하고 나타나, 자신을 '인터넷을 통해 모임 사실을 알게 된 진안군민'이라 소개하고 약 10분간 회의를 참관한 뒤 자료를 챙겨 떠났다.

자칭 '진안군민'이라 밝힌 남자의 정체는 그로부터 6일 뒤 용대위 관계자가 진안 농민회를 방문했다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밝혀졌다. 농민회 관계자는 그 사람이 정보과 형사임을 확인해 주었고, 전에 공대위 간사가 받아둔 이름과 전화번호도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용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25일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형장의 공개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요구했고, 경찰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사찰이 아니다"면서 "27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27일 '시민단체 회의 위장참관 주장에 관한 의견'이란 문건을 들고 용대위 사무실을 찾은 정보과 형사 2명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해프닝" 정도로 무마하려는 속셈을 비쳤고, 이에 용대위는 문건을 반려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이번 사건은 97년 '경찰의 단체 및 인물 존안카드 작성 및 보관사건'등 술하게 일어난 사찰 행위의 연장"이라며, "경찰이 제몫 감싸기 식 처리를 계속함으로써 민간인 사찰 사건이 조직적으로 보존·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1월 30일(목)

제 17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접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청년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향해 점거했다.

29일 오전 11시 50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투쟁 청년학생 결사대' 6명이 한나라당 중앙당사 6층 부층재실을 기습 점거했다.

99년 경인총련 의장 유병권 씨 등 6명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 유지에 인간됨을 쓰고 있는 한나라당을 준엄히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묶여 신음해 온 한국민중의 절절한 투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점거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에 들어가며'라는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명높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인권을 전면부정하는 가장 악독한 인권과

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갑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발언은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행동에 착수할 것 △김용갑 의원을 제명할 것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폐하고 모든 수배자들의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측에서는 응하지 않았고 오후 12시 55분 경에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한편 이날 낮 1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갖기 위해 모였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칭) 준

비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찰이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점거 농성자들을 폭력연행했다.

한나라당을 점거한 6명은 유병권(99년 경인총련 의장/99년 경원대 총학생회장), 한대호(고려대 이과대 학생회장), 박진규(99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김승현(경희대 부총학생회장), 최지호(경인총련 의장/경원대 총학생회장), 박병세(경희대 92학번) 씨 등이다. (심보선)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

자유게시판, 삭제로 해결 안 된다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운영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29일 진보네트웍(대표 김진균, 이하 진보넷)과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운영자의 과도한 개입 문제를 따져봤다.

현재 여성단체·노조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에서는 욕설과 여성비하,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 무원칙한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 2면에 관련기사)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진보넷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게시판의 소통을 방해하는 도배, 스팸, 혹은 특정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과정은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명문)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위' 판<심청과 백덕어멈>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10차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에 때맞춰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찰에 의해 시위로 바뀌었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파주 스토리 사격장 비상대책위원회,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 등이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경찰이 회견참석자 3~4명씩을 따로 떼어 내 검거에 에워싸는 바람에 회견 문만을 남겼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은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회견문을 낭독하며, 한국정부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자주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문 상임대표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계획되지 않은 우발사고 가능성' 운운한 양성철 주미대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또 "미군기지 임대기 한 및 기지사용료 문제 등은 논의도 되지 않았다"며 "미군의 무상·영구 주둔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SOFA가 전면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조항 신설 문제를 포함, SOFA 31조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이번 협상기간이 9일에 이르고 25~30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표단이 구성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 대사 및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 △신문 광고 △택시에 SOFA 개정촉구 스티커 부착하기 △사이버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 SOFA 협상 기간인 12월 7일까지 비상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 02-719-8947

(심보선)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게시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글들은 정치적 반대 의견부터 시작해서 욕설과 폭력적 표현,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글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다. 한두 번 게시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는 단체들은 "다른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올바르게 풍부한 소통을 위한 정상적인 게시판을 위해서 삭제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은 "욕설과 폭력적 표현, 유언비어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며 주장하는 논리 역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욕설과 흑색선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 어떤 단체는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는 원칙을 정해 수많은 표현을 삭제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가차없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가 대부분의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린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집회제안서'는 한 인권단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인 아니다. 매체별로 상황별로 맥락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판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그룹, 개인도 뚜렷이 그 상황을 예측하여 기준을 정하고 논란 없는 규제행위를 성공했던 역사가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연구의 부족함으로 인한 논리의 빈약함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행위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똑같이 표현될 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의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알게 모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제 단체의 자유게시판을 격정하기 이전에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네티즌의 표현을 섬세하게 판단하고 글을 쓴 당사자와 그 글을 읽는 3자를 배려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성의를 가져야 하고, 설령 원칙을 만들었다더라도 그 원칙을 네티즌과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나 단체의 자의적 규제에 의해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기명문]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

11.30~12. 3, 울산대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열린다.

30일 저녁 7시 울산대 해송홀에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볼리비아 일기>를 시작으로 <인간의 시간>, <오

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12월 1일 <레드헌트>, <제9법안 찬반투표>, 2일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평화의 시대>, 3일 <대지의 소금> 등이 상영된다.

특히 12월 1일에는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 052) 242-1119

(심보선)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1)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올해도 지난 1년간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올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 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52개 항목중 10개만 선택해 공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응답은 12월 6일까지 해주시기 바라며, 결과는 12월 9일자 하루소식을 통해 발표됩니다.

-설문접수는 ① 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lian.net) ③전화(02-741-5363) ④ 우편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설문응답에 앞서

** 귀하가 하시는 일은 : ()

** 인권하루소식 구독은 언제부터 : ()

설문항목 총52문항 중 택10

- () 1. 대전형무소 정치범 총살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 하나둘 드러나
- () 2.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밝혀져...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반금혼제 및 여성태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추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안에서 윤락강요 사실 드러나
- () 6. 호텔롯데 여직원 68명, 직장내 성희롱 당한 것으로 밝혀져
- () 7. 동성애자 홍석천씨 방송출연 중지조치 내려져 ... 국회, '품위' 이유로 국감장 출석 제지
- () 8. 장애인 내뿜는 대학...원서지원 및 입학 거부 잇따르고, 장애인 대학교수도 제임용탈락
- () 9.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빈발...경찰, 이주노동자 용의자 머리에 총기 발사·네팔인 여성, 정신 병자로 몰려 6년간 정신병동 수용...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 () 10. 정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결정...고용허가제 역시 노동권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돼
- () 11. 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 사린 씨 강제추방 위기...인권단체들, 난민인정 촉구
- () 12. 한국정부, 난민조약 가입후 8년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인사의 난민지위 인정
- () 13. 삼압동, 봉천동,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강제철거 잇따라
- () 14. 무차별 개발에 대한 저항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민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16. 고문피해자 김성학씨,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노조 파업 무력진압 ... 정부, 경찰특공대와 쇠파이프 동원
- () 18. 매항리 미군 폭력장 철폐를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들 끈질긴 투쟁 전개
- () 19. 한강독극물 방류 등, 주한미군의 주권·인권·환경침해 극치 달려...소파개정 투쟁 확산
- () 20. 서울행정법원, '영화 등급보류 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 21. 정부·기업, 집회자유 봉쇄 총력 ... 대사관 유치경쟁·위장집회신고 잇따라
- () 22. 결식어린이들, 방학과 공휴일의 급식지원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전개
- () 23. '청소년 인권은 없고 검열만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본격화
- () 24. 권리찾기 나선 청소년들...'두발제한 반대' 9만여명 서명...교육부, 두발문제 시정 권고
- () 25. 피의자 인권보장 일보진전...법원, 알몸수색 및 족쇄사용 제한·영장심사 없는 구속취소

☞ 다음면도 있습니다.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2)

- () 26. 2차 퇴출결정으로 수십만 노동자 실직 위기...노동자들, 구조조정 반대시위 고조
- () 27. 무노조 혈안 삼성그룹, 노동자 억류·협박하며 노조결성 저지
- () 28.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정부 정책, 계약직노동 확대 방향으로...롯데호텔 노조, 파업투쟁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쟁취
- () 29.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권 쟁취 투쟁
- () 30. 프로야구 선수들 '노예해방' 선언, 구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벗어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 엉망·생활고 악화된 장애인등 잇따라 자살
- () 32. 아셈 개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
- () 3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 사건 접수에 들어가
- () 35.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운동 거세
- () 36. 통신질서확립법(인터넷등급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온라인시위 규제) 등 온라인통제 법령 잇따라 입법예고...네티즌 온라인시위, '해킹'으로 물리기도
- () 37.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처리 예고...인권위 독립성 수용 대신 실효성 후퇴시켜
- () 38. 의약분업 실시됐으나 의료공공성 확보 미흡...의사폐업 사태로 건강권 침해 잇따라
- () 39.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강신욱, 대법관 임명 승승장구
- () 40. 지문날인 거부자들, 구 주민증 법적효력 소멸하자 모임 결성해 지속적 싸움 결의
- () 41. 비전향장기수 63명 북녘땅으로 돌아가
- () 42. 분단 50여년만에 남북 이산가족상봉 이뤄져
- () 43. 북과공작원들, '실체인정·명예회복' 요구하며 집단행동 전개
- () 44. 잣대 없는 보안관찰 결정... 법원, 처분취소·처분유지 판결 잇갈려
- () 45. 법원, 법무부의 보안관찰자료 비공개결정 취소하라고 판결
- () 46. 말로만 끝난 국보법 개·폐 논의 ...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처리 미뤄
- () 47. 국보법 '유죄'...'영남위'사건 15명중 7명 무죄석방, '한국사회의이해' 6년만에 무죄판결
- () 48. 인터넷방송에 첫 국가보안법 적용...인터넷방송국 '정춘' 대표 구속
- () 49. 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
- () 50. 광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 발미로 미결수에 대한 수감·포승결박 사례 증가
- () 51.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곳에까지 지뢰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져
- () 52. 에바다사태 4주년 ... 구재단측 복귀 음모 속 정상화 여전히 어려워

올해의 인권침해자와 인권지킴이

2000년 한해 인권신장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인권지킴이'와 인권침해의 주범이었던 '인권침해자'를 각각 선정해 주십시오. 선정사유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 인권지킴이 :

선정사유 :

◎ 2000년 인권침해자 :

선정사유 :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제 1749호 - 제 1768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1일(금)

제 17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지난 29일 확정된 민주당 인권특위의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서는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인권공대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은 인권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는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수를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들은 전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 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도록 할 것 △성역없는 조사권을 보장할

것 △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것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날조 등에 대

한 형사처벌규정을 둘 것 등이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 응한 민주당 대표와 정책입안자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12월 8일 당내 법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명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지난 22일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못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 규칙 제96조의 6에는 위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는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 본인이 심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에게 대신 심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략)

피고인과 그 처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만류하면서 전과도 있고 동기도 나쁘니 심문해봐야 소용없다며 심문신청권의 포기를 종용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심문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했으며, 피고인 대신 심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의 처에게 전화를 하기는 했으나 심문신청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권이 침해됐거나 그 행사에 부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2 판사 박시환

국가보안법 52돌 규탄행사

-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주간 선포식 및 기자회견
 - 12월 1일(오늘) 오전 10시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만들기 서울대회
 - 12월 1일(오늘) 오후 2시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조여오는 구조조정...노동자 저항...그리고, 공안대응

◇정부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 삼성자동차 등 49개 기업 퇴출 또는 매각결정 (11/3)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민영화 법안' 국회통과 추진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노동자대회 맞아 대학로와 종로 일대에서 시위 전개 (11/12)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공동발표 (11/24) 한전 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결의

◇노동자 투쟁에 또다시 공안대응 강화...사회관계장관회의, "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 밝히고 대검찰청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주춤했던 공안대책협의회 재가동 (11/16) ...경찰, 노동자대회에서 '각목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밝혀

2. 인권위 "올바로" "대충" 막판 격돌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11/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인권법 수용불가' 입장 밝히고, '상임위원 수 6명 확보' 등 최소 요구사항 수용 안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11/30)

3. 피의자 인권보장 진전...알몸수색 제한, 영장심사 강화

◇서울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판결 (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쇄를 채운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국가배상판결 (11/1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의 영장심사 기회를 박탈한 상황에서 구속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며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 (11/22)

4. 무차별 개발은 "인간 파괴·환경 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각계 목소리 이어져...13개 인권단체 "주민생존 위협하는 새만금 사업 중단" 요구 성명발표 (10/31-11/2) ...4개 종단 종교인들, 새만금 백지화 촉구 2000인 선언 발표 (11/14) ...새만금 주민·사회단체들, 중요공원서 규탄집회 (11/16)

5. 명줄 긴 국가보안법, 올해도 살아남을 듯

◇여야 국회의원 21명,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11/27) ...각계 사회·종교단체, '국보법 폐지 촉구' 행동 전개...대학생 6명, 한나라당사 점거 시위 (11/29) 등 국보법 폐지 주장 계속됐으나, 정치권에선 올해 안 국보법 처리 움직임 없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보법 개정은 김정일 통일선전전략에 달리는 것"이라며 극우세력 선동 (11/14)

◇국보법 개폐 논의 중에도 <살림터> 송영현 대표 등, 국보법 구속자 잇따라...국정원·기무사·경찰 등 건수울리기시 구속경쟁 (11/8, 11, 14)

인권시평

-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정주연, 11/7)
- 대우채권단과 언론의 어리석은 선택 (하종강, 11/14)
- 수첩을 지우며 (정재숙, 11/21)
- 권리 위에 잠든 자(이재승, 11/28)

기고

-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이상희 변호사, 11/11)
-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김영삼 전교조 실장, 11/16)

논평

- 인간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11/4)
- 인권을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11/11)
-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11/18)
-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11/25)

주요판결 / 공판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춘기) "매항리 시위 불법" 유죄선고 (11/17)
- 97년 인권영화제 사건 등으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 항소심서 징역5년 구형받아 (11/23)

주요 자료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미국 비밀문서 (11/15)
- <판결문>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 (2000가합35295)
-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11/23)

인권간행물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배경내) 11/9

인권일지

1. 중도실명 장애인들, 교육환경 개선 및 안마사 자격요건 완화 요구 농성 (10/31)
2. 제5회 인권영화제 폐막...<인간의시간> 인권영화상 수상 (11/1)
3. 북과공작원, "실체 인정과 보상" 요구하며 정보사 앞에서 시위 (11/2)
4. 보험모집인 노조설립신고서 반례에 민변 "재고 촉구" 성명 (11/2)
5. 송영길 의원,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하다"며 대책마련 촉구 (11/2)
6. 진주경상대 식당노동자, 125일만에 정규직 고용승계 쟁취 (11/2)
7.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로 1명 사망 (11/1-3) 건강연대 조사결과, 쪽방 거주실태 드러나...의료배제 등 심각 (11/28)
8. 이주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발족 (11/3)
9.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 품위손상" 이유로 동성애자 국감증언 거부 (11/3)
10. 인구주택총조사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시비 (11/1-10)
11.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각계 지지성명 잇따라 (11/5-8)
12. 노조인정 못 받은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 농성투쟁 (11/6)
13. 검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경찰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14. 국회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인터넷등급제 반대" 공동성명 (11/7)
15. 삼청교육대 피해자모임, "명예회복 촉구" 성명 (11/8)
16. 국정원, 연행된 송영현 씨의 가족 면회 거부 (11/8-9)
17. 수원지역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가족수사 확인" 발표 (11/8) 가족수사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11/11)
18. 인터넷 유료게임 '리니지', '김일성, 북조선' 등의 계정 삭제키로 (11/8)
19.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된 '온라인 통제' 조항, 정보법으로
20. 전교조 교사들, 알몸수색 경찰 및 경찰책임자 형사고소 (11/13)
21.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확인하는 미 비밀문서 공개돼 (11/14)
22. 녹색연합,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곳까지 지뢰 묻혀있다고 폭로 (11/14)
23. 진안경찰서 형사, 주민행세하며 사회단체 회의 염담 (11/14)
24.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추진 공동대책위 발족 (11/17)
25. 대전한라공조, 신형 자동센서 도입 ... 작업장 통제 고도화 (11/21)
26.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 씨등 5건의 의문사사건 첫 접수 (11/24)
27.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추진위, 건립계획 발표 (11/25)
28. 여성·노동단체, 골프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실태 발표 (11/25)
29. 에바다 사태 4주년, 정상화 가다 안 잡혀...민주 이사회 구성 난항 (11/27)
30. 경찰 포위망속 소과개정요구 기자회견 (11/29)

기타

-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이창조, 11/2)
-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참가기 (최은아, 11/22)
- 인권피해치유센터 건립취지와 준비과정 (11/16)
- 의약분업 합의의 의미와 의료개혁 과제 (11/17)
- (주)만도, 통합정보시스템 의한 노동감도 강화 (11/23)
- 홈페이지 운영에도 '표현의 자유'를 (기명문, 11/30)
- [연재]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11/22, 23, 25, 29)

인터뷰

- 김정아(인권영화제 기획)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영화제로" (11/2)
- 한홍구(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베트남 진실규명작업이 중요한 까닭..." (11/15)
- 김복호(인권피해센터 추진위원) "인권피해센터 설립 취지..." (11/16)
- 김갑수(삼성SDI 노동자) "삼성, 노조 썩만 보이면 짓밟아" (11/20)

국제기사

- 휴먼라이츠워치, 2000 인권지킴이 선정 (11/18)
- 인도네시아령 아체 독립시위 탄압 (11/25)

토론회

- '사회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11/29) ... 계시관 삭제원칙 논란

만화사랑방

- 인터넷방송국 국보법 구속 (11/3)
- 박정희 흉상철거 (11/10)
- 또다시 노동자에 고통전담 (11/17)
- 우왕좌왕 '보안관찰법' (11/24)
- 인권위관, 심청과 행복어멈 (11/30)

현장

-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 "떡거리부터 잠자리까지 모든 것 배제" (11/1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2일(토)

제 17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 국회앞 시위 · 국회 기습진입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회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등 9명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10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한총련 이희철 의장을 비롯한 한총련 산하 각 지역총련 의장들도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중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인권을 논하고 평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기득권유지 시도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대회'에는 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생 등 1천5백여 명이 참가해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16대 국회에 보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서한'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반대하는 수구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돼 있는 7조3항 이적단체 규정마저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범국민대회가 진행중인 오후 3시55분쯤 한국외국어대 나주철(95학

번) 씨 등 '경인총련 국가보안법 철폐 국회점거결사대' 5명이 국회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가 모두 경찰에 연

행됐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나주철, 김미현(경원대), 박은란(경원대), 김준엽(용인대), 장옥재(명지대) 씨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 및 국민연대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보선)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세계적 인권지도자를 자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오는 10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김 대통령은 제13년간 "인권의 보편성"과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 발전" 등 수준 높은 인권 관련 발언을 계속 해왔다. 특히 해외에서 무수무수 인권상을 수상할 때마다 국내의 인권개선 정책을 세계인들 앞에서 발표하고는 했다. 그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의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이제는 '공포정치'의 부활을 선언하는 공안세력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만은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50여 년간 이 법에 의해 고통받은 국민들을 또 한번 기만하는 것이며, 7조의 우선 삭제를 권고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그토록 인권 대통령의 업적으로 빛을 내리던 인권위원회마저 명목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치더니, 급기야 공안대책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심지어 '긴급조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유언비어 단속방향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마저 보이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때에 이어 또다시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며, 정부의 실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정책을 비난하는 것 역시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힘으로만 누르려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한 인권 지도자로 기억되길 바란다면, 독재자들이 썩었던 구태의연한 폭력에의 유혹을 뿌리치고,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도 힘을 실어야 마땅하다. 국민을 기만하고 강경책과 엄중 단속만을 능사로 안다면, 그 결과로 빚어지는 사태는 온전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려 가기 이전에 인권의 복원을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 민중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단식농성 들어간 중국동포들 “절망 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

"사람에 등급이 매겨져 있나요? 이 땅엔 평화도, 인권도 없어요." 지난 27일부터 서울에 있는 중국동포의 집에서 '중국동포·외국인노동자 인권피해 보상추구 단식농성'에 들어간 중국동포들은 짙은 분노를 토해냈다. 돈을 벌기 위해 고국에 와서 당한 온갖 차별과 인권침해가 몸서리처지기 때문이다. 경찰,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되레 가해자들을 싸고돌아 이들의 가슴에 더 큰 멍을 남겼다. 받지 못한 임금, 산업재해 보상 등에 대한 희소식은 몇 해가 흘러도 들려오지 않는다. 하기에 중국동포들은 이번 농성을 절망 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96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보아설비산업(주)에서 일한 주송암 씨는 아직껏 1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돈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지 벌써 3년째. 하지만 더 딱한 건 주 씨와 함께 일하다 이젠 이미 고인이 되어 버린 강호봉 씨다. 그는 15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지난 해 10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지난해 6월 빛까지 내서 한국에 온 강 씨의 부인 김영숙 씨는 영갑결에 남편 상을 당하고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낼 하비가 없어 한숨만 쉰다고 했다.

98년 4월부터 5월말까지 주차장 철근작업을 했던 장영남 씨는 막상 일을 다 마치고 돈을 받을 즈음 강제추방을 당하고 말았다. 공사를 맡겼던 사람이 장 씨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중국과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검찰에 고소도 해봤지만 공사를 맡기고 돈을 주지 않은 이는 무혐의로 풀려나고 말았다.

경기도 부천시의 동성공업사에서 일하던 최춘복 씨는 지난 해 11월 17일 프레스 칼날에 양손을 잃었지만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홍춘일 씨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용주산업에서 프레스로 작업 도중 손가락이 잘렸다. 그런데 회사는 홍 씨를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에 서명하게 해 놓고 그나마 합의금도 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을 하다 몸이 망가졌는데 보상을 못 받은 이들은 수두룩하다. 또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회사측은 중국동포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적은 돈에 합의하도록 강요하기 일쑤다.

"중국동포도 그렇지만 외국인노동자들도 정말 인간 대우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 오래 있기 싫어요." 지난 해 11월 아버지 백광기 씨가 산업재해로 죽은 후 그 뒤처리를 위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넘는 백창현 씨는 고개를 내저었다. 지난 1년, 백 씨에게 비친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겐 더 없이 굽신거리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짓밟는 곳". 이처럼 비정한 나라 한국에 백 씨는 작은 소망 하나를 남겼다. "이곳에 있는 중국동포, 외국인노동자들 합법화하고,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주영)

에이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미국에 200만 명의 재소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중국보다 40만 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진정으로 꿈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학교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감옥에 써야 합니까? .. 왜 우리를 구타하고 죽이는 경찰을 '공복'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 언제쯤 흑인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백인과 기업의 지배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까?" (2000년 '꿈을 찾아서' 행사에 아버지말이 보낸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양심수 무미아 아버지말의 석방운동단체들과 사형제도 폐지운동단체들이 연합한 무미아운동 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the Mumia Movement)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를 '사형제도 폐지와 아버지말 처형반대 운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특히 19년 전 아버지말이 필라델피아 경찰에 체포된 12월 9일은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되어 미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인권영화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버지말은 81년 경찰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다른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언도되었다. 아버지말은 당시 필라델피아 흑인기자협회장으로서, 흑인정치결사단체인 흑표범당의 당원으로서 인종차별·경찰폭력에 반대하여 활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형선고를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아버지말 석방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현재 아버지말의 인신보호청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말측은 검찰측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증거만을 인정한 주법원의 사형선고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인신보호청구를 연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형이 보류된 상태이다. 아버지말 구명운동본부 측은 60년대 흑인 인권운동 과정에서 많은 차별법안들이 위험 판결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구명운동과 국제여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버지말 구명운동은 단지 일개인의 구명운동을 넘어 흑인, 라틴계 미국인에 대한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교도행정에 대한 비판, 사형제도의 빈번하고도 차별적인 사용에 대한 비판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역주민 중 흑인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 중 흑인은 무려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무미아 주간 이후에도 2001년 1월 국제엔네스터의 아버지말 관련 보고서 발간, 2월 23일 무미아를 위한 청년 학생의 날, 4월 무미아의 저서 '검열받은 모든 것' 발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5일(화)

제 17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지난 1일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아래 국과수)는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파일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범죄자 유전자정보 은행'의 설립을 이번 학술 행사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경찰이 추진중인 이른바 '유전자은행'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유전자정보를 컴퓨터파일로 저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과수는 이미 91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약 2만 건 이상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관련 자료를 '공문서 보관규칙'에 따라 '감정서 양식'으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는 별도로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검 과학수사과 역시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94년에 이미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강도, 강간, 살인, 절도, 마약 등 11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된 기결수로부터 채혈"하는 방식으로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게끔 되어 있다. 특히 이렇게 수집된 유전자정보는 '범죄수사' 목적 외에 '행정적 목적'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있다.

기술적 준비 완료...법 제정만 남아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유전자은행 설립의 취지는 '과학수사'의 도입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사건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자신의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잡히게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므로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유전자채취가 시행되면 일단 강력법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추후 모든 범죄자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관계자에 따르면, 유전자는 행 설립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관련 법률만 제정되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관할 다름으로 인해 유전자은행의 설립이 미뤄져 왔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 조정만 이뤄지면, 언제든 급류를 타고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범죄자 인권침해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유전자채취가 합법화될 경우, 예상되는 인권침해 소지는 엄청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은행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

회사 등 민간으로부터 정보유출의 유혹이 계속되는 등, '또 다른' 목적으로 유전정보가 전용될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과수가 '유전자 분석이 유전정보와 무관한 DNA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전정보와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확보된 DNA를 이용하면 질병을 비롯한 다른 유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결국 다각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유전정보를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반면, "홍악법에겐 당연한 조치다. 홍악법이 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경찰측 시각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씨는 또 "유전정보 수집이라는 발상은 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그 책임을 개인의 유전적 성향으로 돌리려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여론검증 없이 검·경 일방독주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갖는 사안이 오로지 경찰과 검찰에 독점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의 검증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창조]

'2000 인권 10대뉴스' 설문응답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이 '독자가 뽑은 2000년 10대 인권뉴스'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은 6일(수)까지이나, 가급적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별지 참조)

◎ 이미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 제차 설문지가 발송된 점은 양해해 주시고 설문지를 못 받은 분은 연락바랍니다. 응답은 팩스(02-741-5364), 전화(741-5363), 이메일 중 편한 방법을 택해주시오.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당황해서 갑자기 백지처럼 기억이 텅 비어 버려 부모가 아무리 일러준 주소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미아가 된다고.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한 아이와 마주쳤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다. 나는 아이보다 어쩌면 더 에타는 심정으로 보호자가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아이의 부모인 듯한 여성이 저 계단 위쪽 벽에 몸을 숨기고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여서 아이는 계속 허둥대며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갈 때까지 지하철도 놓쳐 가면 지켜보았다. 한 20여분이 지나자 그 여자가 아이에게 나타났으나 아이를 껴안아서 달래는 것은 고사하고 겁에 질린 아이를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엄마 말을 안 들들래?"부터 "웬수같은 X"라는 등, 도무지 4살짜리 아이가 이해할까 싶은 말을 마구 늘어놓으며 이것도 모자라 울지 말라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었다. 나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렸다. 달려가서 그 여자로부터 아이를 빼앗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단지 분노의 수위만 높이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무 것도 개입할 수 없었고 개입할 용기도 내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법으로 처벌받게된 마당에. 여성운동을 하며 가족이 얼마나 여성이나 아동, 노인에게 똥쓸 짓을 많이 하는 공간인가를 아는 내가... 무기력하게 돌아선 내가 오늘도 땀땀치 못하다. 달려가서 악다구니라도 쳐 줘야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어제 TV의 한 프로에서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아동학대가 다뤄졌다. 도무지 사람이 했을까 싶은 만행이 아이들의 몸에 심한 상흔으로 담겨있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이제 아이들이 불쌍해서 눈물만 툭툭 흘릴 일이 아니다. 절대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되어서도 안 되는 범죄고 죄악이다.

여기에는 뿌리깊은 연령차별의 유교적 전통이 교묘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의 연령차별에 수 없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른공경'의 미덕 앞에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의 부당함에 대들 수 없는 것, 전철에서 아무리 큰소리로 전화하는 할아버지는 봐도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 어쩌다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면 "패륜아"로 지목되기 일수이다. 연령차별의 극단을 보여주는 아동학대에 해결은 짓밟힌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연령차별에 둔감한 우리들의 인권 민감성을 키우는 계기로서도 중요하다. 그 아이들의 눈에 생기를 준다는 것은 단순한 아동보호가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존중'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권의 출발이므로...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1. 절망 끝의 마지막 선택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산업재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서울에 있는 '중국동포의 집'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11/27)

2. 이젠 DNA정보마저 달라하네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파일 구축' 국제학술포럼 개최(12/1) ...범죄수사 과학화 명분 아래, 개인 유전자정보 수집·관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져...사회단체 인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12/1) 종교인들, 국회 앞에서 기도회 개최(11/30) 대학생들, 국회본관앞 기습시위 전개(12/1) 대학생·사회단체 활동가들 1천5백여명, 국회 인근에서 집회 개최(12/1), 대학생들, 한나라당사 점거농성 시도(11/29) 여야의원 21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11/27) ...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의 국보법 개정 포기하기로(12/3)

4. '차포 떼인' 인권위 수용불가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 ...민주당 안이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수용한 반면, 상임위원 수를 제한하는 등 인권위의 실효성을 후퇴시킴에 따라 인권단체들 '수용불가' 선언(11/30)

5. 어떻게 이런 발상을?

경찰, 파업 조장·시장경제 문란·정부 금융정책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폭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폭방 거주민 의료·사회보장 실태 조사결과 발표...주민들 영양실조 가능성 높고, 의료혜택·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11/28)

7. 4년 흐른 에바다 사태

4주년 맞은 에바다 사태...구 재단측 인사들의 끈질긴 복귀의도로 인해 민주이사회 구성 난항 거듭(11/27)

8. 노예매춘 업주 단속...업주 뒤편 누구?

경찰청, 노예매춘 특별단속에서 감금매춘 업주와 인신매매 사범 등 83명 구속(11/2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6일(수)

제 17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신관련법들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급표시를 하게 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규정 △대량의 신호'를 동반한 온라인 시위 처벌 규정 △사업자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불온통신 삭제 규정 등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정보운동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등급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심사와 관련해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명문)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민주당 서영훈 대표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흥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만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7조 3항(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개정이나 삭제냐를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처리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당론은 7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보법 국민연대는 명동성당에서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7조 3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태섭)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로 일관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래 협상장소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외교협회였다. 이에 5일 오전 9시경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외교협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전날밤 협상장소를 정부종합청사로 옮길 것을 결정한 뒤였다. 외교부는 "외교협회가 외진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에 시위대는 오전 10시30분 경부터 정부종합청사로 이동했다. 그러나, 정부종합청사로 모여든 시위대는 도착하는 즉시 대기중이던 전투경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말았다. 결국 경적과 호루라기 시위로 이날의 시위는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양국협상이 끝난 뒤인 오후 4시경에야 포위망을 풀었다. 이날 전경들에게 포위된 가운데 시위를 벌였던 최재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씨는 "한국정부로서는 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움직임을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미국관련 시위를 무조건 원천봉쇄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6일 오전 9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다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노근리, 매항리, 파주미군기지 인근 주민들과 함께 '노근리 학살 왜곡조작·소파 전면개정 미국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이창조)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발표, "정부는 범죄자 유전자채취 및 관리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전자채취 합법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범죄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는 것은, 비록 범죄자라 할 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유전정보의 채취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

둘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체제를 갖춘 나라로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감시와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유전정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점. 동시에 정부가 정말로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재범율을 낮추고자 한다면 제도 개혁과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셋째, 만약 법률이 시행되고 기결수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하게 된다면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다른 여러 유전 정보과학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 유전 정보는 향후 다른 목적(고용, 사회적 차별, 행정적 목적 등)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이용 행위는 전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인권적' 시각에서의 검토와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창조)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 제8조를 개정할 바 있다. 알몸수색의 대상을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사범 △금지물품 휴대 의심자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유치규칙' 아래서도 인권침해 소지는 여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4일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알몸수색은 개인의 수치감을 극대화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행정법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보완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동국대)는 "형사소송법 상 구속영장 발부와 알몸수색은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바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8조만으로도 알몸수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죄명과 전과, 그리고 체포시의 상황 등을 통하여 가해나 자해의 소지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정정재 경찰청 수사과장은 "최근 일어난 알몸수색 사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선에서 66%만이 알몸수색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자의적인 남용으로 인해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알몸수색을 시행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위반 경찰 및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는 인권침해 근절방안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명문)

국정감사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3년차 인권지표와 정책을 모두 모았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에는 △비정규직·파견노동자 관련 노동통계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현실 △유전자감식제도 추진현황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 61,100원 ◎노동환경위 57,100 ◎보건복지위 16,600
- ◎문화관광위 2,700 ◎행정자치위 30,300 ◎외교통상위 38,200
- ◎교육위원회 38,200 총액 250,500

자세한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info)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상임위 자료를 신청하시면 제본해 드립니다. (문의: 최은아 02-741-5363)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지로번호 7618848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7일(목)

제 17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관계법조차 논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미 1차 구조조정으로 20대 80의 사회로 쪼개진 빈부격차는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분의 구조조정 어디에도 재벌개혁, 부패관료 청산, 자립경제와 같은 진정한 경제개혁은 없다”고 논박했다. 민주노총은 “재산을 불리기에 혈안이 된 재벌과 부유층의 배부른 시국선언”이라고 힐난했다. (≡ 2면에 관련자료)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5일 “못사는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는 (경제계 시국선언을 한 집단)들이 보여주는 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퇴출노동자들의 텅 빈 통장잔고는 무분별한 소비의 결과인가”고 묻고, “일자리를 잃어도 일가족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회장님’들의 눈으로 민중들의 생존을 향한 투쟁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경총·상의·중소기업·무렵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5일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노동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도 반대한다”며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감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은 “구조조정 작업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저지·퇴색되고, 사회 각 이해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에서 비롯된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또 정치권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목소리 큰 이해집단의 주장이 진정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국민의 민의인가를 통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노동계에 “투쟁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보선)

학생 ‘관리’ 도구, 교칙을 해부한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최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학교 교칙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칙이 청소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은 12월부터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에 들어간다. ‘무스사용 금지, 끈 있는 운동화만 허용’ 등의 규제 근거는 학교교칙. 바로 청소년들의 권리 주장과 학교의 선도·징계의 접점은 다름 아닌 교칙이다.

‘머리끈과 머리핀은 검정색·갈색만 허용한다’(중학교 용의복장 규정), ‘양말은 살색 스타킹 위에 교내에서 규정한 학교 이름이 새겨진 흰색 커버 양말만 신는다’(여고 용의복장 규정)처럼 구체적 일상부터 교칙은 시작한다. 그리고 ‘학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징계’(학교 선도규정)한다는 모호한 규정도 있다.

교칙은 학생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선도·복장규정 등이 학생수첩에 일부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은 지난 5월 전교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고생 935명 중 ‘교칙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9%, ‘잘 모른다’와 ‘들어 본적 없다’는 응답 학생이 64%를 넘는 것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적 학교공동체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교칙 상을 제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성세대와 학교당국의 인식을 높이는 것 등을 목적으로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관단체와 분석위원이 캠페인 동안 수집한 교칙을 청소년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분석, 내년 5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석위원으로는 강경선(방송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교칙 알려줄 곳 : 학생연합 02-755-8025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전자우편 ymw9811@hanmail.net / youth@sarangbang.or.kr [고근예]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이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선, 남궁석(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중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 해 오던 온라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7일에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홈페이지(www.kyh21.com)의 ‘토론타’에서 온라인 시위를 벌인다. (심보선)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벼 100여 가마를 탱크로 짓밟아 놓고도 10만원을 보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식수로 쓰는 하천에 우라늄 탄을 쏘는 군대가 한국을 보호하는 군대입니까?” 소파협상이 진행중인 6일 파주시 군내면 스토리 사격장 주민들이 용산 미군기지로 집결해 토해낸 질규이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스토리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한미행협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토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유지였던 농지에 미군이 사전 예고도 없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수확을 앞둔 벼를 썩히고 있다. 군내면 주민들은 미군과 씨름하며 철조망을 견고 들어간 후 포탄이 떨어지는 타겟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미군이 설치한 ‘출입금지’ 팻말을 제거하고 ‘미군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설치했지만 미군에 의해 하루만에 철거당하는 등 주한미군의 통제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 사격장은 상호방위조약 4조 ‘합중국은 대한민국의인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소파개정 협상에는 공여조항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민 조남용 씨는 “미군의 포사격으로 형님을 잃고, 이제는 삶의 터전까지 잃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기명분)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지로번호 7618848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5일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위의 글)과 같은 날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발표한 논평(밑의 글)을 읽는다. 논리구성엔 무리가 없는 선에서 ‘중략’ 처리했다. (편집자 주)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

경제5단체장은 최근 우리의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감에 대한 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중략) 이에 경제계는 (중략) 다음과 같이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리 입장을 천명코자 한다.

첫째, (중략)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셋째, (중략)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투쟁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중략) 넷째, 우리 경제계는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인내와 자성을 통해 경제회생 노력에 경주할 것이다. (중략)

이에 우리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현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5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생략) / 2.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을 원칙을 지켜 추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 / 3. 정부는 국가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일상화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것. / 4. (생략) / 5.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0. 12. 5

〈경제5단체장의 집단이기 시국선언〉

(전략) 경제5단체장들은 지금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이 저소득층이나 극빈층,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못사는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는 당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요구이다. (중략) 내일 일자리를 잃어도 일가족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회장님들의 눈으로 민중들의 생존을 향한 투쟁을 호도하지 말라.

오늘 선언에서 ‘경제계가 뼈를 깎는 인내를 하겠다’는 표현은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를 자르는 수고를 감내하겠다고! 5단체장이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결국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이 지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자르고, 좋아지면 고용하고, 그나마 월급수준도 형편없는 기업주의 천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서도 노동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경제5단체장의 요구는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중략)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보다 강화된 노동법을 요구하라. (중략) 경제5단체장은 오늘 선언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아울러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주의 대변자 역할을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충고한다. 2000. 12. 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8일(금)

제 17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최초로 도급, 용역, 파견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며 1백76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채운기)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달 30일 시화 물류센터를 점거한 데 이어, 11월 2일 기흥 물류센터를 점거하는 등 의류유통을 지지하면서 파업 강도를 높여왔다.

이랜드 그룹은 파업 74일 만에야 교섭에 임할 정도로 노조를 철저히 무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11차례의 교섭에 있어서도 전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실권을 쥐고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은 기독교 신앙을 들먹이며, 노조를 '순종하지 않는 악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데다, '손해

를 보더라도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초지일관'의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랜드 노조와 민주화학생유연맹(위원장 오길성, 황영호)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박희장 "손해보더라도 노조 무력화"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98년 이후 절반에 이르는 노동자를 정리하고 3년간 임금을 동결, 삭감, 반납시킨 결과 99년에는 약 3백억의 순이익을 낸 이랜드 그룹. 계약직, 연봉직, 아르바이트, 파견, 도급, 용역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랜드에 모여 있다. 2천5백여 노동자 중 8백여 명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이랜드 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조는 특히 파업 후 11일 만인 6월 27일 도급, 용역, 파견 노동자도 조직대상에 포괄하기로 규약을 변경해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홍윤경 교육선전분과장은 "파견, 도급, 용역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정규직이 가까운 시일 안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될 비정규직을 어떻게 외면하겠다는가"라며 규약변경의 취지를 밝혔다. 홍분과장은 7일 "5개월에 이르는 파업으로 쌓이 떨어진 조합원도 있고, 차비가 없어 집회에 나오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했지만 여기서 싸움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각오를 밝혔다.

노조, 파견노동자도 조합원 인정

현재 이랜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임금을 50만6천원에서 72만6천원으로 인상할 것 △4년제 동결, 삭감된 임금의 인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박성수 회장과 직접교섭 등으로 요약된다.

민주화학생유연맹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도 지난달 20일과 28일 각각 특별 결의를 통해 이랜드 노조의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지난 달 8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박성수 회장에게는 10월 2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지금도 신규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보선)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최준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가)

동티모르의 수도 달리의 해변에는 유조선만한 배 두 척이 떠있다. '올림피아 호텔'이라고 이름 붙은 이 배는 주로 외교관이나, 유엔직원, 또는 호주의 사업가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배의 카지노의 불은 밤새 꺼질 줄 모른다. 반면 달리 시내의 밤 10시만 되면 도시전체가 암흑으로 빠진다. 그 배에서 밤새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면서 동티모르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달리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티바르 지역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달리 시내에서 약 30분 가량 떨어진 이 매립장엔 거대한 쓰레기더미들이 산같이 쌓여 있다. 우리를 안내한 칼리토의 설명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점령 당시에 이곳은 재활용시설까지 갖춘 꽤나 정형적인 매립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쓰레기더미가 되어 버렸다. 그곳은 유엔 과도행정기구(UNTAET) 건물에서 나오는 거대한 쓰레기들이 아무런 감시나 처리없이 버려지고, 그 쓰레기를 뒤져 쓸만한 물건들을 찾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 아이들이 쓰고 버린 물건은 또 다른 아이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곳의 물건은 중고품이 아니라 골동품쯤 될 거다"는 칼리토의 자조적인 설명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아태지역동티모르연대 사무국의 머시는 이곳의 사진을 찍어 담당 그린피스에 보내자고 제안했고, 맘 좋은 버마 아저씨 데디는 UNTAET를 불태워 이곳에 갖다 버리자는 말로 비참한 슬픔을 대신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결정한 이후 동티모르에서는 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만행으로 동티모르 전역의 약 80%가 파괴되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거의 모두 민병대의 만행으로 불에 타 앙상한 기둥과 벽만 남았고, 가족과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약 50만명의 주민들(전체 인구는 약 70만 정도)

은 민병대의 만행을 피해 서티모르로,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인근의 다른 섬으로 피신했다. 그 후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고 UNTAET가 들어서고, 동티모르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UNTAET가 들어온 지 일년이 지났지만, 불타 파괴된 집과 건물들이 복구되는 광경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저 함석과 널빤지 조각, 또는 커다란 야자수 잎으로 열기설기 엮고 살아갈 뿐이다. 70%가 넘는 주민들이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히 쉴만한 장소도 없어 하릴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학교나 병원, 전력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들도 태부족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열악해 많은 국민들이 달리로 모여든다고 한다.

동티모르는 지금도 전쟁 아닌 전쟁 중이다. 서티모르로 피신했던 주민들 중 약 10만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학살과 파괴에 가담했던 민병대들을 체포하거나 재판하거나, 혹은 잡아갈 수 있는 사법절차나 시설마저도 없다. 이제 막 영국에서 파견된 판사들에 의해 약 10명의 젊은이들이 사법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UNTAET의 행정력으로 는 무망하기만 하다. 병원시설도 UNTAET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

기는 하지만, 그것마저 주로 UNTAET 직원들이 차지할 뿐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는 많지 않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국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미비한 병원에서 간신히 치료를 받을 뿐이다. 현재 동티모르인 의사는 모두 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3명 정도의 의사가 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가 10만명당 12명, 호주가 10만명당 240명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 행정, 보건의료, 농업, 사법, 치안 등 모든 공적, 사적 영역을 인도네시아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동티모르에서, 이들이 모두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이후 사실상 동티모르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였다.

동티모르는 지금 국가와 시민사회를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함께 나눌 경험과 자원이 너무도 부족하다. 현재 동티모르에는 약 15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들과의 교류이다. 그들은 아무런 토대도 없는 가운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반면 한국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경험의 내용마저도 비슷하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전투병의 파병을 넘어서,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우리의 승리와 실패의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티모르의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온 것이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배급

유니세프 제작/ 가격 20,000(우편료 별도)

많은 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배급이 중단됐던 인권 비디오 <희망>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 옵니다. 입학전 아이들은 물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권교육 교재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희망>은 98년 공표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 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단편애니메이션입니다.

4-10개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 없이 그림과 음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보시기에 더 없이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문의: 02-741-5363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9일(토)

제 17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여야 의원 72명이 8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오는 11일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천명한 것은 ‘인권위 설치’ 문제를 더 이상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해 만든 이 법안은 법무부 안에 대해 중대한 차별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위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인권기구의 설립이 현재의 법안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이 설립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장식물이거나 국민의 정부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성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때까지 민주당 39명, 한나라당 32명, 자민련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다음주 공동

발의 때까지 참여 의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창조]

이랜드 노조원 연행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이랜드 노조원들이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8일 중계아울렛 점거투쟁을 전개하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관련기사 본지 12월 8일자).

채운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등 이랜드 노조원 60여 명은 8일 아침 6시 40분 경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아울렛 전산실을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도급계약 일방해지 중지’ 등을 요구하다가 이날 저녁 8시 30분 경에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노조는 회사측을 협상대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5개 지점의 매출이 집계되는 중계아울렛 전산실 점거를 결정했다. 전산실 점거에 참여한 이랜드 노조 송석규 중계분회장은 “여기 온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아기를 두고 이렇게 싸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며 “회사측이 당장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분회장은 또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 대체인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회사를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며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호소했다.

전산실 점거농성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부터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 노조와 민주화학생유연맹은 회사측과 협상을 가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회사측은 협상 도중에 이미 경찰력 투입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한편 이랜드 노조는 수배중이던 채운기 직무대리가 연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집행부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릴 방침이다.

[심보선, 이주영]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앞두고 19개 인권단체들은 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지도자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인권개선은 커녕,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8일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요지다. [편집자주]

● 인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미뤄지거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없는 약체 인권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보안법도 핵심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등)을 존속시킨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제정과 개정으로 나아갈 것과 연내 제정, 폐지를 촉구한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개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생존권 수호를 주장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열어야 하며, 아울러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 19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이라도 인권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절박하며,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담기지 않은 어떤 화려한 언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1)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2분항)에 대해 설문작업을 벌여 ‘2000년 인권 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1백6명의 독자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매항리 폭격장 폐쇄투쟁(77.3%)

2000년 5월 8일, 미 공군 전폭기의 오폭으로 매항리 주민 6명이 부상을 입고 농가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매항리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52년 미군 전용사격장이 들어선 이래 오폭사고로 사망한 주민만도 10명. 임산부의 짙은 유산을 물론이고 폭격 굉음으로 인한 자살, 죽어버린 갓벌과 증금속으로 오염된 통곡의 땅 매항리.

이후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들불처럼 번졌다. 마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고, 종교인사 등이 폭격중단을 요구하며 사격장을 점거했다. 또 각계인사 2백여 명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미합동조사단이 “폭탄투하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을 때엔, 분노한 매항리 주민 3백여 명이 화성군청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잇따른 항의행동 과정에서 전민규 주민대책위원장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되자, 국제 평화운동가들은 한국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질망을 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매항리 주민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KNCC 인권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반년 여에 걸친 강고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매항리폭격장은 폐쇄되지 않았다. 오히려 “매항리는 소수의 문제”라는 문일섭 국방차관의 망언에서 엿보이듯 정부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56.6%)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미군측 보고서가 11월 14일 공개됐다. 베트남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이 새 국면을 맞는 순간이었다.

99년 10월 ‘한겨레21’에 의해 공문화되기 시작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작업’은 올 1월 ‘베트남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캠페인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참전 용사의 명예를 짓밟고 국익을 해치는 짓”이라는 반발도 일었고, 6월 29일 ‘고엽제 전우회’의 한겨레신문사 난입사건, 10월 13일 참전용사들의 방해로 인한 학술심포지엄 무산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장도는 험난했다. 정부 역시 ‘베트남 정부도 덮어두는데...’라며 이 문제에서 발을 빼기에 바빴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은 학살된 베트남 민간

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학살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문서의 공개를 비롯한 진상규명작업과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에 기꺼이 나서야 할 때다.

비전향장기수 63명 복송(55.6%)

2000년 6월 13일, 분단 이후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 이 만났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이어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땅으로 돌아갔다.

비전향장기수의 복송은 인도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분단 상처의 치유와 남북 화해의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요청됐던 문제다. 특히 93년 리인모 씨의 송환 이후, 전쟁포로 출신인 김인서 씨 등도 복송을 요구하면서 문제제기는 본격화됐다. 비전향장기수 대부분이 전쟁포로에 해당하는 데다,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분단의 희생양인 이들의 송환을 통해 남북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발에 불과하다. 이른바 ‘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전향장기수 복송과 함께 ‘북과공작원’ 문제가 전면에 제기됐다. 11월 들어서는 북과공작원 출신들이 직접 “실체 인정”을 요구하며 추모행사와 집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여전히 ‘북과공작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롯데호텔·사회보험 파업 무력진압(51.8%)

6월 29일 새벽, 경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호텔롯데 노조원들의 파업농성을 진압했다. 이어 7월 1일 사회보험노조의 농성을 같은 방식으로 진압했다. 대테러부대인 숭개부대까지 앞세운 전광석화 같은 ‘작전’이었다. 경찰은 장애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의사들의 폐업에 전면공공하던 정부는 호텔롯데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을 ‘불법과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경찰봉과 섬광탄으로 응수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버티면 경찰이 물러갈 줄 알았다”는 호텔롯데 여성노조원의 ‘순진한’ 생각도 무참히 깨졌다.

김대중 정부는 호텔롯데와 사회보험노조 파업에 대한 무력진압을 통해 하반기 구조조정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이후 정부는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2)

2차 퇴출 결정과 한전민영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 조정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편, 호텔롯데 노조는 강제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파업대 오를 굳건히 유지해 부족하나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길을 열었고, 여성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노동자들이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치열한 진압의 경험 속에서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오만방자 주한미군...소파 투쟁 확산(39.6%)

을 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은 설새 없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1월 5일 미군은 파주미군기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를 접하자, 미군 군인과 군속, 장비들만 따로 대피시킨 뒤 7시간 후에야 그 사실을 한국군에 통보했다. 한국주민의 안전은 아랑곳 않은 채.

이어 군산 미공군비행장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 미군의 환경범죄 행각이 잇따라 폭로되었다. 그 절정은 7월 13일 녹색연합에 의해 폭로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용산 미군 부대는 시체방부처리용 약품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임을 알고도 이를 한강에 무단방류했던 것이다. 미군은 사건이 발각된 후에도 오만한 자세로 사과조차 미루는가 하면, 무단방류 지시자에게 고작 45일 감봉처분만을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을 조롱했다. 노근리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여전히 '우발적 사건' 운운하며, 사과와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오만한 자세로 일관했다.

일련의 미군범죄에 분노하면서 각계 민중들은 불평등한 소파(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주한미군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국내 사회단체 인사들은 미국 워싱턴까지 달려가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12월 들어 소파개정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또 다시 문제해결을 미루고 말았다.

'사람'대접 못 받는 이주노동자(39.6%)

가장 밑바닥, 3D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비정규직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다. 국내 체류중인 25만 이주노동자 중 60% 이상이 미등록노동자로,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채 강제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올 4월 네팔인 이주노동자 찬드라 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위치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한국말이 서툰다는 이유로 행려병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그가 무려 6년만에 풀려났던 것이다. 또 몽골인 아르갈 씨는 5월 철도협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

이 쓴 총에 턱을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10월 살인용 의자로 지목된 인도네시아인 이라완 씨는 과출소 지하실에서 가혹수사를 당했으며, 스리랑카 출신의 한 부부는 가평의 농장에서 퇴사도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으며, 노동3권 역시 형식적으로만 보장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날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동성애 이유로 쫓겨난 홍석천씨(38.6%)

지난 9월 말 한 월간 여성지와 스포츠신문은 탤런트 홍석천씨를 '동성애자'라고 폭로했다. 동성애 사실을 사적으로 시인한 홍 씨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으나 그는 곧 그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연예인이 커밍아웃한 사건이었다.

그가 커밍아웃하자 MBC와 KBS 제2라디오는 홍 씨에게 출연중지를 통보했다. 이유는 "사회전체가 합의한 상식선에서 동성애의 방송출연은 곤란하다"는 것. 그러나 상식선은 잘못 그어놓은 차별의 선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회단체·법조·여성·문화·언론·정계 인사들로 구성된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동성애자 문제는 사회적인 억압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밝히며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온라인에서도 큰 이슈가 된 홍석천 지지운동은 현재까지 수천 명의 네티즌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홍 씨의 커밍아웃은 동성애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훑쳐보기'에서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방향을 전환시킨 사건이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33.9%)

10월 19-20일, 3차 아셈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중행동이 잇따랐다. '자유화와 시장개방'을 골자로 하는 아셈의 핵심의제는 자본의 요구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공공영역의 해체로 귀결된다. IMF난국을 경험한 우리 민중들로선 더 이상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3)

생존권 후퇴를 좌시할 수 없었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뱅뱅사거리를 일대에서 1만명의 노동자, 학생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오후 올림픽공원에서는 민간단체포럼과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민중행동위원회가 공동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가 시애틀, 프라하로 이어져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열기를 확인하기에 미흡했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 민중의 경고를 가장 대중적으로 드러낸 현상이었다.

한편 정부는 3만에 이르는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와 장갑차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시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불허하는 등 강경 대처로 일관했다. 아셈반대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위도 잇따랐다.

과거청산 첫 발, 전도는 미지수(33%)

4백22일 간에 걸친 유가족들의 농성 끝에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두 법 모두 제정과정에서 취지가 많이 훼손돼, '시행령' 만이라도 올바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이를 위해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민간의 요구가 일정하게 수용된 시행령이 7월 통과되면서 비로소 두 법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9월부터 민주화운동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차로 8천9백여 명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1월, 5건의 의문사 사건을 접수했다. 1차로 접수된 의문사 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당시 서울대 교수)씨 사건 등으로, 향후 의문사진상규명작업의 성과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는 민간과 정부측에서 각각 추천된 조사관들이 참여함으로써, 민관이 공동으로 사건진상규명에 나서는 전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사기간과 조사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기관의 '판지'를 극복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사폐업 사태...국민건강권 침해(32%)

의약분업 실시에 반발해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폐업사태로 온 국민이 혼란을 치렀다. '의약분업의 왜곡' 등이 폐업의 표면적 이유였지만, 속사정은 '옛날만큼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의 폐업사태는 11월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할 때까지 지속됐다. 결국 의사들의 폐업으로 인해 치료를 거부당하는 환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했다. 심지어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보

수가를 인상한 뒤, 그 손실분을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당초 의료공공성의 확대를 의미했던 의약분업의 취지는 퇴색하고, 국민건강권의 침해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의료정책이었다.

올해의 인권지킴이

1위. 매항리 주민대책위

어려운 조건에서도 미군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생존권 투쟁을 전개해 미국의 인권침해 실상을 공론화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소파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문정현 신부, 이름없는 시위대 등 매항리 투쟁 관련자들도 동시에 거론됐다.

2위. 베트남 진실규명운동 관계자

베트남 양민학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한겨레21>의 구수정 통신원과 베트남 진실위원회 활동을 이끈 국제민주연대가 인권지킴이로 뽑혔다.

3위. 홍석천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홍석천 씨는 특히 '아웃팅'을 당하고도 '추문수습'이 아닌 '인권의 관점'을 명확히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4위.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두발규제를 철폐시키면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 주장하고 행동한 점이 평가됐다.

올해의 인권침해자

1위. 주한미군과 미국정부

한강독극물 방류사건과 매항리폭격훈련 등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이, 주한미군은 올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권침해자로 뽑혔다.

2위. 정형근

예년에 비해 '특출한 활동'이 미미했던 점에서 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그만큼 정 씨는 대표적인 반인권 인물로서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 씨가 인권가해자로 지목된 이유로는 △고문 가해자임에도 국회의원에 도전한 사실 △무책임한 폭로로 정치혐오증 유발한 것 등이 지적됐다.

공동 3위. 이무영 경찰청장·김용갑·의사단체

이무영 경찰청장은 롯데호텔 파업 무력진압 등을 이유로, 김용갑 씨는 '노동당 2중대' 발원 등 수구세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의협과 의쟁투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집단폐업 사태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한 이유로 인권가해자로 지목됐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12일(화)

제 17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이젠 필요없다” 일방적 퇴출

벤처회사, 병역특례노동자 내몰아

한 벤처회사가 최근 일방적으로 병역특례업체 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주)멀티데이터시스템의 이태화 사장은 지난 11월 24일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병역특례 노동자들에게 있어 특례업체 취소가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군인 신분

에 해당하는 병역특례자들은 해고 후 6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측의 이번 조치로 개발부에 근무하는 9명의 병역특례 노동자가 일터를 잃게 됐다. 노동자들은 특히 이 사장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몰래 병무청에서 취소절차를 마쳤으며, 행정처리가 마무리된 뒤 닷새 후에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상호 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 경영진의 무능을 지적한 문건을 사장이 입수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계기였다”며 “병역특례업체 취소는 노조를 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태화 사장은 “노조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고, 병역특례자들이 주로 맡아왔던 개발부 사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 직원 18명 가운데 15명이 노조 조합원이며, 그 중 11명이 병역특례노동자다.

멀티데이터시스템에서는 지난 2월 노조가 결성됐으며, 노사간의 단체협상이 진행중이던 4월말에도 회사측에서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하려 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5월 4일자). 당시 사태가 언론에 공개되고, 주주들이 신속한 해결을 주문함에 따라 회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엔 결국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한 것이다.

오덕영 노조 부위원장은 “이런 사례가 일반화되면 병역특례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의 병역법에는 병역특례업체가 일방적으로 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해고통지를 받은 9명의 병역

특례노동자 가운데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2명과 회사를 이미 떠난 2명을 제외한 5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회사로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삼성동 무역센터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해고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들과 함께 다음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창조)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활동가는 6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은 집회 참석은커녕 경찰의 봉쇄로 길 위에서 꼼짝도 못한 채 2시간 가량 강제 억류당했다. 특히 일부가 귀가의를 분명히 밝히며 억류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집회가능성이 없음에도 경찰 30여명이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되며 “경찰은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소위 ‘포착’이라는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은숙 사무국장은 “경찰에 의한 노상 감금은 희귀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며 “잘못된 공권력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심대섭)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2> 배급

유니세프 제작/ 가격 20,000(우편료 별도)

- ◎ 인권 비디오 <희망>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 옵니다.
-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 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와 캐나다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단편애니메이션입니다.
- ◎ 유아 및 초중고생의 인권교육 교재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 ◎ 전세계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 없이 그림과 음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문의: 02-741-5363 (유혜정)

마중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구조조정’을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기업 경영인과 정부 관료들의 제한된 지식과 부족한 상상력이 겨우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참 많다. 구조조정 없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 방법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우자동차 문제를 비롯해서 요즘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절대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옳은 처방이 아니다.

‘정리해고’란 수많은 기업 구조조정 방식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리상으로는 가장 최후에 선택되어야 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네 가지 중 두 번째가 바로 ‘해고 회피의 노력’인데 이는 글자 그대로 “기업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기업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다가 하다가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조정 수단이 바로 ‘정리해고’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리해고에 관한 이러한 법리가 오랜 세월을 거쳐 확보된 것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생존 수단을 빼앗는 일은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 외에도,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친 우리 사회가 ‘정리해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인도주의적 원칙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 타당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책 몇 권 읽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중한 역사적 경험들이 그런 교훈으로 남아 법제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광범위한 국민 대중이 구매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내수를 창출하지 못하는(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각각 다른 표현이다) 경제정책은 놀라운 다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인과 정부 관료들은 박정희 시대 이래 지금까지 그 실패를 계속 되풀이해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가장 짧은 기간의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자랑하다가 우리나라를 ‘빈 깡통’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김대중 정부가 ‘가장 짧은 기간의 가장 빠른 경제위기 탈출’을 자랑하다가 3년만에 처절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모두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주간인권호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1. 도망간 회장 놔두고, 만만한 노동자들만 경찰,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중계아웃렛’ 전 산실을 점거한 이랜드 노동자들 전원 연행(12/8)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수배중인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은 미국에서 유유하...

2. 분노한 농심! ... 검찰, ‘사법처리 만병통치’ 농민 수만명 전국 각지에서 시위, 농가 빚 해결 등 촉구(12/7) 검찰, 여의도 농민시위 원천봉쇄(12/8) ... 분노한 농민들, 고속도로 점거...검찰 공안부, 시위참가자 전원 의법조치 지시

3. 미국정부 ‘베베라’ ... 한국정부 ‘숫! 입닥쳐’ 소파개정 협상, 미국측 버티기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나(12/7) ...사회단체들, 소파 전면개정 요구하며 방배동 외교협회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 / 검찰, 광화문 시위봉쇄 위해 사회단체 활동가들 거리에서 불법 억류(12/6)

4. 이젠 그들 앞에 고개 숙이시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일본 동경에서 개정, 남북 공동기소장 제출(12/7-10) / 한·일 교회협의회, ‘철저한 과거사 청산’ 촉구(12/7) / ‘2000년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히로히토 등 전범기소, 일기 등 만행증거물 제출(12/8)

5. 배부른 시국선언 경총 등 경제5단체 시국선언,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12/5)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재벌과 부유층의 배부른 시국선언”이라 비판

6.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에 대한 일방적 규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칙의 올바른 상을 제시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까지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에 돌입(12/6)

7. 한미 공조, 노근리 2차 학술 한미 정부, ‘노근리 발포명령은 증거불충분’이라고 잠정합의(12/8)

8. 왕따 척결, 부모와 함께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 “학교 내 왕따 사건에 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1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OK! 품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OK! SK’로 잘 나가는 회사 SK(주) (대표 유승렬)가 노조를 없애고, 불법 파견근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은갓 ‘품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SK(주)에 파견돼 주유소 저유, 수선 보수, 물류센터하역 인력 등을 담당해 온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30여 명은 지난 3월 노조(위원장 지무영)를 결성했다. 그러나, 단 3일 만에 조합원은 3명만 남게 됐다. SK(주)측에서 ‘네 사촌 김 아무개 과장이 다칠 수 있다’는 식으로 노조원들을 협박한 결과였다. 이는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이 주로 SK(주)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회사가 이용한 것이다.

이에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

래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인사이트코리아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지노위는 SK(주)측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SK(주)를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1일, 회사는 돌연 노조 관계자 4명에게 SK(주)로의 출근을 금지했고, 지 위원장 등은 “SK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맞섰다.

회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공방의 핵심은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의 지위가 파견근로자인가 아닌가’에 있다. 이들의 노동이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

2000년 12월 13일 (수)

제 17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어야 하며, 따라서 SK(주)로의 출근 금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로 98년 11월 SK(주)가 현장 관리자들에 보낸 공문은 그 동안 인사이트코리아의 용역 인력이 ‘파견근로 형태’로 운영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10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 관정도 “그간 SK(주)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 형태로 용역 인력을 운영한 점”을 확인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든지, 도급 용역을 하든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SK(주)는 파견근로로 인정되는 걸 막기 위해 은갓 수법을 동원했다. 우선, 파견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98년 11월, 노동자들 몰래 계약 형식을 도급계약으로 바꿨다. 그리고 올 10월 노조의 진정으로 노동부 감독관이 나온다고 하자, 노동자들에게 “도급을 했다고 하라”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뜯어 고쳤다. 또 감독관이 나온 당일에는 노조 관계자들에게 교대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을 묶어두고, 면담장에는 SK(주) 관리자들이 동석해 질문을 가로챘다. 근로감독관이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에게 “업무는 어떻게 하나?”고 물으면, SK(주) 과장이 “현장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매일 오전 회사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후에는 시내에서 집회를 통해 부당해고 사실을 고발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이광길]

◎ 해설 ◎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의 차이는 사용업체가 노동자에 대한 작업상의 지휘 감독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도급’이란 다른 업체에 일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것으로, 사용업체측이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에 회사측이 파견근로를 도급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송두환)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농성단은 12월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서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를 만나 농성돌입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심태섭]

◎ 변호사들의 집단농성은 96년 ‘안기부·노동법 개악 반대’ 농성 이후 처음이다. 이번 농성의 의미는?

= 11월 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보법과 인권법 등 개혁 입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렇게 가다가 개혁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생겼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뿔가 높은 감도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변호사와 교수들이 의기투합해서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

◎ 국보법 개폐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는 어떤가?

=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공공연히 개정조차 반대하고 있고, 단지 민주당이 개정 쪽의 얘기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들이 정권 유지나 선거 같은 것에 신경 안 쓰고, 전향적으로 인권 측면만으로 국보법에 접근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국보법에 대한 중요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인가?

= 국보법이 제정된 지 52년이 지난 지금, 국보법은 이제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러한 수위에 부담을 느낀다면 적어도 7조를 완전 삭제한 개정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7조를 삭제하지 않는 개정은 사실상 하나마나다. 국보법 사범 95%정도가 7조 위반 사범이 아닌가?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한 견해는?

= 법무부는 민간 단체들의 요구인 ‘조사권’이나 ‘중립심문권’ 같은 권한이 국가인권기구에 속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까지 간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선 현 법무부의 방해를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 농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변호사·교수 농성단이 농성장을 지키고, 13일 점심 시간에는 민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때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자 한다. 농성을 해산하는 14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단체들의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할 것이다.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어느 외국계 피자회사가 상법상 금지범위를 뛰어넘는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주) (대표 이호림)는 ‘PHK 경업금지 규정’을 통해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 및 본인의 형제자매’가 동종회사,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 노동자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업무영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는 가족의 동종업종 취업을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경리, 전산, 사업기획, 사업개발, 영업부서 등에서의 근무를 제한받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해 조합원인 부점장 등을 포함한 3백여 명의 임직원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노동조합(위원장 안천구)은 ‘PHK 경업금지 규정’이 직계가족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천구 노조위원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PHK 경업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약자인 당사자 가족의 취업의 범위에 제한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피자헛 측은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왜 문제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PHK 경업금지 규정’이 근로자 가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을 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왜 노조에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은 이와 관련, “관련법에서 문제삼는 것은 당사자의 기밀누설이나 경업행위”라며 “보직제한이라는 불이익 가능성 때문에 서명한 부점장 이상 직원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형제자매마저도 다른 피자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말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피자헛의 경업금지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는 있지만 규정 자체의 존재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에서 노사협의회나 단협을 통해 해결하거나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동종회사나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관계 또는 동종회사 및 경쟁회사를 소유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가 상법상 규제하고 있는 ‘경업’에 해당한다. [심보선]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개소식

· 때 : 12월 15일 (금) 늦은 6시 30분 (문의 02-3675-5363)

· 곳 : 인권운동연구소(4호선 한성대입구 7번출구/동소문우체국 건물 304호)

인권운동사랑방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권운동연구소’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인권운동연구소는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론을 생산해내는 동지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2월 월례포럼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의 문제”

· 때 : 12월 16일 (토) 늦은 2시-5시(문의 3675-5363 / 배경내, 0주영)

· 곳 : 서울대 보건대학원 407호(대학로 서울대병원 옆)

· 사전행사(2-3시) - 비디오 시청(인도 나르마다담 건설반대운동)

· 본행사(3-5시) - 주발제 : 지역주민의 눈으로 본 새만금사업의 문제점 (신청특) / 보조발제 : 발전권이란? 시화호사태(0주영) 등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14일(목)

제 17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국보법 폐지 · 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민주화 원로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가장 좋은 기회라고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의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있다.

국보법 없앨 가장 좋은 기회

사회단체 활동가의 명동성당 단식농성, 변호사와 대학교수 농성 등에 이어 민주화운동 원로 15명이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를 암흑 세상에 가두는 '벽'이었다"고 전제하고, "두 손 맞잡은 남북정상 모습은 이제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이어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회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쟁에 날이 가는 줄을 모르는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또 원로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결국 국보법은 없어져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명에 참가한 원로들은 다음과 같다.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동완(KNCC 총무), 김승훈(시흥동 성당 신부), 박용길(고 문익환 목사 미망인), 유현석(원로 변호사), 이돈명(원로 변호사), 이오덕(한글학자), 이혜

동(원로 목사), 이효재(원로 여성운동가), 조화순(원로 노동운동가), 최영도(원로 변호사), 한상범(동국대 교수), 함세웅(상도동 성당 신부), 홍성우(원로 변호사)

여야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때에 13일 여야 의원 95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못박고 있으며 인권위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인권향상 특위에서 마련한 안과는 달리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권위원회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지 않고, 피조사자가 허위진술·증거의 은닉과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자문,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안에는 인권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에 대한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공

시설 및 사회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일반의 인권의 침해는 낮은 상황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도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 기존의 사법기구 및 경찰·검찰 등과 더불어 더욱 완전한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

민변 소속회원 50여 명은 13일 오후 서초동 지하철2호선 교대역 근처에서 국보법 철폐촉구 집회를 가진 뒤 법원 삼거리까지 약 1km가량을 행진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국제사회도 국내에서 유죄확정된 국보법 위반사태에 대해서 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한 바 있고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다"며 "인권문제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민변과 민교협은 지난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와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 설립을 요구하며 민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심보선]

국정감사자료집 판매

김대중 정부 3년차 인권지표와 정책을 모두 모았습니다. 2000년 국정감사 상임위 자료에는 인권관련 지표 및 통계가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 61,100원
- ◎노동환경위 57,100
- ◎보건복지위 16,600
- ◎문화관광위 2,700
- ◎행정자치위 30,300
- ◎외교통상위 38,200
- ◎교육위원회 38,200
- 총액 250,500

자세한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info)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상임위 자료를 신청하시면 제본해 드립니다.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13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은 일방적 계약 해지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엔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들조차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지 않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이례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조정위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자정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측이 조정기간 중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11월 30일자로 1천명을 계약해지한 데 이어, 12월 30일자로 6천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해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에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는 1만여 명으로, 한국통신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 보수, 유지, 가설, 114 전화안내서비스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는데, 19년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이 월 85만 9천 원에 불과할 정도다. 또 1년 내지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해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더구나 올해엔 아예 계약직을 전원 해고하고 현재 계약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도급업체에 주려는 구조조정 계획이 가시화 돼 계약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사측은 해고되도 도급업체를 통해 일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로가설 일을 하는 나 아무개 씨는 "부산에서 일하던 동료들의 경우, 도급 전환 1달만에 계약해지 당했다"며 사측의 주장이 허구라고 지적한다.

13일 오전 9시 서울 신설동 114전화국 앞에 모인 계약직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가된 얼굴들이었다. 성북 전화국 선로과에서 일해온 나 아무개 씨. "6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은 고작 8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도 오래 다니면 정규직이 될 거란 희망에 살아왔는데 이젠 12월말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파업할 수밖에 없다." 114전화국에서 전화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또한 할 말이 많았다. "10월 중순 경 사전 예고도 없이 1백38명을 야간 업무로 전환시켰다.", "12월 말 1백4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유미숙 씨는 "나는 아직 계약해지 통보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2월까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모두 계약해지, 도급으로 전환될 텐데 이제까지 푸대접 받은 것 풀어야죠."라고 답답히 말했다.

정명태 법규국장은 노조간부 60여 명이 지난 10월 14일 노조 설립 사흘 전 징계 해고된 사실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건 6개월, 1년 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주영]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했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동아일보에 난 '재소자집필권 승소' 기사를 보고 담당기자에게 소송당사자인 유득형 씨의 주소를 묻는 편지를 보내려다 불허 당했다. 또한 8월말 문화일보에 '재소자고소고발 남발'이라는 기사를 보고 소내 사정과 다르다는 의견을 피력한 서신과 지난 9월경 유 씨에게 자신의 소송과 관련해 조언을 부탁한 편지도 불허했다. 지난해 5월 논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허위제보'로 금지 1월의 징벌을 받은 오 씨는 "교정당국이 적절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징벌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지난 11월말 오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로 삼으려고 불허된 서신을 담당변호사에게 발송하려 했으나 또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불허처분을 내린 것.

'서신불허 사유'에 대한 이상희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오 씨가 기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교도관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사실과 다른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득형 씨에게 보낸 편지는 "오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발송하려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불허한 서신을 다시 발송을 허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불허한 서신을 발송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 행형법 시행령 제62조도 서신불허사유에 대해 '수형자의 처우 및 교도소의 운영상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산구치소 징벌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또 독일의 경우 행형법에 서신불허 사유와 검열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례도 교도소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권, 집필문서 외부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

단지 교정행정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소자의 서신발송을 불허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15일(금)

제 17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올해 들어 가장 춥다는 12월 12일 밤 10시경,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서울역 지하보도에는 노숙자 30여 명이 서넛씩 짝을 지어 웅기종기 모여있다. 어디서 쟁겨왔는지 때가 꼬질꼬질 낀 카시미론 이불 안으로 벌써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술잔이 벌어졌다. 여기저기 조각난 신문지는 바람에 나뭇굴고, 깨진 소주병 파편들이 쓸레년스럽기만 한데, 그 외중에서도 병든 닭처럼 술기운에 잠을 청하는 아저씨에게 돛자리를 팔러 다니는 아줌마의 발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이제 막 이가 나기 시작한 아기를 바라보며 우유병을 물리는 한 남자에게 애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자조 섞인 목소리로 "뭘 도망갔지"라고 한마디 던진다.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서울역 지하보도는 그나마 겨울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곳은 노숙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라는 경고문이 무색하기만 하다.

"내년 2-3월 최대고비 될 것"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심야상담을 하는 김해수 씨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노숙자가 눈에 띄는 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 김 씨는 "경기불황이 곧장 노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당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질 무렵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바닥이면 노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 2-3월이 최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대략 3백여명.

경찰·공안, 노숙자 쫓아내기 바빠

2년 전 IMF 한파를 겪으면서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노숙자의 존재는 얼마쯤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김해수 씨는 "IMF 지나고 일할 수 있고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미 사회로 복귀했다고 생각하기에 거리상담을 나가면 주위의 상인들은 이들을 강제로라도 수용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노숙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고 자활시키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느낀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서울역이나 영등포 역전을 중심으로 경찰이나 철도공안들이 노숙자들을 내모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동안 영등포역에서는 전투경찰과 방범대원, 구청직원들이 동원되어 노숙자들을 강제로 내쫓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SBS 저녁8시 뉴스와 MBC 저녁9시 뉴스에 서울역 노숙자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다음날 0시 30분부터 1시까지 영등포역 공안과 경찰들이 이곳에서 자고 있었던 노숙자들을 강제로 내보낸 사건도 있었다. 물론 취재를 하려했던 방송사들은 헛탕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기옥 (햇살보금자리 간사)씨는 말한다. "방송사에서 서울역을 촬영하고 영등포로 오려고 했는데 영등포 경찰서 사람들과 철도공안들이 노숙자들을 감춘 거예요. 모두 내보낸 거죠. 아직도 거리노숙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이들을 숨기고 감추려하는 것도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면으로 이어짐

만화사랑방



노벨 평화상 메달, 개박되지 않도록...

이동수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 이어져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주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사회단체들이 서준식 대표에 대한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성명과 탄원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서 대표는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등을 이유로 기소(병합)돼 지난달 23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4일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에게는 당연한 인권활동이며, 멧돼지 시민주권행위의 행사일 뿐"이라며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법원의 이름으로 이제 광란의 보안관찰법 위반죄를 벗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성명을 발표, "경찰의 구형은 그의 인권운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무죄선고를 촉구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서준식 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준식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은 해외에서도 날라 왔다. 미국의 '고문반대 및 인권운동지원을 위한 재단'인 마틴벨로재단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서준식 씨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이창조)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는 노벨상으로도 무마시킬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귀국한 14일 오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사회원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성명에서 "반세기 동안 인권침해를 양산하던 국가보안법의 시대를 끝내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상징되는 인권존중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 회의'에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77개 단체 연대기구)와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232개 단체 연대기구) 및 민주화 운동 원로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귀국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심태섭)

▶1면에서 이어짐 '노숙자'

이기옥 씨는 덧붙여 말한다. "노숙은 정말 최후의 선택이죠.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쪽방이나 여인숙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보건 의료서비스나 인권, 법률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는 주간편의시설과 밥만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현장보호시설이 노숙자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1월 17일 민간단체와 가진 세미나에서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는 노숙자는 도와줄 수 없다"는 부동의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즉 편의시설들이 거리노숙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쉼터 입소를 통한 자활은 지원하되, 거리노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월 16일 서울시는 거리노숙자 전원을 쉼터에 입소시킬 것을 목표로 '동절기 심야상담 발대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사, 경찰, 일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상담팀이 매일 심야에 노숙현장을 방문, 상담을 통해 노숙자들에게 쉼터입소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옥 씨는 "쉼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단체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에게도 대안은 있어야 한다.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거리에서 자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노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정말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다. 살아오면서 줄곧 무시당했고 사람으로서 기본적 존중감을 받아보지 못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까지는 노숙을 개인적 특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며,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고공판

-보안관찰법과의 투쟁-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

◎ 무죄석방 촉구 성명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 (02-770-025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길기봉 부장판사 앞 (02-596-9067)

* 성명 발송 후 인권운동사랑방으로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진행중'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20여 일간 안기부에서 엄마가 구타 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세살박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다. 그 아이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돼 고문수사를 받았던 황인오 씨의 가족에게 지금도 고문이 '진행중'이다.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과정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1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인권피해자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권 의료복지센터' 설립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인권병원' '인권피해센터' 등의 이름도 거론됐지만, 인권피해자들을 단순한 '환자'로 파악하지 않고, 치료 뿐 아니라 재활과 복지를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인권의료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정됐다(관련기사 본지 11월 25일자 참조).

이날 발기인대회엔 인권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인권의료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영순 5·18부상자회 전 회장은 "5·18부상자들에게 발급된 의료보호카드로는 일반치료만 받을 수 있을 뿐, 전문적인 재활치료까지 받지는 못 한다"며 "최후를 다쳤던 한 부상자는 이제 정신마저 이상해져 결국 아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황인오 씨는 "장기간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오랜 격리 끝에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가족과의 심리적 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식과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당한 여정남 씨의 조카 여상화 씨는 "살아남은

사람과 가족들을 볼 때면 차라리 삼촌이 그때 잘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발기인의 한 사람인 김록호 서울대

2000년 12월 16일(토)

제 17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보건대학원 교수는 "상이군경들에게도 보건병원이 존재하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게도 요양치료가 보장되지만,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권피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라도 이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기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과거 인권피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조)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한국통신이 12월말까지 계약직 노동자 6천명을 잘라내기로 했다. 이미 11월말에 1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잘라낸 한국통신이었다. 대표적 재벌기업 SK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 몰래 도급계약 체결하더니, 계약변경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았다. 한 벤처회사에선 병역특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해고가 자행됐다. 이 모든 일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합리화되는 일들이다.

구조조정은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자본의 삶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들의 목을 쳐내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가운데 정규직 해고→계약직 전환→도급 전환→도급계약 해지의 수법은 바둑의 정교한 수순처럼 차근차근 노동자의 목줄을 조여간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임금을 깎임으로써 1차로 삶의 후퇴를 감수해야 하고, 뒤이어 계약해지라는 사무적 통고 하나만으로도 생존의 끈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터에서 내몰린 이들의 삶이야말로 궁이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주거에서부터 교육, 의료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권리가 후퇴하거나 박탈되고, 결국엔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칼부림은 앞으로도 잦아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밀어 부치겠다고 하고, 언론은 생존권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기 바쁘다. 정부와 자본, 언론으로 구성된 삼각편대의 집중포화 속에 노동자들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우자동차나 한국전력과 같이 대규모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노동자들은 맥없이 자본의 공세 앞에 밀리지 않았던가?

이제 정리해고를 당연시하는 구조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인권적인 구조조정은 거부와 저항,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잘못된 구조조정의 사회적 세뇌와 신화를 깨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ILO 조약, 헌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만 한다. 지금 이 시기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신장시킬 의무를 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인권투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고> 땀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박효원(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뚝뚝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응급구호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여론의 추이와 정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변화가 능한 행정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노숙자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단기대응 급급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태도는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숙자들은 감기, 결핵, 피부병, 간염 등의 유행병이 현저히 높을 뿐더러 이러한 질병은 대부분 만성이다. 오랜 질병은 노숙자들의 현재 삶을 해결 뿐 아니라 노동력과 재할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어 그 후의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숙자들의 의료문제는 일반인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노숙자를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은 전혀 없고 인의협 등의 민간단체나 보건소에서 비상시적으로 기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보

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질병을 호소하는 노숙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관리나 적극적인 진료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일주일에 2번 정도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파견되는 정도이다. 해당 보건소에서 담당할 뿐 보건의료체계에서 노숙자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노숙자 의료체계는 구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숙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을 수도 있고, '행려' 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까다로워 응급치료 외에는 기피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통원치료나 가벼운 질병은 특히 그러하다. MRI 촬영과 같은 비급여 부분의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다. '의료보호'자격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기욱(햇살 보금자리 간사) 씨는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격조건이 있어서 '차라리 행려로 치료받게 낫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밝혔다.

결국 노숙자들의 의료는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채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행정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으며 노숙자들의 건강은 방치되고 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노숙자 건강실태조사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성질환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헛터나 보건소 이용

노숙자 대상의 조사임을 감안할 때, 거리노숙자들의 건강실태는 보다 심각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노숙환경의 질병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 수행은 계획조차 없다.

의료·생활보장, 제도적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앞세운 이른바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이며, 비현실적인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생활보장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정된 것이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자, 철거민 등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급여신청조차 할 수 없다.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생활보장이 시급하게 필요하지만, 정부의 빈곤대책은 도리어 이들을 배제시키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 겨안을 때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급권자 권리찾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얼마전 캐나다 정부는 노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제도도 노숙자들을 겨안을 때이다. IMF 이후의 응급구호가 정당성을 획득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의 김해수 간사는 "노숙자대책이 초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특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숙은 IMF 이전부터도 그랬고 지금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문제이다. 노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고공판

-보안관찰법과의 투쟁-

12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

◎ 무죄석방 촉구 성명을 보내주세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 (02-770-025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길기봉 부장판사 앞 (02-596-9067)

* 성명 발송 후 인권운동사랑방으로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인권단체 활동가들 단식돌입

국보법·인권위법 등 인권현안 처리 촉구

겨울비가 내리던 18일, 인권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 2대 현안의 해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부산, 울산, 전주, 수원, 광주 등 전국의 15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 돌입의 배경과 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률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보법 개폐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연내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조건이 어려워 개정에 그치더라도 7조 만큼은 완전히 삭제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을 갖춘 인권위원회로서, 위원들의 지위보장과 조사권·시정명령권을 확보해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이 문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단식농성단은 일주일 동안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매일 연좌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일 오후 6시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21일(목) 낮 12시에 모든 인권단체들이 총집결

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창조]

◎ 단식농성단

· 서준식/박대군/배경내/심태섭(인권운동사랑방) · 최민식/김석한(울산인권운동연대) · 김영욱/최인화(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송원찬(다산인권센터) ·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 정윤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최준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남규선(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

2000년 12월 19일(화)

제 17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의회) · 이광영(부산인권센터) · 조혜은(불교인권위원회) · 차미경/박재석/김숙경(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최완욱(자유평등연대를위한인권운동센터) · 조영민(인권실천시민연대) · 백중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안원영(천주교인권위원회)/이중 상사 단식자 16명

서준식 대표 공판연기

오늘(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갑작스런 연기결정으로 취소됐다.

선고공판 기일은 2001년 1월 1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명동성당에 '구조조정 반대' 함성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 파업 및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명동성당에는 1만명을 상회하는 노조원들이 집결했으며, 이들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동걸 한국통신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이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공언하고도 강제로 인력감축에 나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파업 돌입의 배경을 밝혔다. 울산지부에서 상경한 한 노조원은 "치사한 방법으로 모가지를 치는 것에 가장 열 받았고, 명예퇴직이니 뭐니 해서 앞날이 캄캄하다"며 파업 참가 이유를 밝혔다.

앞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분쇄투쟁에서 노조가 한발 물러선 한국철도, 한국전력, 도시철도공사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며 "싸움에서 물러난 사업장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절망의 현장'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계약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은 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고 정규직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이라며 "정규직과 계약직 노조가 구조조정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동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한국통신은 이미 계약직 7천여 명을 계약해지한 데 이어, 정규직도 3-4천명을 줄일 계획이다. 그런데 사측의 목표만큼 명예퇴직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자, 부당전직 또는 대기발령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소유한도가 현행 33%에서 49%로 확대되는 등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 [이광길/이창조]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세밀 잡설

세밀에 '가는 세월'이란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쓰리다. 세상이 뒤숭숭해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소주도 소주지만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또 한 해가 간다는 말들 속에 가슴 저린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너도 나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는 범부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든다. 퇴출 직장인, 남북 이산 가족, 외국인 노동자, 불쌍쟁이들... '다사다난'이란 너털너털한 표현마저 추레해진 일년이었던건만 '왜 이렇게' 속내가 편치 않은 연말이다.

신나건 잠담하건 쾌해야 할 회고가 스산한 아쉬움에 잠겨야 한다는 건 슬프다. 뿌연 연기 속에 숨어버린 불투명한 세월에 심사가 틀린다. 재미있게 살아도 아쉬울 이 판에 "이 땅에서 이려고 사는 게 무섭다"는 이웃들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리저리 말자고 잔을 털어놓지만, 무섭다.

돌아보면 일은 많았다. 2000년은 대한민국에게 위대한 연대였다. 아마도 역사는 굵은 활자로 이 해를 기록하고 해석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어디 있었나' 한심해진다. 노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가고 부모 잃은 아이들은 보호소로 넘겨진다. 남북이 만나고, 노벨평화상을 탄 대통령이 탄생했다는데 남한은 여전히 아득한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해방 뒤 50여년 지속돼 온 남한일 뿐이라는 이 낭패감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날리리 맘보'로 갈짓자를 걷는 나라 사정은 소갈머리 좁은 사람 복장 타기 딱 좋은 꼴이다. 가난하고 억눌린 살림도 때로 맛이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오래 계속돼 온 이 '무시'는 참는 게 대수가 아닌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던 것일까, 명칭이처럼 답답하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남한 '인권'이 국제적으로 용을 썼으나 참패한 한해로 기록됐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청산해야 했던 노근리나 매항리나 소파협정이나 베트남 참전문제, 일본과의 해묵은 과제였던 성노예 문제가 흐지부지 '유감'이란 시시결령한 상투어로 다시 관 뚜껑을 닫았다. 국제 문제가 어려웠다치면, 국내 문제 또한 시원한 건 없었다. 구조조정과 개혁이란 두 마디에 휘둘린 서민들 생활이 무참하게 부서져갈 때도 아무도 다시 책임있는 말 한마디 못했다. 바른 말이 너무나 귀해진 세상에 의인 또한 얼굴을 감추고 말았으니 하늘은 어떻게 내려앉았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참 웃기는 나라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구시렁거리며 욕설을 털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건 세월이 불려온 자연현상이라 해도 무섭고 슬프다. 중얼중얼 입 속에서만 뱉는 한탄이 느는 사회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며 욕지지만 늘었다 한탄하는 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가지가지다" 허허 웃은 친구따라 이 무지근한 세밀 잡설을 스스로 틀어막는다.

주간인권호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1. 국보법·인권법 철폐, 더이상 미루지 말라!
◎ 변호사·교수, 현 정권 들어 첫 시국농성 전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15명,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며 "김 대통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12/13)

◎ 여야 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95명이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못 박고 인권위에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인권위원회법 공동발의(12/13)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국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가져(12/14)

2. 내 눈의 들보부터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진보넷 게시판에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례 16건 공개(12/14)

3. '인권'보다 '표'가 우선일 테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회동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이 옹용,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존재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존속 입장 밝혀(12/15)

4. 끝내기 어려운 인권피해 고통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설립 발기인대회 열려. 인권피해자들 "사건 마무리됐어도 인권피해는 여전히 지속중"이라고 호소(12/15)

5. 이놈들! 냅름 떠나지 못할까?
과주시 장파리 주민 등 2백여명, 미군이 민통선 내 사유지 120만평 등 215만평에 스토리 사격장을 설치해 합법절차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군의 토지사용료 지급과 전면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6.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천 단위로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3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 청원(12/1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20일 (수)

제 17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① '뺨'에 걸린 노동자

삼성그룹. 편법·탈법 상속과 족벌경영 등으로 줄기차게 도마에 오르면서도 끄떡 않고 버티는 재계의 실력자. 이 공룡자본에겐 또 하나 붙어다니는 별칭이 있다. 바로 '무노조 신화'의 주인공. 삼성그룹이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온 무노조 신화 뒤엔 힘있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참담함, 눈물과 피가 배어 있다. 그 알량한 무노조 신화를 위해 삼성그룹이 저질러온 인권유린의 실상을 고발한다(편집자주).

수의 입은 노동자

19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수의를 입은 한 노동자가 피고석에 앉았다. 얼마 전까지 삼성 SDI(옛 삼성전관) 수원공장에서 일하던 박경열(40·제조2그룹) 씨. 그는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의해 짓밟힌 또한 사람의 희생자였다.

박경열 씨의 구속 사유는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을 10월 15일 회사 내에서 피해자 윤일철(제조2그룹 부장)에게 식칼이 든 가방을 보여주며 '가방에 칼이 들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겠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10월 16일 제조팀장 권기창에게..." 같은 식으로 협박, 그리고 "같은 날 회사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정주현이 가방을 검사하자고 하자, 안에 들어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두르는 등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걸으면 볼 땀, 일반적인 협박·파렴치범에 불과한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삼성그룹의 뿌리깊은 무노조 전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노조를 만들어보겠다고 한 노동자가 회사의 회유·협박 속에 참담하게 무너져가던 끝에 '뺨'에 걸린 사건, 이것이 이번 사건의 내막이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노조설립 추진하다 발각

박경열 씨는 이른바 '노조설립추진세력'의 일원이었다. 85년 입사후 대통령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왔던 박 씨는 99년 처음으로 노조설립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회사측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알아냈고, 이로 인해 박경열 씨는 일주일간 총청도와 강원도 등지로 옮겨다니며 회사 간부로부터 '노조설립 포기각서'를 종용받았다. 당시 박 씨와 동행했던 윤일철 제조2그룹부장은 12월 19일 법정진술을 통해 "박경열 씨에게 회사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불만이 있으면 질책을 거쳐서 면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받아냈음"을 시인했다.

그 사건 이후 회사측은 관련자들을 해외로 내보냈으며, 박경열 씨도 올 2월 말레이시아로 파견됐다. 당시 박 씨는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해(박 씨의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올 11월 사망했다) 파견근무를 거부했지만, 결국 회

사의 방침을 거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일철 부장은 "박경열 씨 아버지의 뇌종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업무상' 파견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자살용 칼', 협박용으로 둔갑

올해 4월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온 박 씨에게는 여전히 회사측의 압력과 관리가 계속됐다. 박 씨는 회사측의 집요한 민류로 동료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휴식시간에도 감시가 이어져 정신적 부담감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미 '각서'를 쓰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박 씨는 슬로 이를 달래왔다.

문제의 '칼' 사건은 동료 노동자의 해외파견 문제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 박 씨는 예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의 부인을 대신해 회사측에 동료의 조속한 귀국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회사측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던 끝에 마침내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두며 '칼'을 갖고 다니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박 씨의 가족들은 회사측의 '함정'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박 씨가 칼을 휴대하고 회사로 들어갔던 10월 16일. 일상적으로 출입자를 검색하던 경비들이 박 씨를 아무 검사없이 들여보냈다가, 박 씨가 권 팀장과의 면담 후 정문 밖으로 나가려하자 갑자기 가방검색을 요구했던 것이다. 결국 가방을 뺏으려는 경비와의 실랑이 도중 박 씨가 '칼'을 꺼내들어 자신의 배에 갖다대며 '가까이 오면 자살하겠다'고 외치게 되었다. 박 씨는 이어 경비실로 들어가 경비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몇 분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돼 구속되었다.

▶ 2면으로 이어짐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힌 남매의 마지막 인사 한총련 수배자 장진숙씨, 동생 임종 못 지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중이던 대학생이 죽음에 이른 동생의 마지막 길조차 지켜보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99년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장진숙(25) 씨는 지난 16일 임종을 앞둔 동생의 병상 앞에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장 씨는 98·99년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맡았으며, 한총련 대의원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문에 국가보안법(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로 3년간의 수배생활을 해왔다.

장 씨의 동생 재원(23) 씨는 후두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며, 그 소식을 장 씨가 전해들은 것은 지난 15일. 장 씨는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꼭 지키고자 했지만 수배 생활을 하고있는 그에게 병원 방문이란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홍익대 동료들은 사람들을 모아 응급실 입구를 지키고 16일 저녁 장 씨를 동생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잠시 후 10여 명의 마포경찰서 보안과 형사와 의경들이 들이닥쳐 장 씨는 동생의 눈 앞에서 연행당했고, 다음날인 17일 동생은 결국 숨을 거뒀다. 주위 동료들은 "16일 장 씨가 동생을 만났을 때 의식이 잠시 돌아왔으나, 연행 후 동생은 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의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동료들은 "보안과 경찰들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항의하며, 경찰서와 서부지검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구로경찰서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던 장 씨는 체포 19시간만인 17일 오후 7시에 체포취소 처분을 받아 석방됐다. 서부지검이 "오는 26일 경찰서로 장 씨를 자진 출두케 한다"는 학교 교수와 담당변호사의 다짐을 받고 구속 신청을 보류, 석방했기 때문이다. 다시 동생 곁을 찾을 수 있었던 장 씨는 19일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

었다.

2백15일 넘게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재영(29)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정치수배자들은 체포라는 부담 때문에 부모님의 임종은 고사하고 장례식마저 참석하지 못해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산다"며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그런 상처를 받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엔 8월 5일 현재 150명의 국가보안법 수배자들이 있으며 그 중 95%이상이 한총련과 관련한 이적단체 구성·가입(국보법 7조 3항) 혐의"라고 밝혔다.

(심대섭)

인권활동가 단식 해제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 2대 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이 19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2월 19일자 참조).

단식농성단은 19일 단식에 참가한 인권활동가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한국통신 노조원 1만5천명이상이 농성에 참가하여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찬 명동성당에서 인권 2대 현안 해결을 내걸고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단식농성단은 "한국통신 노조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생존권을 지원, 지지하는 활동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결연한 단식농성을 거점으로 두 현안에 대한 광범한 투쟁을 조직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단식농성단은 또 "광범한 시민사회단

체들과 함께 힘있게 연발연시 투쟁을 재조직하겠다"며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등) 이번에 결합한 단체들을 포함해 더 많은 인권단체들을 포괄하겠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시국은 엄중하며 임시국회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후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단식에 참가한 인권활동가 전체회의에서는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등 7개 단체가 참가하는 소위원회에 앞으로의 투쟁을 조직할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21일 소집되며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활동가 및 회원과 함께 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심보선)

구독료 납부로 연말을 마무리!!

문의 : 유해정(02-741-5363)

1면에서 '무노조 삼성'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윤일철 부장 역시 "박 씨가 내 앞에서 칼을 뽑아든 사실이 없으며,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장은 "박 씨와의 면담과정에서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구치소 유리창 너머로 박 씨는 "난 위인 것이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박 씨의 석방을 위해 '탄원'할 의사가 전혀 없다. 삼성SDI 수원공장 인사부장은 "박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고발 취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회사측으로선 이번 사건이 끝짓거리 하나를 해결할 좋은 기회였던 셈이다.

박경열 씨의 다음 공판은 1월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21일(목)

제 17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피명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던 한 수감자가 수감 5일만에 사망했으나 사망 추정시간 및 사체에 뚜렷이 드러난 피명자국의 원인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또 교도소 측이 위급한 지경에 있는 재소자를 그냥 방치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 엇갈리

19일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의정부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고 황영환(40) 씨를 검안한 담당의사는 '사체검안서'에 "응급실 도착시간인 아침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도소 측은 이날 7시 30분경 황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황씨가 위급하다.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가 7시 50분경 전화로 다시 "이송도중 사망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교도소 진료부장은 19일 유족에게 "사망 1시간 후에 사체를 봤다"고 했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고 "(자신이 사체를 봤을 때는) 이미 경직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 찍어둔 사체의 사진을 본 법의학 전문가는 "시반(사후 나타나는 피물림)으로 봐서 사망한지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후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명 등 구타의혹 규명 필요

또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등이 '미상'이라며 황씨의 신체상 황을 기록한 사체검안서의 '양측 하지 부 화상, 배부(등) 피하출혈, 좌측 주관절부 찰과상, 우측 둔부·전박부 찰과상, 좌측 대퇴부 피하출혈' 등의 원

인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20일 유족과 만난 의정부교도소장은 "은땀에 나타난 멍은 외부가 격, 폭행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재소자나 담당교도관들은 구타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믿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의학 전문가도 "팔, 다리에 난 피명자국은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말한다.

14일 파주경찰서에 자진출두한 황씨를 담당했던 파주경찰서 형사 구창용 씨나 황씨의 노부모는 "(유치장에서) 술이 취한 상태였지만 의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족들이 19일 황씨가 입소당시부터 건강상에 이상이 있었다면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요구하자 소측은 "신체검사기록 및 근무일지는 없다"고 했다가, 20일에는 황씨의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자료와 의무기록 등은 조사중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일반사동에서 병실사동으로 옮겨

지난 15일 황씨와 함께 입소한 송 아무개 씨는 "멍은 입소당시 건강검진 때도 봤다"며 "황씨는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또 "황씨가 매일 '술을 사러 가야된다, 카메라를 찾는다'며 자는 사람들을 깨우곤 했지만, 함께 수감된 12명이 황씨를 구타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15일 의정부교도소에 황씨와 함께 입소해 병실사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같이 생활한 송씨의 말대로라면 황씨는 교도소 입소 전인 유치장이나 법원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말이다.

18일 밤 황씨와 함께 병실사동에서 잤다는 정아무개 씨는 "의무과에서 처방을 받고 오후 8시 30분경 황씨가 들어왔다"며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의식이 없는 황씨를 그냥 내팽개쳤다는 의혹이 일게 하는 대목이다. 또 병실사동에 입소한 시간에 대해서도 교도소 보안과장은 "18일 저녁 6시 30분경에 발작을 일으켜 의무과에서 처방을 한 후 5분 정도 뒤인 6시 40분경에 병실에 입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병실사동 입실 시간도 엇갈린다.

위급한 지경의 재소자 방치 의혹

또한 황씨가 간질증세를 보였다는 것 또한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황씨의 어머니는 "간질은 없었다"며 "교도소에서 벌금을 내면 출소시켜주겠다고 전화로 매일 아침 독촉을 했는데, (만약에 간질증세가 나타났다면) 왜 한번도 간질증세가 있다는 말은 안했나?"며 오열을 터뜨렸다. 재소자 송씨는 "황씨가 입소 첫날인 15일 저녁 식사후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해 약처방을 받았으며, 18일에도 두 차례 간질증세를 보여 결국 의무과에 입원했다"고 한다. 더구나 보안과장은 "황씨에 대한 정밀진단을 한 바 없지만 소내 20-30여명의 간질환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간질 처방을 할 수 있었다"며 처방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교도소 측이 재소자의 질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방치했다는 의혹도 살만한 대목이다.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있는 교도소내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돼 부검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규명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황씨 사체에 대한 부검은 21일 오전 실시될 예정이다. [김보영]

'새만금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

19일 김원웅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재식) 소속 여야 의원 26명이 '새만금 사업을 보류하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 '새만금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김 의원 등은 "사업목적은 둘러싸고 농림부는 농지용, 전북은 복합산업단지라 하는 등 사업목적 불분명"하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재개 여부도 불분명한 데,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잘못"이라며, 사업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들의 건의문 제출에 전북도의회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 책정이 보류되면 전원 사퇴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전북 지역 출신 국회의원 5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내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북병화외인권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문규현)는 19일, "정동영 의원등 지역구 의원과 전북 도의회 의원들의 행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문제를 도의시하고 허구적인 전북발전만을 주장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라 비난하고, "도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사표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최철 외)도 18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간척 사업을 강행 추진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다짐했다.

'새만금사업 즉각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문규현 상임대표, 신형록 공동대표,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 수경스님 등 각계 대표 34명은 19일 조계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과 예결위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신형록 대표는 "갯벌을 죽여 논을 만드는 사업임에도 복합산업단지 운운하는 건 정치적 야심이 빚어낸 허구"라고 못박았다. 신 대표는 또 "전북 도의원들의 '집단사퇴반언'은 줄서기 정치의 전형"이며, "사업추진만을 위해 무리하게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꾼들의 부추김에 놀아나는 꼴"이라 개탄했다. [이광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수원에 위치한 아텍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호성)에서 근무하던 민병덕 씨는 지난 11월 22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사유는 '근로자 선동', '상사명령 불복종', '경영권 침해', '회사 명예 손상' 등. 민 씨는 설립 일보직전까지 갔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고, 회사 측의 만류를 뿌리치며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 그것이 민 씨가 해고된 배경이었다.

민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준비한 것은 올 7월부터.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을 준비했지만,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1차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아텍 노동자 200여명 중 90%가 넘는 사람들로 부터 노조결성 지지 의사를 확인한 민 씨 등은 마침내 11월 4일 노조 창립총회를 열었다. 남은 일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증'을 받는 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텍 노동자들의 두 번째 노조결성 시도 역시 좌절되고 말았다. 11월 15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위해 수원시청을 찾아갔던 관계자들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회사 간부들의 저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뿌리치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서 한발 앞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버렸던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악용한 '유령노조 설립'에 의해 또 한 차례 노조설립의 꿈을 유보해야만 했던 순간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노조설립을 추진했던 핵심관계자 5명이 징계를 당했고, 그중 민 씨를 비롯한 3명의 노동자가 해고통보를 받게 됐다.

'계약해지' 무기, 노조저지 압력

아텍의 노조설립 좌절 배경엔 무노조 신화의 삼성그룹이 버티고 있다. 아텍은 98년 구조조정 바람 속에 삼성코닝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분사'로, 3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당연히 삼성코닝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삼성코닝은 아텍의 노조설립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계약해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말이다. 민병덕 씨 등이 해고되기 2달 전인 11월 17일 삼성코닝 인사지원팀장은 '경영정상화 대책 강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아텍엔지니어링 이호성 대표이사 앞으로 보냈다.

공문에서 삼성코닝 측은 '귀사 사원들의 노사갈등으로 인해 당사의 생산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임직원들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 초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무위탁 계약서 17조 1항 6호에 따라 지급과 같은 노사갈등 등으로 인해 당사의 생산차질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짐작케 협박했다. 더불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텍 인사책임자는 삼성코닝의 입력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민병덕 씨는 "회사측에서 공공연히 '법 위에 삼성이 있다. 노조를 만들면 다 죽게 되니 참아달라'며 애원했다"고 이야기한다. 민 씨와 같이 해고됐다가 지난 9일 '회사와 삼성코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제임사'에 합의한 한 노동자는 "삼성코닝만 없었다면 벌써 노조 사무실까지 차렸을 것"이라며 "아텍에 노조가 생기면 분사 300여 개 업체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노조설립을 극력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정책이 계열사 뿐 아니라, 관련 업체 내부 문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텍이었던 것이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구타"

국과수 부검의 확인...가해자 규명 남아

〈속보〉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 황영환(40) 씨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12월 21일자 참조)

2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황 씨의 부검이 실시된 후, 부검 집도의인 이주환 씨는 "사망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주환 씨는 유족들에게 "최근에 맞은 상처가 2-3일이 채 안 지났으며 두부(뒤통수)와 흉복부에 커다란 가격 흔적이 있다"며 "외상, 폭행으로 인해 경막 아래 혈관이 터져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도소측이 일관되게 "황 씨는 간질로 쓰러져 취침중 사망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집도의 이주환 씨는 "간질이나 간경화, 알콜중독이 지

점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의정부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은 '누가 황 씨를 구타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 주체가 교도소측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올바르게 규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관련 교도관 및 황 씨와 함께 수용됐던 재소자 모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의정부교도소측은 중한 질환을 보이는 재소자 처우의 미비와 구타사건을 미연에 예방 및 중단시키지 못한 관리 소홀 및 직무유기의 책임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

사망한 황 씨는 21일 부검 후 화장됐으며, 부검결과는 한달 후인 내년 1월 20일경에 나올 예정이다. [김보영]

2000년 12월 22일(금)

제 17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지학순정의평화상 이부 솔라미 대량학살 진실규명에 기여

불의와 폭력에 항거하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4회 '지학순정의평화상'에 인도네시아의 인권운동가 이부 솔라미(75) 씨가 선정됐다.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위원회'는 20일 "이부 솔라미 씨가 인도네시아 '1965·66 학살진상조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65·66년 수하르토 정권이 저지른 대량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지학순정의평화기금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해 싸우는 '태평양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을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기명문)

◎ 이부 솔라미 씨의 활동내용

솔라미 씨는 1965년·66년 수하르토 군사독재정권이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할 때 학살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던 중 67년 체포되어 재판 없이 9년을 복역하는 등 21년간 구금되었다. 출소 후 그는 1965년과 66년에 자행된 대량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최근 1년간의 활동으로 5만명의 시신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 약하드 대통령은 마침내 수하르토 정부가 당시 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솔라미 씨와 '1965·66 연구소'는 이후에도 이 대량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해 시신발굴, 자료수집, 국민여론 형성 등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조직하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 계획이다.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감금·회유·협박, 술수 총동원

삼성SDI(옛 삼성전관, 대표이사 김순택)엔 이상한 '면담제도'가 존재한다. 회사 인사책임자 또는 직속상사가 노동자를 데리고 전국을 여행하며 진행되는 '면담' 즉, 회사로부터 격리시킨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면담이다. 수원공장의 윤일철 제조2그룹장은 "회사는 통상적으로 사외에서 면담을 실시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면담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20여 일까지 진행되는 이 면담의 요지는 '노조설립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사직하라는 것'.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 간부들의 집요한 요청에 굴복, '노조 포기 각서'를 쓰고 '면담'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해외근무지로 전출되거나, 아니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퇴직하는 수순을 밟는다.

올 11월 징계해고를 당한 김갑수(38·삼성SDI 천안공장) 씨도 지난 10월 9일부터 무려 20여일 간 원치 않았던 '여행'을 다녀왔다(관련기사 11월 22일자). 직속상사와 수원공장의 인사부장 등이 동행한 여행에서 김 씨는 회사측의 요구사항을 끝내 거부했고, 회사로 돌아온 그에게 돌아온 조치는 징계해고였다. 지난해 12월엔 수원공장의 노동자들이 김 씨와 똑같은 방식의 '면담'을 당했다. 그 가운데 한 노동자는 일본에서 귀국하려던 길에 억류돼 8일만에 희망퇴직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면담은 이렇게 점잖은 '격리'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삼성SDI 울산공장 해고자 송수근(38) 씨는 폭력배들이 동원돼 자신을 데려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격리시킨 뒤 집요한 '면담'

삼성SDI와 같이 '면담'으로도 노조설립을 사전봉쇄하지 못하면, '유령노조' 전술이 가동된다. 노동법 상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올 5월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20분 먼저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노조설립의 꿈을 접었다. 11월 삼성코닝의 '분사' 아텍엔지니어링(주)에서도 노조설립신고서를 둘러싼 실랑이 끝에 회사측이 5분 먼저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민주노조'의 건설이 무산되고 말았다.

회사측은 노조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주변 인물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텍엔지니어링에서 노조결성을 추진하다 해고를 당했던 한 노동자는 동료 노동자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결국 회사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자신을 적극 따라주었던 후배 노동자가 '괘씸죄'로 인해 전출되면서 사태에서 쫓겨나게 되자, 그는 후배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합의'를 선택한 것이다. 또 계열사에 근무하는 친인척을 들먹이며 '포기'를 종용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삼성그룹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이처럼 집요하다. 때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노조설립을 무산시켜왔고, 그것이 지금껏 무노조 신화를 유지해 온 '비결'이었다. 거기에 결사의 자유니, 노동3권이니 하는 것들은 낡은 서랍 속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봉쇄 못하면 '유령노조'로 대응

정작 노조결성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묘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한다. 즉,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그 외중에 해고를 당하는 것 자체가 '한뿔' 쟁기기 위한 의도라는 시선이다. 회사측의 회유에 굴복해 '보상금'을 받고 떠난 노동자들에게는 '배신'의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연말 삼성SDI에서 퇴직한 노동자는 수천만원 내지 억단위를 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해고자복지투쟁위원장 김성

환(43) 씨는 "삼성노동자들이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 싸우다 결국엔 돈 받고 해결하고 떠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고개를 틀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삼성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덧붙여 그는 "돈 받고 해결한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동료들 앞에도 나타나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남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돈 받고 물러나도 상처로

콜리야를 상대로 한 다툼의 싸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은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관청이나 사법부 등 공권력 또한 그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삼성맨'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비아냥, "악한 사람에게 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삼성 노동자들에게겐 자연스러운 푸념이다.

김성환 삼성해고투쟁위원장은 "삼성의 문제는 노사갈등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잘라 말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싸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해고자들은 올 2월 9일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삼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무노조 철폐를 계기 위해 험난한 장도를 걷고 있는 것이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민주시민언론상> 수상

인권하루소식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시상하는 제2회 민주시민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12월 22일 오후 6시30분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동교동)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23일(토)
제 17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초

농성수배자들, 갈 곳 잃어

명동성당측, 성탄행사 이유 수배자천막 철거

명동성당에서 장기농성을 벌여왔던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이 엄동설한 속에 내몰릴 처지가 됐다.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풀고 명동성당을 빠져나간 22일, 성당 신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수배자들의 농성천막을 걷어버렸다. 성탄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농성중이던 정치수배자 진재영(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30) 씨와 이동진(99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25) 씨는 이날 자신들을 지지 방문한 범민련 이종린 의장 등 3명과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던 오후 1시경 천막을 철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어 10분 후 들이닥친 30여 명의 신도들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해머 등으로 천막을 부수기 시작했다. 2백19일 동안 수배자들과 함께 해온 천막은 단 10여 분만에 그렇게 형태도 없이 사라졌다.

"천막을 못 치게 하면 우리를 쫓아낸 사제관 앞에서 노숙이라도 할 겁니다." 철거를 당한 진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한겨울 추위에 이미 빨개진 그의 얼굴은 분노로 더욱 붉어졌다. "이것이 노벨평화상 대통령이 있는 나라의 현실인가요?" 진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함께 농성 중이던 이동진 씨도 철거 현장에서 신도들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해 다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고 안정실까지 계셨다. 이 씨는 "성당을 나가면 몇 분 이내 체포될 것이 뻔한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수배자들은 천막 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비롯한 물품들을 성당 들머리 한쪽에

놓아두고 농성을 계속 진행했다. 한편 명동성당 장년분과 위원장 김 정기 씨는 이번 철거가 "지난 10일 열

렸던 상임위원회의 결과"라며 "지금 농성중인 학생들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사회 통념상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명동성당 농성장 철거 소식을 전해들은 범민련 관계자들과 30여 명의 단국대 학생들은 즉시 명동성당에 모여 수배자들이 계속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대섭)

논평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18일부터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시작했던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이 22일 협상 타결로 끝이 났다.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투쟁은 그간 구조조정에서 밀리기만 하던 노동자들이 처음 가시적으로 이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나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투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성과를 남기고 이제 현업에 복귀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한국통신 노조인 계약직 노조는 정규직보다 먼저 12월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4만명에 육박하는 정규직 조합원에 비해 1천2백명이라는 숫자가 초라했기 때문일까? 계약직 노조는 세간의 외면 속에 외로운 투쟁을 끌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규직 노조마저 계약직 노조의 투쟁을 감싸안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계약직 노동자들은 한통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명동성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일부 정규직 노조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냉대하는 바람에 계약직 노동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전략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언제고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오늘 비정규직의 아픔이 내일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비극이었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한 순간에 비정규직을 껴안는 운동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만큼은 당당히 보여주어야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도급제로 전환하려는 마당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파업은 갈수록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도급제에 대한 논의를 '추후 협의사항'으로 미뤄놓은 상황에서 계약직 노조 홀로 이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파업을 쫓 정규직 노조는 이제라도 계약직 노조와 손을 맞잡아야 한다. 나아가 노동운동 전체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값싼 인력의 저수지를 형성할 비정규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노동자의 단결을 생각해야 할 때다.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과의 문제를 고려해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부득이 익명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는 점 양해바랍니다. 오늘로 <기획>은 마무리됩니다. (편집자주)

-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이야기해 달라.
= 87년 이후 노동자들이 계속 노조를 결성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좌절됐다. 노조결성 움직임이 조기에 발견되면 신속하게 관련 노동자들을 격리시킨다. 초기엔 회의실 같은 곳에 불잡아두고 노동자가 승복할 때까지 회사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면담을 진행한다. 90년대초 한 사업장에선 40시간 동안 계속 면담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데리고 다닌다. 회사측에선 물론, 본인 등의 하에 여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설립신고 단계까지 가게되면 관청 앞에서 기다리다가 준비된 설립신고서를 먼저 접수시킨다.

- 무노조정책을 유지해온 비결은?
= 삼성에는 돈과 사람(전담요원)이 있다. 내부감시로 노조설립 움직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은밀히 추적한다.

- 노동자들이 그렇게 버텨내기가 어려운가?
= 삼성의 벽을 뚫기란 어렵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해고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지만, 자신이 격리되고 친인척을 동원해 압력이 행사되면 대부분 '합의서'를 쓰게 되는 것이다.

- 노동자들이 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 위법한 일이지만, 당사자들이 나중에 합의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탄압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 삼성이 무노조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가?
= 무노조전략은 결국 오너경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상속 2세가 창업주의 신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노조를 만들더라도 삼성의 힘 정도면 노조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만도 한데, 막무가내로 노조를 용인하지 않는다. 노조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업주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방점'수준에서 지키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무노조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다. 무노조정책을 깨뜨리기 위해선 결국 경영방식을 바꿔내는 것이 관건이다.

- 결국 무노조 정책은 노동권 유린 아닌가?
= 대통령도 걸핏하면 '법대로'를 외치지만, 삼성에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법이 통하지 않는다. 헌법과 노동법 등에서 노조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개별회사가 노조설립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학생 인권운동, 어깨걸고 나선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

중고등학생들이 학생 인권보장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독자적인 단체를 발족시킨다. 2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이다.

지난 4월부터 두발자유화 운동과 고교등급화 반대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여 온 학생연합은 △청소년 인권보장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 △학교민주화 실현을 주장하며, 주체적이고 대중적인 중·고등학생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

학생연합은 특히 95년 '학생복지회 활동'과 이후 전개된 학생인권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일었던 청소년 인권보장 요구를 조직적인 틀을 통해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연합 출범을 준비해온 육이은(18·여의도고) 군은 "외부의 목소리와 강요에 이끌리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활동은 벌여나가는 것이 지금의 중고등학생 인권운동의 특징"이라며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모임"이라는 점에서 학생연합 출범의 의의를 찾았다. 또한 육이은 군은 학생인권운동이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이것도 인권의 문제'라는 것부터예요. 인권의 내용을 알리는 거죠"라며 학생인권운동의 출발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에 대해 전교조 현원일 학생생활국장은 "중·고등학생이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 있게 나서서 인권과 교육문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원일 국장은 "인권이란 아주 폭넓은 개념인데 혹시 집단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한 염려를 불식하고 인권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린 성숙된 학생인권 운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참교육학부모연대 박인옥 사무처장은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에 학생연합 출범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학생들이 학생연합 활동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학생들이 탄압에 굴하지 말고 학생 인권운동을 활발히 펼칠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연합은 앞으로 '효율적 학생회 운영을 위한 토론회' 및 교칙분석 작업, 인권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진행될 출범식에서는 '학생은 하나의 인격체로, 학교의 주인으로, 교육의 주체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민주화 운동에 나선다'는 내용의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난타공연과 랩 공연,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고근에)

◎ 학생연합: 02-755-8025 www.get.to/students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한통 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1주일 남아

한국통신 7천여 계약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임박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 아래 계약직 노조)은 사측이 해고 시점으로 통보한 12월 31일을 앞두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분할해고와 분사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직 노조는 이번 주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계약직 노조는 사측이 도급회와 외주화를 시작으로 하는 분사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직접적인 고용불안의 위기에 몰리자 지난 12월 13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늘에 가려 회사측과의 협상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민주노총과 이랜드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그리고 대학생 등도 연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쟁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고용불안에 맞서 1백95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은 26일 총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히고, 27일 한국통신 본사에서 열리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

자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사무국장 이윤주)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철폐와 새로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을 떠나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벌여내지 않으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총체적인 비정규직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뜻을 밝혔다. (기명문)

정치수배자들, 임시거처 기거 명동성당 "농성불가" 방침 천명

지난 22일 성탄행사를 이유로 명동성당 신도들에 의해 천막을 강제철거당한 정치 수배자들이 성당 내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철거로 인해 거처를 뺏겼던 정치수배자 진재영(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30)씨와 이동진(99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25)씨는 연행 위협으로 인해 철거 이후에도 명동성당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다.

한편 명동성당측은 26일 김성만 부주임 신부 명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내고 "앞으로 각종 집회 신고를 할 때 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되어있는 경우, 명동성당의 동의서 첨부가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명동성당으로의 천막농성을 위한 자체 반입이나 대형 집회 장소 설치를 미리 봉쇄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병력을 성

2000년 12월 27일(수)

제 17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당 입구에 함시 배치하고, 허가 없는 집회는 원천 봉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치수배자 진재영 씨는 "지난주에는 성탄 행사 때문에 철거를 한다더니 이제는 성당이 모든 천막과 집회를 막으려 한다"며 성당측의 처사를 비판했다. (심대섭)

◎ 바로잡습니다 ◎

지난 12월 22일자 <의정부 제소자 사인은 구타> 기사와 관련해,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집도의 이주한 씨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국과수 부검의 이주한 씨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사망한 황영환 씨(40)의 사인이 '구타가 아닌 급성경막(뇌를 싸고있는 막)하출혈'이라고 밝혔다.

이주한 씨는 "경막하출혈은 가벼운 외력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황 씨가 매일 헛소리를 했다는 점은 금단현상이 아니라 출혈로 인해 피가 고이면서 나타난 증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출혈은 "적어도 사망 2-3일에서 일주일 전에 시작된 것이며 전신의 타박상은 사망 4-5일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교도소 소장은 "연휴기간동안 보강조사를 했지만 구타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황 씨 몸에 나타난 멍자국은 입소 때 신체검사를 하면서 의무과, 보안과, 명도과 직원들도 목격했다"며 "기습부부의 멍은 19일 아침 황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긴 것"이라며 소내 구타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보영)

구독료 납부로 연말을 마무리

문의 : 유해정(741-5363)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희망권

미국과 한반도 사이에 가로놓인 태평양만큼이나 노근리의 진실은 갈라졌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끝없이 틈입한다. 정부당국은 과거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정부공식지정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며 여전히 시비를 건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보는 진실은 이 보다 더 비참하다. 재벌들은 당당하게 부를 찬탈하고 불법적으로 대물림한다. 구조조정이라 외국자본유치라 합병이라 해서 또 애매한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왜 그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어떤 철학자가 내 손가락 하나 다치는 것보다 세상이 망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지금은 손가락이 아니라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생존이다. 모든 삶은 절망적인 자본주의를 더욱 닳아 있다.

이 많은 우울한 사연을 앞에 두고 성탄 추리라도 장만해서 안쓰러운 희망을 한번 꿈꾸자. 그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권리, 희망권. 솔직히 말해 자기기만권이라 해도 좋다. 우울한 시대에 이 마지막 권리를 인권목록에 추가하자.

희망을 느껴 보자.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올해의 인권 뉴스 목록은 희망을 말한다. 권위주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죽어지내야만 했던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간다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매항리폭격장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미국을 상대로 투쟁에 나섰다. 가위눌려 살아왔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고. 시작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의 의리는 끝내준다. 일부선수들이 선수협 문제로 곤경에 처하자 모두 운동권답게 하나로 뭉쳐 자유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상당수 여야의원들이 서명하였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특무상사처럼 움직이는 어처구니없는 정치관에서 여야의 젊은 의원들은 장군처럼 움직였다. 정당지도자들은 그리 살다가도록 내버려두고 내년에는 국민 모두가 장군이 되자.

일전에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매가리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전문성이 아니라 힘의 운동이 그립다 하였다. 각이 제대로 서고 속히 돌파하는 힘의 운동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도 힘의 운동을 한번 느껴보자.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주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단결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운동이고, 승리가 보장된 운동 아니겠는가! 내년에는 자신을 세탁물처럼 초라하게 넣어두지 말자. 내년에는 우리 자신을 움켜잡는 빨래집게같은 권력과 불의의 논리들을 실직상태로 만들자.

그동안 수고해주신 인권이야기 필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필진이 '인권이야기'를 맡아드립니다.

주간인권호름

(2000년 12월 18일 - 12월 26일)

1. 구조조정은 투쟁으로 제동!

회사측의 강제 인력감축에 반발한 한국통신 노동조합 파업 돌입, 1만5천 조합원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 전개 (12/18) ... 인력감축 중단과 구조조정 시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파업 종결 (12/22)

2. 부실은 일자리 뺏는 것으로 해결?

국민·주택은행, '은행합병은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에 맡긴다'는 노정합의 뒤집은 채 일방적으로 합병선언... 양 은행 노동자들 파업 돌입,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 집결 (12/21) ...당국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경찰병력 투입 공언 (12/23)

3. 동생 임종 가로막은 국가보안법

한총련 관련 수배자 장진숙 씨, 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동생을 보러 병원을 찾아가다가 경찰에 연행 (12/16) ...장 씨 연행에 대한 항의 잇따르자 체포취소 조치로 풀려나 동생 장례식에 참가 (12/18) ...장진숙 씨, 경찰서에 자진출두 (12/26)

4. KBO 삼진! 선수협 홈런!

프로야구 선수협 출범 (12/18) ...각 구단, 선수협 대표 선수 방출 결정 (12/20)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 '방출' 결정 철회 촉구 (12/21) ...미가입했던 선수들, 동료 선수 '사형'선고에 분개해 줄줄이 선수협 가입, 전체 선수 가운데 반수 이상이 선수협 가입 (12/24) ...구단, 시즌 중단하겠다고 으름장 (12/26)

5. 의혹 속에 제소자 사망

의정부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던 제소자 황영환 씨, 운몽에 피명 남긴 채 사망 (12/19) ...교도소측 설명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사인에 의혹 제기

6. 개혁입법, 또 무산 위기

민주당 인권특위, 임시국회내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법 제정 포기하기로 (12/26)

7. '쓰레기' 빌미, '생지' 사라지나

명동성당,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과도한 농성 빌미로 정치수배자 천막까지 강제 철거 (12/22)

8. 새만금사업, 밀빠진 독에 물붓기

사회·환경·종교단체 대표, 새만금사업 예산배정 중지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단식농성 (12/19) ...여야의원 28명, 사업목적 불분명하다며 새만금 예산배정 중지 건의 (12/1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28일 (목)

제 17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과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행정구역 경기도 과주시 진동면 초리. 일명 스토리사격장. 이곳은 현재 한국인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지역의 80%는 농지로서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지역이다. 한국전쟁 이후 과주시 장파리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폐허만 남은 땅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주민들은 "장파리 인근 민통선 내에 들어가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늘어 현재의 700여 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당시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민통선 내부는 특수 작목이 허용되지 않고 오직 벼농사만 허용되었으나 사유지로 인정받았고 벼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73년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근거, 스토리사격장 주변 지역의 210만평에 대한 무상 공여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가 이에 응했다.

미군, 한국에 사격장 공여요구

이 중 농지는 80% 가량이다. 그 후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하다가 97년부터 본격적인 매입작업을 시작했다. 2천 평 규모로 스토리사격장을 활용하던 주한 미군은 73년 당시 요구한 215만 평 전체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훈련지역을 넓혔다. 이 과정에서 경작을 하던 주민들의 뜻하지 않은 저항에 부딪히자 "한국정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후 국방부는 "99년까지 단차 표적 지역을 중심으로 96만 평을 매입

및 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으며, 2000년 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110여 만 평을 추가로 매수하려 해왔다. 주한미군의 사격장을 위해 현지 주민 땅을 SOFA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주변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보통 지급

되는 5-6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2만원 정도로 책정됐고, 국방부는 주민들과 1:1 접촉 등 압압리에 매입을 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농사지던 논이 미 육군 재산?

을 추수 무렵 주한미군은 주민들이 경작하는 곳에서 사격훈련을 하면서 논과 벼를 갈아엎었다. 현지에서 농사를 지던 주민들도 이에 맞서 "삶의 터전인 내 땅을 주한미군의 사격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SOFA에 의해 이미 미 육군 땅이 되

(= 2면으로 계속)

과주 스토리사격장 대책위원회 대변인 조봉현 씨 "내 땅이 공여지에 포함되는지도 모른다"

●대책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현재는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비롯해서 청년조직이 결합되어 있으며, 서울의 불평등한소과개정국민행동, 녹색연합 등과 연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매입 작업이 소감상태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자 용산사업단에서 육군본부로 이첩되어 내년부터는 육군본부 차원에서 매입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 주민들은 내 땅이 공여지에 포함이 되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1:1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용산사업단이 제시한 보상금액은 현실적인가?

도로공사만 해도 평당 5-6만원이다. 2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경의선 철도공사 현장 같은 경우 10여 만 원에 이른다. 경의선 철도공사 지역은 지뢰밭도 많고 개간이 안 된 땅이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줬다.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땅을 그토록 헐값에 매입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질적인 보상을 바라는가?

아니다. 스토리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한다. 분단된 현실에서 사격장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스토리사격장을 인근의 비농지지역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주변에 한국군이 쓰고 있는 넓은 사격장이 있다. 지대지 폭격훈련 지역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미군 측에 강력히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없다. 사격장폐쇄 투쟁에 전력을 쏟겠다. 내년 농번기가 되면 주민들과 주한미군의 충돌이 예상된다. 물러서지 않겠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한 목소리

한통 계약직·이랜드·멀티데이터 등 연대투쟁

한국통신 계약직, 이랜드, 멀티데이터 노동조합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이 본격화됐다. 이들 노조의 연대 파업투쟁은 '비정규직 화두'를 노동계에 계속 던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상경한 한국통신 계약직, 이랜드 노조원 등 5백여 명은 27일 오후 1시 분당 한 국통신 본사앞에서 올 연말로 다가온 7천여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에서 계약해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 직권조정결정을 포기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계약해지 후 도급을 줄 경우 단가가 더 비싸다"며 한국통신 구조조정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한통 계약직, 이랜드 등 노동자들은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집회 후 모두 함께 중계동 아울렛 앞에 오후 5시에 도착, '비정규직 차별철폐' 목소리를 드높였다. 27일로 파업 195일 째를 맞는 이랜드노동조합 배재석 위원장은 "실사 올해 안에 파업이 정리되더라도 한통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원들은 중계동 아울렛 연대집회 후 서울대로 이동해 거점을 잡았다. (김보선)

(= 1면에서 이어짐)

였으므로 농사를 중단하라"며 주변의 논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곳은 미 정부의 재산이니 한국인의 출입을 금한다"라는 경고판을 설치했다. 추수를 간신히 마친 주민들은 미군이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해제하고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주한미군의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설치했다.

하지만 농민들이 설치한 시설물과 팻말은 주한미군에 의해 다시 제거됐으며 현재는 "더욱더 철통같은 철조망이 설치됐으며 논로에 바리케이트까지 설치된 상황"이라고 분통을 토한다. 인근 주민들은 "미군이 공여를 요구한 지역은 인근 지역 700여 가구 3,000여 명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 땅이 사격장으로 편입될 경우 주민 전체가 거리로 내몰리고 마을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파리 이장인 정인오 씨는 "이 땅이 스토리사격장으로 편입되면 절대적으로 벼농사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고 호소하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국 땅 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농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계자 함용목 사무관은 "예초 보상금이 평당 8천원 이었지만 경의선 철도공사 관계로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올라 2만원"으로 올랐으며, 주민들의 영농보장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한 하자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기명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작년 8월 30일 독립결정 국민투표 후 동티모르는 반독립 민병대의 공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난민이 되고 사회기반 시설의 80%가 파괴되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으로 민병대의 공격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운영은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아래 유엔과도행정기구)가 총괄하고 있다. 내년 말 건설될 독립국가는 유엔과도행정기구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독립국가건설 과정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

유엔과도행정기구는 동티모르인 참여가 배제된 관료적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더 많은 동티모르인이 행정부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유엔 혹은 다른 국제기구의 직원들은 동티모르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티모르인으로 구성된 임시내각의 각료들마저 '우리는 바나나공화국의 캐리커처에 불과할 뿐'이라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높은 실업률이다. 12월 14일 동티모르감시단(East Timor Observator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80%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자의 68%는 유엔의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임시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유엔과도행정기구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단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국 민간경제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은 2%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개념조차 없으며, 평균일당은 약 3,5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온 인력이 받는 높은 임금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빈곤층과 부유층의 분열이 극심해지는 '이중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동티모르인은 외국인의 유입을 '두 번째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기까지 하다.

인도네시아의 점령기간 동안 민병대 등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탄압에 대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민족저항평의회(CNRT) 구스마오 의장은 대대적인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구스마오는 남아공을 본으로 삼아 민족화합을 꾀하여야 한다며 민병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서티모르에 남아 있는 동티모르 난민의 귀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벨로 주교는 모든 인권 유린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과도행정기구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11명의 민병대를 기소하는 등 처벌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동티모르 지원을 위해 활발할 활동을 펼쳐온 동티모르행 동네트워크(East Timor Action Network)는 "독립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동티모르 소식에 관심을 갖고 주위에 알리기, △기금 모으기, △인도네시아가 민병대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도록 압력 넣기, △난민귀환작업과 경제건설 등에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2월 29일(금)

제 17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인권위법 해결 촉구

인권활동가들이 흑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울산 인권연대 활동가 김석한 씨 등 16명은 2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개혁을 현실팽크처럼 내팽개치고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위해 나서라며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명동성당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경찰측이 일반인들의 명동성당 출입을 막는 가운데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의 노상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은 인권활동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은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현정권에서만 무르익은 적은 없었다"며 "제7조의 완전 삭제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기구가 탄생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인권위를 주무르려 하는 법무부의 야욕을 현정권이 용납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미 제출된 국가인권위법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3년간 개혁의 이름 아래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조정밖에 한 일이 없는 김대중 정부가 인권활동가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남은 것은 정권퇴진 투쟁' 말고

달리 길이 없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농성단 박래군 상권실장은 명동성당의 농성금지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명동성당과 실경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며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인권활동가들은 흑한기에 몸을 던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상권실장은 또 "단식농성 대오 중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 경우

다른 활동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대오를 견결하게 유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부패방지법 공대위 등은 29일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12시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또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도 29일 오전 '개혁입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김기창 사무국장은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오후 2시, 8시에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열어 투쟁의 열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삼성, 신노사문화대상?

무노조신화, 전근대적 노동탄압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I가 정부로부터 '신노사문화대상'을 받는 날, 인권단체들이 전근대적인 노동탄압을 일삼는 삼성을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원(회장 김중서) 등 10개 인권단체와 민주당 한병숙 의원, STOP삼성 운동본부 곽노현 집행위원, 한옥분(삼성 SDI 수원공장 박경열 씨 부인)씨 등이 참가한 가운데 28일 11시 안국동 '노타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저지른 납치, 격리, 해외여류, 강제사직 등의 사례를 밝혔다.

이들은 "노조설립을 추진하다가 회사의 압력에 시달린 끝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못 견뎌 자살용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협박범으로 몰려 구속된 사건"을 지적하며, "이런 삼성SDI에 신노사문화대상을 주는 것은 탈법적 노동권 유린행위에 국가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들은 이외에도 △유령노조를 통해 노동자의 결사권을 봉쇄한 삼성에스원, △계약해지를 구실로 아텍엔지니어링(주)의 노조설립을 막은 삼성코닝의 사례를 들고, 정부에 "삼성그룹의 탈법·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구속돼 있는 박경열 씨의 부인 한옥분 씨는 "납권이 구속될 때 회사에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납권이 그만두는 조건으로 풀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너무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STOP삼성 운동본부 곽노현 집행위원은 "수십년간 진행된 삼성의 무노조 전략에 대해 시민사회와 인권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명백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에 격려를 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1월 5일(금)에 발행합니다.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보·인권위법, 정치권 '책임회피', 인권단체 '폐지·제정'

◇19개 인권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발의(12/13),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에 대통령이 나설 것 촉구(12/14), 인권단체 활동가들 인권현안 처리촉구하며 단식 시작했다가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단식해제(12/18~19), 인권단체 활동가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다시 노상 단식농성 돌입(12/28),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돌입(12/28)

◇인권기구 공대위, 인권위 상임위원 2명 등의 실효성 없는 법안 수용불가 입장 밝혀(11/30),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하기로, 인권단체 의견 반영(12/8)

◇52년 된 국보법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기습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이랜드 노조, 중계 아울렛 전산실 점거투쟁(12/8), 벤처회사(주)밀터데이터, 병역특례노동자 퇴출(12/12),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불법파견근로 은폐(12/13),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12/13), 한통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일주일 남아(12/27)

3. 소파협상은 일단락됐지만...생존권 위협받는 사람들 있다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12/5), 파주 스토리사격장 인근,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12/6), 미군사격장에 농토 '베갯기다'(12/28)

4. 끈질기게 계속되는 '국가'의 개인정보점중 시도

◇지문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12/1),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12/5)

5. 통신질서확립법: 절반의 승리

인터넷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12/6), 통신질서 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12/6)

6. 세만금 사업, 지역 정치인의 잇속 챙기기

◇세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세만금 보류 건의(12/19)

인권시평

-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정주연, 12/5)
-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하종강, 12/12)
- 세밀 잡설 (정재숙, 12/19)
- 희망권 (이재승, 12/27)

기고

-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는 투쟁-최준석/민변 활동가 (12/8)
- 뺨질 불과한 노숙자 대책-박효원/인권운동사랑방사회권위원회 (12/16)

논평

-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12/2)
-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12/16)
-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12/23)

주요판결

-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박시환, 영장실질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 결정 (12/1)

캠페인 / 소송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12/7)
- 사랑방 활동가 4명, '시위봉쇄' 손해소송 (12/11)
- 서울구치소 수감 오민 씨,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손해소송 (12/14)

2000년 인권 10대뉴스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년 인권 10대뉴스 (12/9)

인권일지

1. 인권공대위, 여당 인권특위의 실효성 없는 인권법안 수용불가(11/30)
2. 국보법 제정 52년 이젠 무덤으로!-단식농성·국회 기습진입(12/1)
3. 알몸수색 인권침해 공청회,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 돼"(12/4)
4.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5.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성명(12/1)
6.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가 협상팀에 접근 방해(12/5)
7.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12/6)
8. 통신질서 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12/6)
9. 스토리사격장 인근, 미군 사격에 삶의 터전 잃어 분노하는 농민(12/6)
10.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11.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하기로, 인권단체 의견반영(12/8)
12. 19개 인권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13. 이랜드노조, 중계 아울렛 전산실 점거투쟁(12/8)
14. 벤처회사 (주)멀티데이터, 병역특례노동자 퇴출(12/12)
15. SK (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불법파견근로 은폐(12/13)
16.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발의(12/13)
17.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12/13)
18. 인권사회단체, 국보법폐지·인권위법제정에 대통령이 나서라 촉구(12/14)
19. 인권단체 활동가들 인권현안 처리촉구하며 단식돌입했다가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단식해제(12/18~19)
20. 피명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12/19)
21. 새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12/19)
22. 한총련 수배자 장진숙 씨, 동생 임종 못해-국보법에 가로막힌 남편의 마지막 인사(12/20)
23. 한통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일주일 남아(12/27)
24.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돌입(12/28)
25. 삼성, 신노사문화대상? (12/28)

기타

- 알몸수색 인권침해 공청회,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 돼"(12/4)
- 경제5단체 시국선언, '자본가의 집단이기주의'(12/6)
- 한국피자릿(주)의 '경업금지 규정',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12/13)
-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12/15)
- "서준식 무죄", 국내의 성명(12/15) / 서 대표 공판 1월 16일로 연기(12/19)
- 한국통신 조 파업, 명동성당에 '구조조정 반대' 합성(12/18)
- 새만금 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12/19)
- 지학순 정의평화상, 이부 솔라미(12/22)
- 명동성당측, 성탄행사 이유로 수배자 천막 철거(12/22)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12/23)
- 피명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12/19)
-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구타'(12/21)
- 바로잡습니다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금성경막(너를 싸고 있는 막) 하출혈", "출혈은 사망 2~3일전, 전신의 타박상은 사망 4~5일전에 발생한 것"(12/27)

기획

-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①'땀'에 걸린 노동자 (12/20)
- ②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12/21)
- ③격리·감금·희유·협박, 은갖술수 총동원 (12/22)
- ④"무노조 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12/23)

국제기사

-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12/2)
-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12/28)

인터뷰

- "이대로 가면 인권·국보법실종"-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12/13)
- "내 땅이 공여지에 포함됐는지도 모른다"-과주 스토리사격장 대책위 조봉현 씨 (12/18)

만화사랑방

- 경제 5단체 '시국선언' 심보 (12/8)
- 노벨평화상 메달, 개입되지 않도록... (12/15)
- 삼성의 죽은 병철이 산 노동자를 다 잡는다 (12/22)
- 2000년 인권 10대뉴스 배우기 (12/22)

현장

- 단식농성 중국동포들, "절망끝에 벌이는 필사의 투쟁" (12/2)
-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부터 거두자 (12/15)

